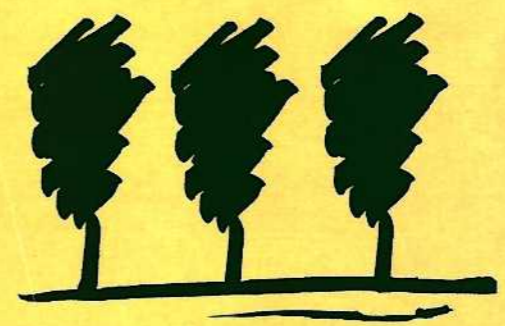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R1.1.7

# 인권하루소식

합본Ⅶ호  
(96년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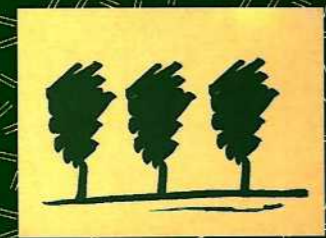
민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 (17권후 96) 호파출판

인권정보자료실  
R1.1.7

민권운동사랑방



민권운동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96년 9월

(제718호 - 제734호)

**<이달의 주제-과거형산>**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④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과  
 애도의 표시  
 -테오 반 보벤-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영화속의 인권, 인권속의 영화”

###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초 개최

한국 최초의 ‘인권영화제’가 11월 초에 개최된다.

이번 ‘제1회 인권영화제’는 본래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의 팍시밀리 신문인 <인권하루소식> 창간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서 계획되었다. 그러나 많은 영화인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이 기획에 관심을 나타내어 참여의 뜻을 밝혀움에 따라 인권운동사랑방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전문 영화잡지인 <씨네21> <키노> 등과 함께 공동주관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달 8일 이상영(충북대 법대, 사랑방 운영위원) 교수, 김혜준(한국영화연구소 기획실장) 씨, 김기중 변호사 등 11명의 집행위원들이 모인 1차 회의에서 사실상의 집행인 ‘사전심의’를 거부하기로 결정

해, 이후 정부와 공안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어려운 조건을 각오하고 심의 거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관계자는 “다른 단체도 아닌 인권단체가 어떻게 검열을 해달라고 작품을 갖다 바칠 수가 있겠느냐? 그것도 막대한 ‘심사비’를 내면서...”라며 잘라 말하면서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국제 수준으로 성장해 나가는 험난한 과정에서 이 인권영화제가 뭔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준식 사랑방 대표는 이번 인권영화제의 의의에 대해 “인권영화제는 우리사회의 낙후된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오락영화만이 ‘영화’라고 인식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의 영화

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

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회 인권영화제’에는 ‘인권’을 주제로 한 약 20여 편의 영화가 모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상영된다. 영화제 기간에는 영화 상영과 더불어 부대행사로서 표현의 자유와 검열제도에 관한 심포지움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 인권영화제는 일반 대중에게 전면 무료로 공개된다고 한다. 행사에 드는 비용은 광범위한 단체와 개인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제1회 인권영화제’를 주최하는 조직위원회는 지금 한창 구성되고 있는 중이어서 그 전모는 아직 드러나 있지 않지만 현재 이장호(영화감독), 김승훈(한국인권단체협의회 대표) 신부 등이 조직위원회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는 다음주 경부터 단체 및 개인의 후원을 본격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권력으로 가로막고, 민생문제는 무관심하며, 오로지 정권안위에 부심하는 정부야말로 문명정부라 칭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 노조와해 맞서 싸울 터 현중노조간부 단식농성

지난 4월부터 진행되었던 현대중공업(사장 김정국, 현중)의 단체교섭이 파행을 겪더니 급기야 노조간부들의 단식농성으로 치달고 있다.

2일 현중노조(위원장 김임식)는 기자회견을 통해 “단체교섭을 오랜동안 끌게 된 원인은 회사측의 노조와해 정책 때문”이라며, “현 노조 집행부는 최소한의 노조를 지켜기 위해 무기한 단식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에 의하면 4개월 동안 40회 이상의 협상중 회사측 대표들은 단 한번도 성실한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고 한다. 지난 12차 단체협상에서는 노조대표들에게 “그렇게 좋으면 ‘삼성’으로 직장을 옮겨라”거나 “빨간 머리띠에 조합비를 쓰지 말라”는 등 노조대표 비하 발언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6월에는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가 회사측의 대의원들의 회유로 무산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문대성(노조 편집실장) 씨는 “회사측이 노조간부들의 단식농성 결정 이후 제협상을 제의해 왔지만 2일 오후 5시가 넘도록 회사측 대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회사측의 교섭 태도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했다.

### <인권하루소식>이

### 3주년(지령 제722호)을 맞습니다.

그동안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 7일로 3주년을 맞아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 원고지 3매 내외, 목요일(5일)까지

편집방향, 기사내용, 개선사항 등 <인권하루소식>에 바라는 것을 적어 보내주시요.

### “남녀차별 판결, 다른 곳에도 여파” 교환원 ‘정년 차별인정’에 항의 집회

지난달 27일 대법원 특별 2부(김형선 대법관)가 한국통신 교환원에게만 정년 53세를 적용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 등은 2일 대법원 맞은편 명도빌딩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등)과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규탄대회에는 7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정장자(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비교대상 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계열화 사과의 정년 차이를 합리화한 판결로 인해 국내의 전 여성고용사업장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세계 규정에 걸려 정년퇴직하게 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이에 한국통신측은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영희 씨는 “같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리하고 완화판결등 기업측의 손을 들어주는 몰지각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 씨는 여성운동단체들과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해 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다.

### 폭행 지시·방조 혐의 해고자, 김우중회장 고소

대우정밀해고복직실천협의회(의장 박종석) 소속 해고자 현종복 씨는 지난달 30일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을 집단폭행 지시·방조혐의로, 김윤경(대우정밀 노동과정) 씨의 폭행가담자를 폭행혐의로 검찰청에 고소했다.

현 씨는 지난 8월 26일 비자금사건 재발총수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서울지법 주차장 부근에서 김 회장에게 해고자복지협의서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김윤경 씨등 15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3주 진단을 입고 현재 사당의 원에 입원중이다.

### ○ 주요 공판 안내 ○

- 9월3일(화)  
임현준의 2, 집시법, 오후2시, 단독1부, 526호 속행  
원호호의 1, 국보법, 오전10시, 합의6부, 424호 속행
- 9월6일(금)  
하광풍,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속행  
명원창 국보법, 오후4시, 단독5부, 519호 속행  
-이상 서울형사지법

### 주간/인/권/호/름 (96년8월26일부터 9월1일까지)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전두환 씨에게 반란수괴죄 등을 적용해 사형, 노태우 씨에게 징역22년6월 선고

<27일>  
화가 홍성담씨 신원조치를 빌미로 여권발급되지 않아 국제예술행사에 불참하게 된 책임을 물어 국가에 손해배상/박익룡 경찰청장, 국회내무위에서 학생들의 과격 시위막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강화 방안추진하겠다고/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 경찰에 의해 살인범으로 몰려 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한 김기용(32) 씨가 국가상대로 낸 손해 소송에서 2억4천5백만원 지급 판결/대법원 특별2부, 전화교환원 김영희(57)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대구시 인사위원회, 동일대추전 행사에 참가해 연행후 풀려난 공무원 2명 해임

<28일>  
대법원 민사3부, 한국과학기술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리해고된 이아무개 씨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경찰청, 전국 23개 대학 압수수색해 학생회관등에 있던 학생 3백47명 강제연행/경찰청 고무중격탄, 전자총 등 9종의 시위진압 장비도입/스톡홀름 ‘상업·성적 어린이 학대 대책마련 위한 세계회의’에 참가한 1백26개국 정부대표 및 관련단체들, 성적학대 근절위한 선언문·행동계획 채택

<29일>  
경제5단체, 반국가적·폭력적인 학생시위와 관련된 자체홍보시 신중 기하기로/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영화제작자등록 의무와 관련한 영화법 제4조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영화 <파업전야> 감독 이동배 씨가 낸 헌법소원 기각/경찰청, 전국 23개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 벌여 학생2백58명 연행/홍콩 아시아학생 연합 등 50여 명, 인도네시아와 한국영사관 앞에서 두 나라 정부의 학생운동 탄압에 항의시위

<30일>  
정부와 신한국당, 방위산업체 등에서 특례보증역으로 근무하다 노동쟁의로 해고된 해고노동자 산입기능요원으로 재편입시켜 병역을 면제해 주기로/북한직접사죄, 대한적십자사측에 뇌출혈로 치료받고 있는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씨의 송환요구

<9월1일>  
한총련 사태와 관련한 연행학생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기록행위 잇따르고 있다고 민변 소속 변호사를 주장/경기도교육청, 임용대기자 차정원(33) 씨 보안심사 결과 남편이 국보법으로 재소중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로 판정/병원노련, 태능성심병원이 노조결성에 폐업공고뒤 취업예상 병원에 ‘문제노조원 명단’을 보냈다고 밝혀

<해설>  
한총련 뿌리뽑기 작업이 연일 기상천외한 온갖 방법들을 토해내고 있다. 한총련 통신방 폐쇄, 2천명이 넘는 공무원·기업체 직원들의 연세대 현지답사, 시위진압으로 고무중탄·전자총등 최신헌비 도입에 이어, 경제5단체에서는 공개적으로 시위학생들 채용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엄포까지 하고 나섰다. 처벌의 범위를 법적 처벌은 물론, 졸업후 사회진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공권력의 행사는 인권보호와 존중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편집자주> 제48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루이 주아네 씨의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총5부로 구성된 ‘일련의 원칙’들은 희생자의 기본권인 알 권리,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 원상회복에 관한 권리 등을 골격으로 삼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주아네 씨의 ‘일련의 원칙’을 두 차례에 나누어 게재하기로 한다

### <알 권리>

#### A. 일반 원칙들

1. 양도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권리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진실에 대한 권리를 충분하고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미래에 그런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이다.

2. 기억할 의무  
억압의 역사에 대한 민중들의 지식은 그들 유산의 일부로서, 기억할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

3. 희생자의 알권리  
일체의 법적 소송 절차와 상관없이, 희생자의 가족들은 자신의 친척의 운명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를 보유한다. 강요된 실종·어린이 유괴의 경우, 이 권리는 불가침이다.

4. 알권리에 대한 실천의 보장  
알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국가는 조사법적 조사위원회 설치, 관련기간의 기록의 보존 및 공개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B. 조사법적 조사위원회

5. 조사법적 조사위원회의 역할  
조사위원회는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사실을 입증할 임무를 갖는다. 희생자, 가족 및 인권활동가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관련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정되었던 진상의 규명을 위해 활동한다.

8. 관련자의 보호

(1) 정보는 적어도 두 개의 출처에서 획득되어야 한다.

(2) 관련된 사람은 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9. 목격자와 희생자의 보호  
목격자와 희생자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10. 위원회의 운영  
(1) 투명한 자금조성  
(2)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

12. 위원회 보고서의 공식  
위원회의 위임 조건에는 조사에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기한다. 다른 한편으로 최종보고서는 언제나 공개되어야 한다. 위원들은 비방이나 보고서 내용에 관련된 소송절차에 의해 처벌되지 않아야 한다.

C. 관련 기간의 기록 보존과 공개  
13. 기록 보존을 위한 조치들  
기록의 제거, 파괴, 은닉 또는 변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기간이 종결될 때까지 기술적 조치들을 취한다. 기록의 착복, 특히 그 댓가를 협의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형을 받는다.

14. 조사목적에 관한 행정 조치들  
저장된 기록의 조사목록을 작성하고 현존하는 조사목록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에 우선권을 둔다.

18. 기록에 관한 특별 조치들  
(2) 누구든지 관련 기간 동안에 저장된 기록에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지의 여부를 알 권리와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반박권을 행사함으로써 관련 정보의 효력에 이의 신청할 권리가 있다.

(3) 정보 기관에 있는 자료가 몇 가지 다른 신뢰할만한 자료에 의해 확증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유죄의 증거를 구성하지 않는다.

25. 국제법원의 관할권  
효율적인 사법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상설 국제형사법원이 모든 회원 당사국을 구속하는 동등한 관할권을 갖는다.

26. 국제법원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 규정  
국제법원에 적용가능한 절차 규정들은 세계인권선언 제8조(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에서 제11조(무죄추정의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9조(신체의 자유), 제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제15조(소급처벌의 금지)의 조항들을 따른다.

###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

#### A. 일반 원칙

19.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의 목적  
화해의 전제조건은 용서인데, 그것은 희생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고, 가

해자가 참회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하는 사적 행위이다. 어떤 판결을 넘어서, 그것은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의 목적의 핵심이다.

20. 사법에 관한 국가의 의무들  
불처벌은 침해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특히 사법 영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그들을 기소하고, 심리하며, 희생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해야 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기소 결정이 일차적으로 국가의 권한 내에 있으나, 보충절차 규정들은 어떤 희생자들이 스스로 소송절차를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 B. 국내의, 국제법원간의 관할권의 분배

21. 국내 법원의 관할권  
국내 법원이 입헌국가의 사법적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지위에 있지 못하거나 물리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사정을 고려하여 외국 법원의 2차적인 관할권 또는 국제법원의 동등한 관할권이 허용될 수 있다.

22. 외국 법원의 관할권  
외국 법원의 2차적 관할권은 시행조약에서 설명된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조항 또는 국제법상의 중대 범죄에 관한 영역의 관할권 규정을 설정한 국내법 조항에 의해서 행사된다.

25. 국제법원의 관할권  
효율적인 사법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상설 국제형사법원이 모든 회원 당사국을 구속하는 동등한 관할권을 갖는다.

26. 국제법원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 규정  
국제법원에 적용가능한 절차 규정들은 세계인권선언 제8조(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에서 제11조(무죄추정의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9조(신체의 자유), 제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제15조(소급처벌의 금지)의 조항들을 따른다.

번역: 이창수  
(진보정치연합 국제부장)

<이달의 주제-과거형산>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④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과  
애도의 표시  
-테오 반 보벤-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이주계획 없이 서초구청 철거명령 서초구 반포2동 53세대 생존권 위협

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즐비한 아파트 단지만이 연상되는 이곳에서도 삶의 터전을 뺏기지 않으려는 주민들의 생존권 싸움이 힘겹게 벌어지고 있다.

53세대 주민들이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30여 년간 이곳에 뿌리박고 살아왔지만, 지난 7월 서초구청은 이곳 3만여 평의 땅이 사유지라며 철거명령을 내린 이후, 2일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이는 최종통보를 해 온 상황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물려줄 수 없는 이유는 당연하다. 이곳 반포2동 지역에는 33세대의 가옥과 살림이 들어 있을 뿐 아니라, 야채밭, 화원, 목공소, 고물상 등 35세대의 일터가 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릴 경우, 지역 주민들은 집 뿐만

이 아니라, 생계수단마저 박탈당하는 것이다. 야쿠르트 행상을 하고 있는 황순자(42) 씨는 "어떤 철거지역에서도 협상과 보상은 이뤄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곳에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만 하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반포2동 주민들이 처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역에 입주할 때만해도 사유지였던 땅이 사유지로 둔갑하면서, 이들에게 난데없는 변상금 통지서가 날라온 것이다. 주민들이 사유지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변상금, 한 마디로 불법사용료 징수 통보가 날라오고 나서였다.

90년 겨울부터 소급해서 산정된 변상금이 이제 많게는 1인당 1억 원에까지 이르러 있다. 주민의 80%에 해

당하는 영세민들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명수(53) 씨는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 시청, 각 정당마다 모두 다녀 봤지만, 해결책이 없었다. 곧 물려올 전경들을 어떻게 막아낼지 자신없지만, 이주계획을 세워주고 변상금을 탕감해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곳을 지킬 수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싸울 의지를 표시했다.

### "또다른 조직사건" 부산외대 총학간부 11명 연행

2일 새벽 0시부터 6시 사이에 부산외대 재학생과 졸업생 9인이 긴급구속장을 제시한 부산시경 대공분실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경찰에 의해 부산외대 재학생 군입대한 현역군인 2명도 기무사로 연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병근(외교학과 90), 문혜영(독일어과 92), 이은경(불어과 93), 류미선(남아시아학과 92) 씨는 새벽 5시경 각각 자택에서 강제연행되었으며 가택수색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외대 총학생회에서는 이번 연행이 지난달 29일 있었던 현 총학생회장 김현(독일어과 92) 씨의 구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의 공안몰이 분위기를 틈타 경찰이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등과 유사한 조직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졸업생이나 활동을 중단한 사람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있다는 것이 학생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김 동씨는 졸업 후 일터라는 부산지역 사회단체에서 활동 중이었고, 윤재호(야간 독일어과 88), 문혜영 씨는 취업준비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총학생회 부회장 원태식(남아시아학과 90) 씨 등 9명을 구금조사하고 있는 부산시경 대공분실 측은 가족들의 면회신청 3시간만인 2일 오후 5시경에야 수사관 입회하에 면회를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혐의내용 파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가족들에 의하면 수사상황 진전에 따라서 2차 연행이 뒤따를 것이라고 들었다고 한다.

사태발생 이후 부산외대 총학생회는 아침-저녁 하루 2차례의 교내선전전은 물론 컴퓨터통신, 대자보, 유인물 등을 통해 다른 학교와 민선 등 부산지역 사회단체들의 지원과 연대를 위한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구속자 명단: 부산시경-원태식/이병근/이은경/윤재호/문혜영/박영준(야간 독일어과 89)/최원호(야간 컴퓨터공학과 89)/류미선/김 동(부경총련 조동위원장, 중국어과 87). 기무사-장철호(야간 독일어과 92)/김희영(야간국문학과 93).

<인권하루소식>이  
3주년(지령 제722호)을 맞습니다.  
그동안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 7일로 3주년을 맞아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원고지 3매 내외, 목요일(5일)까지  
편집방향, 기사내용, 개선사항 등 <인권하루소식>에  
바라는 것을 적어 보내주시시오.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C. 불처벌과 싸우는 행동으로  
면책되는 한정적 조치들

28. 공소시효에 관한 제한  
형사범죄에 반하는 효과적인 구제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의 공소시효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국제법상의 중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9. 사면에 관한 제한  
(a) 희생자들의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거나 공정한 결정을 취할 수 없는 한 국제법상 중대 범죄의 가해자와 총체적이고 조직적인 침해의 가해자는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34. 판사의 중신성 원칙에 대한 제한  
판사의 독립을 위한 기본적인 보장으로써 중신성의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역으로, 행정부가 임명한 판사나 관련 기간 동안 행정 권력에 충실히 행동하여 사법권을 얻은 자는 양립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에 의해 그 직위가 박탈될 수 있다.

35. 군사 법원의 관할에 대한 제한  
군사 법원이 아직 폐쇄되지 않은 국가 내에서, 군사 법원을 피하기 위해서, 그 법원의 관할권은 군 인사들 속에서 자행된 범죄만으로 제한된다.

### V. 원상회복에 관한 권리

A. 일반 원칙

36. 원상회복을 하려는 책무에서  
야기되는 권리와 의무

어떤 인권침해는 희생자 쪽에는 원상회복의 권리와 국가 측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 의무에는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를 보장할 수 있게 할 책무가 포함된다.

38. 원상회복 절차

모든 희생자는 원칙 29에서 수립된 규정에 대한 제한에 의해서 다루어진 형사, 민사, 행정 혹은 자격박탈 소송 절차들의 형태로 쉽게 가능하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구제에 접근되어야 한다. 이 절차로 그들은 협박과 보복을 받지 않는다. 원상회복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적용가능한 국제 절차에의 접근을 포함한다.

40. 원상회복에 관한 권리의 범위  
원상회복의 권리에는 희생자가 겪은 일체의 위법행위를 담고 있다. 거기에는 재발방지 보장과 이행의무의 조치들과 같은 일반적인 원상회복 뿐만 아니라, 반환·보상·갱생의 권리와 관련된 개별 조치들을 담는다.

B. 원상회복에 관한 개별 조치들

41. 반환의 조치들  
희생자에게 관련 기간 이전에 누렸던 상황을 재확립시키는 목적인 반환은 특히 개인적 자유와 시민·가족생활·취업·고용·재산에 관한 권리 행사의 복구를 의미한다.

42. 보상의 조치들  
보상은 피해액 전체에 대해 금전적으로 평가한 가치와 동일하다.

(a) 육체적 고통, 수난 및 정신적인 충격을 포함하는 정신적 상처  
(b) 교육적 기회를 포함하는 기회상실  
(c) 물질적 손해와 소득상의 손실을 포함하는 수입의 손실  
(d) 명예 또는 존엄성에 대한 도발

43. 갱생의 조치들  
갱생에 대한 조치들은 사회·법적·기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의료·정신 혹은 정신병리학적 치료비를 포함한다.

C. 원상회복의 일반 조치들

44. 의무이행의 조치들

(a) 국가의 책임성 공개적 인정  
(b) 희생자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공식적인 선언  
(c) 희생자에 대한 정례적인 추도  
(d) 관련 기간 동안 자행된 예외적으로 중대한 침해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역사교과서와 인권훈련 편람에 포함.

D. 재발방지의 보장

45. 재발방지의 보장으로 영향을 받는 영역

(a) 반관(半官)적인 군사그룹의 해산  
(b) 침해를 진파시키는 비상 조항, 입법 또는 기타의 폐지 조치  
(c) 관련 기간 동안에 책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관리와 관련된 행정 및 기타 조치

47. 비상 입법의 폐지  
관련 기간 동안에 채택 또는 수립된 일체의 비상 입법과 법원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한 폐지 또는 폐쇄되어야만 한다.

인신보호영장은 개인의 기본권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48. 국가 공무원에 관한 행정 및 기타의 조치들

이 조치들은 예방적이며 비용보조 성격이 있다. 따라서 시행절차가 입법 또는 국민적 대화과정에서 결과된 계약적 협의에 의해서 또는 평화협정에 의해서 규정되었다면 행정결정에 수행될 수 있다.

이 조치들의 의도는 관련 기간의 종결로 발의된 평화/민주주의를 복구하거나 그것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적 장애를 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침해로 기소되고 심리를 받는 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원칙 19에서 규정한 처벌적이고 사법적인 조치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49. 행정 조치들의 시행  
각각 복무중인 관리의 상황을 사정(査定)함에 있어, 다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 부패에 연루되지 않을 것  
(b) 전문적 능력  
(c) 평화/민주화 특히 헌법적 보장과 인권의 준수에 관한 과정을 증진시키는 기술

50. 국가 공무원에 대항할 수 있는 조치들의 본질

자신의 지위에서 추인된 경우를 제외하면 관련 공무원은  
(a) 지위의 임명이 보류될 수 있으며  
(b) 전속될 수 있으며  
(c) 조기 퇴직을 제안할 수 있으며  
(d) 파면될 수 있다.

판사의 경우에는 원칙 35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결정을 내린다.

번역: 이창수  
(진보정치연합 국제부장)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희생자들에게 대한 배상③  
책임자 처벌  
-테오 반 보벤-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한총련 통일노선, 민주사회 견해의 하나” 시국 토론회, 창구단일화 원칙 반박

한총련 탄압을 시점으로 보수로의 회귀가 맹렬히 진행되는 가운데 연세대 사태를 조망하고 민간통일운동의 올바른 역할과 정부의 태도 등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7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통일운동보장과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국대토론회」를 열었다.

심 사항 중 하나는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상곤(민교협 공동의장) 교수는 “한총련의 통일운동 노선은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견해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총련 사태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한총련의 이적성·폭력성 여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더불어 국민대중의 통일논의에의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민주·반헌법적 ‘창구단일화 원칙’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편을 기도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민주세력의 대응과제로 △현 민주개혁의 당면과제인 노사개혁과 교육개혁을 중심으로한 민·민운동의 진전 △보수세력의 거대한 진지인 ‘언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론 감시·감독 △학문의 자유

보장과 대학자치의 강화 △사회단체들의 연대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

민변, 경찰청장 고발 방침 이기욱(전국연합 인권위원장) 변호사는 “한총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친북시하는 정부와 언론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며 “한총련 해산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변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총기사용과 강경진압을 주장한 박일룡 경찰청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제 비정부단체에 중재요청 계획”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 씨 송환돼야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70) 씨의 송환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일 대한적십자사가 김 씨 송환에 거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3일 북한측이 김 씨의 치료를 위해 의료진과 김 씨의 두 딸을 남쪽에 보내겠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통일원측은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적십자사는 2일 “김 씨의 건강이 회복됐고, 이산가족 재회문제 등 북한측의 상용하는 조치가 있어 야만 논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송환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산가족사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인모 노인을 보냈지만 북한측에서는 반대급부가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통일원 관계자도 “김 씨는 빨치산 활동 중 불합리한 경우로서 전쟁포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김 씨의 송환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광주 당제원에서 김인서 씨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김영태(66) 씨는 “일 가친척도 없고 생계마저 막연한 김인서 씨에게 누군가의 시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한적십자사가 김인서 씨의 건강이 회복됐다고 말한 것은 김 씨를 송환하지 않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인서 씨 등 미전향 장기수의 복송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회인권센터 신승민 목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볼 때 김인서 씨는 당연히 송환되어야 한다”며, “명망있는 국제적 비정부단체(NGO)를 통해 남북간의 중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인권하루소식>이 3주년(지령 제722호)을 맞습니다.

그동안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 7일로 3주년을 맞아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원고지 3매 내외, 목요일(5일)까지

편집방향, 기사내용, 개신사함 등 <인권하루소식>에 바라는 것을 적어 보내주시요.

##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인권유린 방조”라며 반발

최근 계속되는 공안기류에 편승해 이번엔 안기부 권한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93년 여야합의로 개정된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문민정부 초기 법 개정의 취지와 의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회 각계의 반발과 저항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3년 개정된 안기부법은 안기부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직권남용 등의 정지를 제거한다는 취지에 따라 정지남용죄(18조)와

직권남용죄(19조)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안기부법의 직권남용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안기부에 초월적인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며,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구금과 인권유린을 방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비난하고, “만약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커다란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연합의 황인성 집행위원장도 “인권탄압에 활용되어온 안기부 권한을 다시 강화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이야기한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신한국당이 구체적인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이에 적극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 인터뷰: 통신연대 김영식 대표 “사용자 자체정화기능을 믿어야”

<편집자주>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통신연대)의 대표 김영식(한국과학기술청년회) 씨를 만나 한총련 사태를 비롯해 통신공간을 대하는 정부당국의 문제점과 이후 대안을 들어보았다.

- 통신연대 구성 동기는 =정부와 통신회사의 검열체도가 존재하는 한 통신상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확보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구성됐다.
- 통신문화가 발전된 선진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미국의 경우 파시즘이나 KKK단 조차도 통신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 정부측이 한총련의 통신선을 회수한 것에 대한 생각은 =한총련 사태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을 차단하고, 한총련 관계자들만 볼 수 있는 CUG를 폐쇄한 것은 어떤 나라에도 볼 수 없는 행동이다. 현 사태는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 통신상의 인권침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1년에 한번 검열등에 대한 백서를 발간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것이다. 특히 이 백서는 외국의 인권단체 등에 배포할 생각이다.
- 올바른 통신 문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규제로 나가면 안된다. 성문제에 대해 규제를 통해 얻은 것은 더욱 음성적인 성문제이다. 정부는 통신 사용자들의 자체정화기능을 믿어야 한다.

## “문민정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 복역 이유로 교사임용 탈락

“귀하는 신규교사 임용순위 631번으로 96년 9월 1일자 임용순위에 달하였으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회보서 내용에 귀하를 교원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견되어...부득이 임용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장의 공문서가 지난 3년간 이를 악물고 눈물 속에 버티온 희망을, 한 가정의 삶에 대한 자그만 계획을 여지없이 날려버린 순간이다.

지난 8월 26일, 초등학교 교사 임용대기자 차정원(33) 씨는 남편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복역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원임용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차 씨는 “남편의 문제 때문에 임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리고서도 본인에게 변론할 기회조차 주지않은 채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말도 안된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행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니 할 수 없다’는 대답에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차 씨가 이 순간을 위해 지난 3년간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대판 연좌제’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를 새삼 느낄 수 있다.

차 씨의 남편 장창호(38) 씨는 92년 9월 이른바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국보법 상 간첩혐의 등으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현재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차 씨와 남편 사이에는 다섯살된 딸 명지가 있는데, 남편은 세상에 태어난지 3일이 된 명지를 제대로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안기부로 연행되었다. 20여일 만에 몸조리를 마치고 그녀는 딸 아이를 안고, 남편 면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이제 5년째로 접어들었다.

차 씨는 93년 서울교대 복적이 이뤄졌다. 그때부터 부모님과 선배,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꾸려가며, 그녀의 학교생활은 시작되었다.

“1교시부터 수업이 있는 날이면 유모차에 명지를 태워 오전 8시에 탁아소를 가요. 그리고 나서 허겁지겁 학교로 뛰어가 수업을 받으려면 첫시간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레포트에 시험, 그리고 체육수업에 피아노 연습까지 하고나면 허리가 무척 아팠어요.”

“수업이 오후 5시까지 있는 날, 집에 오면 오후 7시쯤 되죠. 기저귀와 찻병을 소독하고, 밥을 해먹고 나면 피곤해서 아이랑 제대로 한 번 놀아주지 못했죠.”

명지는 대부분 혼자 놀아서인지, 한 때 다른 아이에 비해 말이 늦어 가슴아프기도 했다고 한다. 더욱이 졸업한 해 앞둔 94년 차 씨는 알레르기 B염을 앓았고, 시험이 끝난 뒤에는 한달동안 한의원을 다닐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한다.

“교사임용 하나 믿고 3년 간 어떻게 보내왔는데... 이 희망이 없었다면 지난 시간동안 다른 일을 했을 것”이라며 남편이 잡혀갔을 때보다 더 억울함과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차 씨는 현재 이석태 변호사의 도움으로 교육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도 면회를 가면 아비를 낫설어 하는 명지를 보면서, 휴일이면 가족끼리 놀러가는 것이 부럽다는 그녀는 “그래도 명지가 건강하고, 명랑하게 자라 이제는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달의 주제-과거형산>  
희생자들에게 대한 배상③  
책임자 처벌  
-테오 반 보벤-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노동법 개정 통한 민주주의 확대·심화 요구 노사관계법 개정방향 공동선언문 발표

문민정부 수립 직후 군사 독재의 잔재 청산 차원에서 이미 완성되었어야 할 노동 관계법이 뒤늦게나마 진행되고 있으나 '개혁이 아닌 개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5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한국여성단체연합회(공동대표 한명숙) 등 10개의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노개위)의 최종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노개위 활동을 점검하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최영도(민변 회장) 변호사는 "노개위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 각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견해를 마치 대다수 시민들의 일반적인 견해인

양 발표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은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노동단체법 개정은 노사자치주의 확립을 통한 민주주의 심화라는 목표에 입각하여 수행해야 하며 △노동의 유연화를 명분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고 △분쟁조정 기구의 민주적 개편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월 6일 공동 정책워크숍을 계기로 노동법 개정, 환경, 경제, 여성 등 제반 사회 개혁과 사회복지 실현에 관한 공동 활동을 벌여 왔으며, 8월 28일에는 '공익적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 개혁'이라는 공동토론회를 열어 단

체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등 올바른 노동법개정을 위해 활동해 왔다.

### 공개조직 활동 7명 연행 서울대 애국청년선봉대

지난 2일 부산외국어대 총학생회 간부 11명이 연행된 데 이어 또다시 5일 새벽 6시 서울대학교 「애국청년선봉대」 소속 학생들 7명이 연행되었다.

이들은 한총련 사태와 무관한 학생들로, 공안당국이 벌인 학생운동 뿌리뽑기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서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7월부터 애국청년선봉대와 관련한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며 "이날 연행도 새벽 6시 일제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사전에 미행과 주거파악이 없이는 힘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국청년선봉대는 공개조직이며,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요사안에 대한 의견 발표나 공개 토론회 등을 주 활동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시경 보안과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 내용은 가족들의 면회뒤에나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연행자 명단:  
홍성규(도시공학 92)/김영오(기계설계 93)/임성규(농경제 92)/송중호(금속공학 92)/김문경(국민윤리교육 92)/김숙현(약학 92)/변선보(공법학 93).

### 한총련 사태 노동운동계로 확산 AI, 성명서 발표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 20일 한총련 사태에 관련한 긴급호소문을 보내는 데 이어, 3일에는 성명을 발표해 한총련 사태에서 나타난 체포와 조사과정의 부당한 처우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AI측은 앞으로 더 많은 체포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부당한 처우가 재연될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AI측은 한총련에 소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연행, 구속한 것에 대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남한 당국자들이 좌익세력이 노동자 집단에 침투해 있다고 언급한 점으로 보아 현재의 좌익적결현상에 노동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속과 부당한 처우가 한총련 뿐 아니라 다른 활동가와 노동자조직에 확대될 것을 우려하며 AI는 △국가보안법 철폐 △구타와 잠안제우기를 포함한 경찰의 부당한 처우 개선 △부당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등을 요구했다.

### 세계의 인권⑥-세계의 난민

## “대중적 민주 정치만이 난민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지붕'을 가질 권리가 있다. 다리 뺀고 누울 수 있고, 구수한 음식 냄새를 피우고, 은밀한 사랑을 속삭이고, 혼자만의 생각을 즐길 수 있는 '지붕'을 말이다.

그러나, 적어도 2천만의 인구가 지붕을 갖지 못한채 떠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 따르면, (94년 8월 현재) 르완다, 팔레스티안, 리베리아는 전체 인구의 28% 이상을, 구 유고,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리아는 전 인구의 10% 이상을 난민으로 배출하였다. 특히, 전체난민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약 7백만명이 아프리카에 있으며, 르완다에만 2백만의 난민이 있다. 아프리카의 난민 인구는 지난 25년동안 10배로 늘었고, 국경을 넘지는 않았지만 자국내에서 짐과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이들도 1천6백만 이상에 이른다.

51년 유엔난민지위조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으며,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개별사안에 중점을 두었던 세계대전 전후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개별적인 박해보다는 전쟁과 폭정·기아에 근거한 집단적인 탈출로 나타난 지난 20년간의 난민이동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이 정의는 난민과 마찬가지로 이유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도망했거나 거주지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국경을 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원인의 본거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조건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상의 근거나 조직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난민의 권리를 명시한 대표적인 국제인권기준에는 세계인권선언과 51년 유엔난민조약, 69년 아프리카난민조약이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일반시민이나 난민의 구분없이 '모든사람'에게 시민·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유엔난민조약과 아프리카난민조약은 난민의 이동의 자유, 재산획득권, 사법·교육·고용이나 여타 중요한 권리들에 대하여 어느 시민과 마찬가지로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실적인 영접은 차갑기 그지없다. 공해에서의 입국금지, 비자 제한, 죄과 없는 체포·구금, 강제귀환, 입국거부에 따른 항의절차의 번거로운 운영 등이 불법이민과 망명절차의 남용을 막겠다는 구실로 이루어진다. 또한, '난민'의 정의를 유엔난민조약보다 축소해석하려는 의도가 두드러져 '일시적 보호'나 '상황이 호전중인 국가'나 '안전지대'나 하는 개념들이 개발되었다.

폭발적인 난민유입에 대한 반응이 '일종의 공포와 신경질적 원천봉쇄'로 표현될 수 있다면, 난민에 대한 원조는 '기부자의 열정의 쇠퇴'로 표현된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예상은 난민증가비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결과는 식량조달 감소와 기타 프로그램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 난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 참혹한 굶주림이다. 국제원조단체들은 하루 최소 열량 2,000Kcal를 채우기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당연히 절보다 양이 우선이고, 필수적인 비타민의 섭취나 난민들의 식사습관에 대한 고려는 먼 산에 불과하다. 비타민 C의 부족이 괴혈병을 낳는다는 상식은 여기선 의미가 없다. 열병은 아주 손쉽게 굶주린 어린이들을 쓰러뜨린다. 홍역·설사·말라리아·호흡기 질환 등 기초적인 영양섭취와 치료약만으로 극복가능한 질병으로 하루평균 1만명당 5-10명이 죽어간다. 또한 원조단체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단체간의 경쟁과 견해차이로 인한 접치가나 소모적인 지원행태가 나타난다. 모든 원조가 전적으로 해외기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의 의견이

수렴되기 어려운 정도 한 몫을 한다. 또한, 난민들은 상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난민촌은 결코 이들에게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들의 행동반경은 난민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외딴곳에 고립되어 있으며, 강도·강간·기타 끔찍한 범죄의 무대가 되어있다. 난민촌을 벗어나 서구 국가에서 운 좋게 망명처를 구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차별과 죄과없는 체포와 구금은 인간다움을 부정한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다시 지붕을 올릴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까? 94년 아프리카난민조약 제정 25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심포지엄은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내놓았다.

첫째, 근본적인 난민발생원인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의 불안을 초래하는 모든 요인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대중적 민주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떠나 버린 텅빈 국토를 다스리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현실은 식민지 착취와 그에 뒤따른 극심한 계급간 격차와 정치불안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둘째, 무력갈등 상황하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주의법의 원칙과 규범은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 난민입국을 저지하려는 국경 폐쇄조치는 있어서는 안된다. 넷째, 난민귀환에 있어서 자발성이 철저히 존중되어야 한다. 귀환여부를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귀환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귀환한 난민이라 하여도 원조 계획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난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난민의 본국귀환이 불가능한 상황일때는 타국에 재정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어느 국경선 안에 있던간에 인간다운 처우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새 지붕을 올리기에 너무 약한 기준일까? [류은숙=교육실장]

### <인권하루소식>이

3주년(지령 제722호)을 맞습니다.

그동안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 7일로 3주년을 맞아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원고지 3매 내외, 금요일(6일) 오전까지

편집방향, 기사내용, 개선사항 등 <인권하루소식>에 바라는 것을 적어 보내주세요.

<이달의 주제-특거청산>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재발방지 조치③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테오 반 보벤-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인권하루소식> 오늘 창간 3주년

### 대학자율성 침해 넘어 정치도구화 우려 연세대 교수들, 학생 의사소통 공간 차단

지난달 긴 악몽과 같았던 시간을 보낸 연세대에선 지금 5·6공 시절에도 없었던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어 개강을 맞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이른바 '한총련 사태'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파시스트적 분위기에 교내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까닭이다.

#### 연세춘추 배포금지

지난 2일 연세대측은 학보 <연세춘추>의 배포를 금지 시킴으로써, 학생들로부터 군사독재보다 더 심한 탄압이라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번 배포금지 조치는 <연세춘추> 6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또한 연세대측은 경찰이

진압작전을 마친 지난달 20일부터 교내 대자보를 철거하면서 학생들의 항의를 불러오더니, 지난 5일에는 총장과 부총장이 직접 나선 가운데 40여 명의 교수들과 낯을 든 교직원들을 대동하면서까지 대자보 철거작전을 감행했다. 이미 학교측은 '학교측의 검인을 받지 않은 대자보는 모두 떼어버린다'며 자보 사전허가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자유로운 사상교환 보장이라는 대학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난을 사 왔다.

#### "한국일보 오보됐다"

한편 5일 대자보 철거 과정엔 기자단이 동행했으며, 다음날 신문지상엔 '교수와 학생간의 몸싸움'이라는 내용이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

다. 특히 6일자 한국일보에 학생들이 교수들의 넥타이를 잡았다는 내용의 기사와 사진이 실리자, 연세대 학생들은 취재기자로부터 확인했다는 기사의 진위를 대자보로 공개했다. 취재기자는 보도된 내용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데스크에서 수정한 내용이라고 답변했으며, 사진기자 또한 자신이 사진설명 기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 정부 개입 의혹

이렇듯 학원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개진의 통로를 봉쇄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학원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총학생회 교육선전국장은 "선생님들의 뜻만으로 진행되는 일이라 보기 어렵다. 위(정부, 청와대)에서의 압력없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 들연 이념교육관 작업

이러한 공개적 탄압외에도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또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합관의 이념교육관화이다. 진압이 끝난 직후만 하더라도 연세대측은 모금운동까지 벌여 종합관 복구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도 스스로 종합관 청소를 시작했으며, 복구작업은 당연한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 연세대생 반대서명운동

그러나, 갑자기 종합관의 복구작업은 중단되었다. 울타리가 생기고 연일 관변단체를 비롯한 각 단체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신문지상엔 이념교육관에 대한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학생회 간부는 "복구작업이 중단된 것은 대통령이 학교를 방문한 날부터였다. 그리고 연세대인들 사이의 아무런 논의나 동의도 없이 느닷없이 이념교육관 이야기가 나온 것은 학교측의 지나친 아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념교육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학원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뜻"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연대생들 사이엔 이념교육관 반대 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김정권 보수회귀 우려

#### KNCC 시국성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동환, KNCC)와 「교회와 사회위원회」(위원장 최희섭)는 6일 김영삼 정권의 반개혁적인 보수회귀 양상을 우려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①-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양혜우사무국장

학생운동은 사향산업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말이 돌린다. 그러면 사회운동은 무슨 길에 접어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운동'이라 이름붙여진 많은 일들이 예전처럼 활발하거나 못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진 못하다. "아직도 그런 일을 하나"는 말을 들을 때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제 일을 하고 있다. '음지에서 양지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었다. 빌 게이츠가 그의 저서 「미래로 가는 길」에서 보여준 것이 과학문명의 발전을 통한 미래상이라면, 이들이 제시하는 길 역시 또다른 '미래로 가는 길'이라 이름붙이고 싶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격주로 '인권운동의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을 찾아간다.<편집자주>

성남 시청 앞 변화가를 지나 좁다란 골목을 들어서면 풍경은 순식간에 산동네 한 귀퉁이를 옮겨 놓은 듯하다. 그 길을 따라가면 주민교회가 나오고 바로 교회 지하 한 칸 방이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상담소) 사무실이다. 이곳은 낯선 나라에서 오갈데 없이 내쫓긴 이방인인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햇살 비취는 따스한 보금자리와도 같은 곳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집과 양혜우 씨가 인연을 맺고 일하기 시작한 것은 상담소가 생기기 전인 93년 가을부터이다. 다섯 달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생겨났다. 그때가 94년 4월10일.

#### 차 밑에 들어가 연행되지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지난 6월 5백여명의 전경이 내팔 노동자 부부를 연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 이를 저지했다는 것이었다. 꽤나 등치가 좋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기운센 남자로 생각했다가 여성이라는 이야기에 스스로 가진 선입견에 창피했고, 바람에 날아갈 듯 연약하게 생긴 몸집에 다 시한번 쳐다보게 되었다.

누구냐가 그 단체를 찾아가면 반드시 한번은 묻는 말이 있다. "월급은 얼마예요?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94년 처음 문을 열 때는 한 달 운영비가 10만원도 안됐어요. 지금은 독일재단에서 상근자 월급(얼마전 월급이 올라 양혜우 씨가 70만원, 다른 상근자가 50만원을 받는다)을 지원받고 있는데 그것도 올해면 끝나죠. 그밖에는 기독교장로회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게 전부죠. 어쨌든 재정자립은 상담소운영에 있어 달려마입니다."

문명정부 들어 변화가 있다면 운동단체에 대한 외국의 지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점일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눈부신' 외교정책의 성과로 선진국에서 한국을 더이상 인권후진국으로 보지 않게 된 것이다.

#### 남편과 친정어머니의 도움

상담소 상근자는 양혜우 사무국장을 포함해 3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바쁜 상담소 일손을 거들어 준다. 양혜우 씨의 출퇴근 시간은 따로 없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달려가야 한다. 쉬는 날이면 갈 곳없는 외국인노동자들로, 성폭행을 당해 휴양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 여성노동자로, 그를 보고 싶어 찾아오는 이들로 그의 집은 늘 가득찬다.

#### 가슴에 남은 외국인노동자

얼 새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상담소 일은 휴일이 없다. 남들이 쉬는 일요일에는 병들고 지친 외국인노동자들이 이곳을 찾아온다. 의료봉사를 나온 의사와 함께 40-50명의 노동자들을 맞이해 바쁘게, 상담소가 탄압을 받은 뒤 1/3이 줄어든 숫자이다.

치료를 받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상담소가 생긴 뒤 치른 장례는 25건. 죽어서 만난 이들도 있지만 사고로 병원치료를 하던 중 숨진 이들의 일과 체온은 아직도 남아 가슴을 아프게 한다.

"제가 만난 첫 죽음은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었어요. 출국을 하기 전날 짐을 싸고 친구에게 인사를 하기위해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10일 동안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얘기를 나누며 폐유를 기대했는데 죽었지요. 너사상태에 빠져 보호자로된 상담소에서 그의 죽음을 결정해야되는 상황이었고.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에요." 병이나 사고로 상담소를 찾는 이들을 데리고 근처 병원갔는데 치료가 불가능해 현대 중앙병원등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치료비가 1천만 원을 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다 보면 진이 쭙쭙이다. 그 경우 현황을 모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종합병원 원장을 만나 사정하면서, 그때마다 가까이 고비를 넘겨왔다.

#### 필연적으로 나서는 보호법 제정

아픈 사람은 수도 없이 밀려들고 일은 폭주하면서 상근자들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운동은 시작된다.

그 과정에서 지난 6월 구속되어 보석출감하기 까지 한달을 성동구치소에서 보내기도 했다. 사방이 막힌 방에서 한달 동안 보낸 소감에 대해 그는 "처음에는 구속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나 같은 피레미를 설마 구속하겠냐는 생각이었죠. 구속으로 나를 '그들이 무서워하는 구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기분이 좋아 지던데요. 김 목사님이 구속되고 나서 며칠동안 한 잠도 못 잤는데 피로가 팍 풀리더라고요."

#### 서른한 살의 계획

그는 2년전부터 남편과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와 남편의 협조가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올해로 서른한 살. 적은 나이는 아니다. 지금 당장 자녀계획은 일 때문에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이어 덧붙였다. "남편과 결혼할 때 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 세대에는 저야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 아이를 낳더라도 입양할 계획이에요. 형편이 된다면 3명 정도 키우고 싶은데, 안되겠죠?"

요즘 그녀는 새벽이면 영어회화학원에 다닌다. 외국인노동자 상담소에서 일하는 활동가로서의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한 교육과 다른 나라와의 연대를 통한 대처 방안마련 등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어학은 필수로 나서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자본의 이동과 마찬가지로 국경을 넘는다. 그녀가 하는 일은 이 흐름을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자그만 흔적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 <인권하루소식>

#### 바른정보 '참세상' 통신서비스 개시

팩스가 없어서 <인권하루소식>을 못보신 독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01410 바른정보 '참세상'으로 <인권하루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참세상 ID가 없어도 '손님'이나 'GUEST'로 인권하루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접속방법 : 01410망에서 참세상을 입력하고 56.인권하루소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창간 3주년 축하·격려 글모음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다시 인권 파수꾼의 역할을 다짐합니다

인권문제를 심도있게 다뤄  
낙성대 나눔의 집

3년이면 36개월. 짧다면 짧지만 마치 우리에게 30년은 된 듯한 느낌이다. 그만큼 <인권하루소식>이 숙되었다는 생각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 성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인권하루소식>은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우선 글씨가 너무 작아 우리처럼 나이든 이들에게는 불편하다. 또 2면이라서인지 내용을 너무 간략하게 다뤄 어느 때는 어리둥절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편으로 받는 때 늦게 도착하는 관계로 좋은 행사를 지나쳐 아쉬움을 종종 느낀다. 인권이 중요하다지만 국내외적으로 일간지나 잡지에는 인권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진 적이 없다. 그런데 <인권하루소식>은 끊임없이 이를 찾아내고, 다루고 있어 소중하게 보고 있다.

짓밟힌 민중의 권리 전달자  
장호순(언론학 박사, 운영위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많은 사람들이-일반 시민들 뿐만 아니라 과거 민주화투쟁을 해오던 사람들마저도- 인권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해왔다. 인권운동은 고사하고 인권이라는 말을 곁집어 내는 것조차 어색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양심과 신념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고, 감옥에 끌려가는 것이 세상 실정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으니 없었던 일이라고 모른척 해왔다.

지난 3년동안 <인권하루소식>은 되물이 되어버린 인권운동의 자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더욱 열악해져가는 인권상황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많은 고생을 해왔다. 한강대로를 걸주하는 자동차들과 경인선 전철의 틈바귀 속에서 터져나는 지독한 소음에 시달리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낡은 콘크리트 빌딩 한구석에서, 권

력에 의해 저질러지는 더럽고 추한 모습을 그들은 기록해왔다. 이렇게 지난 3년을 이겨낸 <인권하루소식> 기자들을 필자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한다. 그들이 산업화, 세계화의 고통속에서 짓밟히는 민중의 권리를 목격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예뻐 외면하려는 기름진 사람들의 틈바귀 속에서 꺾이지 않고 지금까지 견뎌온 것은 실로 대견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의 앞길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인권하루소식> 기사거리가 없는 날은 결코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인권유린에 대한 엘리트와 대중의 무관심도 지속될 것이다. 쓸쓸하게나마 자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앞날이 더욱 암울하기 때문이다. <인권하루소식>의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인권하루소식>이야말로-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둠속의 빛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지면을 늘려서 시원한 편집을  
민주노총 해고자복지투쟁  
특별위원회

저희는 전국의 구속·수배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의 인권 탄압 실상 등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각종 악법과 제도 그리고 자본과 정권의 모진 탄압을 받고, 심지어 하나뿐인 목숨까지 바쳐가며 투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억압과 착취의 삶속에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죽어가는 노동자, 산재환자, 직업병 환자 등 너무도 많은 사람이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몸부림치고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당한 현실에 대항하여 노동현장에서 싸우다가 구속, 수배, 해고된 노동자들의 인권도 하루빨리 보장되어 정든 일터와 동지들 곁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권하루소식>에서 지난날 전해투

투쟁과 노동자 인권에 대하여 각별히 계재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의 최대장점은 매일 정기적으로 발간되어 그날그날의 소식을 실감나게 받아들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분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중요내용을 요약하여 신속히 전국 각 단체에 알려주고 있음은 피해를 본 사람과 단체에 아주 큰 힘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편집상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고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페이지를 늘려서라도 글자를 키우는 등 시원하게 뽑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사진, 그림 전송은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신속하고 정확한 내용과 전달을 위해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주세요! 계속 노동인권만큼이나 <인권하루소식>을 사랑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간 3돌을 축하하며...  
차지훈(변호사)

국가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이에게 스스로 국가권력과 맞서 싸우기에는 힘들고 외로울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이 힘들고 외로운 자들을 위한 후원자가 되어 주기로 하고 활동한 지 벌써 3년. 그간 우리는 무관심하게 지나칠 뻔한 소외된 이웃들의 이야기를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읽을 수 있었고, 세상 자신과 주위를 추스리기도 하였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빠짐없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랑방에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

사랑방 한쪽 날개 꺾이다

93년 이덕우, 박연철, 김연수, 이기욱, 이오영님의 힘으로 마련한 복사기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다 수명을 다했습니다. 새 복사기 마련에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창간 3주년 축하·격려 글모음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인권침해사례를 신속·정확하게  
유정민  
(이화여대 학보사 편집국장)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인권하루소식>을 정기구독하는 독자입니다. 3년의 역사를 이룬 것에 대해 우선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보법 관련 인권 유린 사실들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일간지나 기타 제도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진보적 흐름들을 보도한 기사들은 속보성을 담보하고 있어서 다른 잡지나 언론사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했으리란 생각됩니다. 이러한 장점을 앞으로 계속 살려주기 바라며 아울러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인권유린은 제도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사회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시간 돌돌 말린  
팩스신문을 펴보며...  
차병직(변호사)

출근 시간이 이르건 늦건 사무실에 도착하면 돌돌 말린 팩스신문이 도착해 있다. 부지런한 조간신문보다 더 빠르다. 언젠가 밀린 원고를 쓰며 사무실에서 밤을 새운 적이 있는데,

성폭력추방을 위한  
서울시민대회  
· 때: 9월7일(토) 오후3시  
· 곳: 종묘공원(종로3가) 동성당까지 행진  
· 주최: 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 문의: ☎ 966-6364

새벽 4시경인가 전송이 되어 오는 소리를 들었다. <인권하루소식>에 대해서는 우선 바라고 싶은 것보다는 청송하고 싶은 것이 더 많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3년간 쉬지 않고 인권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짧은 기사들은 같은 내용을 다룬 그 어느 일간지보다 정확하다. 팩스용지 한두 장에 담긴 글들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깨우쳐 주고 있다. 아직 이 나라에서 <인권하루소식>이 말아야 할 역할이 크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불행에 속한다. 앞으로 <인권하루소식>이 이루어내야 할 일은 고의적인 인권침해가 사라진 세상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건의 전달에 이어 그 원인행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권 침해들 한 기관이나 행위자로 하여금 그 이슈나 변명을 말하게 해 보자. 그리하여 팩스 용지처럼 돌돌 말린 이 땅의 인권 상황을 펴지게 하자.

중앙과 지방 소식에 형평을  
광주 인권지기

인권실현의 새시대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권' 일반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문제일 것이다. 이는 첫째, 인권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옹호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과 이익을 주는 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저 시리도록 푸른 하늘을 가진 이땅의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는데 필요한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문제이다. 둘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알리고 지켜내며 억눌리고 짓밟힌 인권을 고발하고 옹호하는 개인적 의사와 및 의지를 형성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인권하루소식>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인권소식의 전국적 전달자로서 역할과 인권 및 인권운동을 조직하고 확산시키는데 크나큰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로써 우리의 인권운동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겠다. 여기에 조금이나마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중앙과 지방의 소식이 형평을 유지했으면 한다. 또한 일간이라는 점 때문이었지만 심층성에 더욱 주력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다시금 <인권하루소식>의 창간 3주년을 축하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권의 새시대를 열어가는데 그 빛의 사명을 다했으면 한다.

인권침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동진(전교조 국제연대담당)

한국인권운동의 횃불 인권운동사랑방 만만세!!! 구석구석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곳을 비추어 알려내고 일깨워주어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인권침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횃불이 비춰주길 바랄 뿐이다.

집회의 자유 보장 촉구  
전국연합, 전농집회 금지항의 성명

지난 3일 전국농민총연맹(의장 이수금, 전농)이 96년 전국농민대회에 대해 교통신잡을 이유로 경찰측이 집회금지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성명을 발표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이번 전농의 집회불가 조치는 한총련 사태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집회와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독선적 결정의 하나라고 지적하며 어느때보다 절실한 농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집회 규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며 "관련법규에 의해 신고된 집회를 자의적 해석을 통해 '집회억제'를 목적으로 국민기본권 침해를 다반사로 행하는 작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농의 총무부장 서윤경 씨는 "합법적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경찰측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농민대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경찰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④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과  
애도의 표시  
-테오 반 보벤-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국보법 사면자 교수직 박탈

### 부산예전, 전승일씨 89년 구속 문제삼아 2주만에

우리 사회에서 국보법을 위반했다는 과거 전력은 한 개인의 재능과 자격보다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얼마전 한 여성이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중인 남편을 두었다는 이유 때문에 교사 임용에서 탈락한 데 이어, 또다시 최근 대학 전임교수

로 임용됐다가 과거 국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교수직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달 부산예술전문대학 만화예술과 전임교수로 임용됐던 전승일(32·퓨처 아트 대표) 씨는 출강 2주만에 교수직을 잃었다. 신원조회 결과, 8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씨가 구속됐던 사실이 교수직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될 이유는 아무 데도 없다. 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전 씨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 즉 공민권상에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다. 이미 전 씨는 이번 학기 개강에 앞서 학장과 이사장을 만나 전임교수직을 맡기로 약속을 마친 상황이었다. 개강과 더불어 전 씨에

겐 연구실과 집기가 제공됐고 2주간 강의도 진행했다. 그러나, 안기부 신원조회 결과가 학교에 통보된 뒤, 전 씨는 연구실을 나와야만 했다. 전 씨를 교수로 추천했던 학과장은 "국보법으로 구속됐던 사람을 어떻게 학교에서 받아들일 것인가"는 학교에서 받아들였다고 한다. 전 씨는 "과거의 법 적용이 지금 사회생활에 결정적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임용권이 이사장의 권한이므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 평등한 혼례문화토론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정강자등)는 오는 12일 오후 7시 종로성당 4층 강당에서 평등한 혼례문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갖는다. "새로운 혼례문화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는 손덕수(효성여대 여성학과) 교수가 '혼례문화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김효선(여성신문) 기자가 '진단! 떠돌아다니는 혼인풍속도'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문의: 277-7883

### ◎ 오늘 공판안내 ◎

□ 9월10일(화)  
· 이광철, 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권영길, 일반교통방해 등, 오후2시, 단독3부, 320호 속행

## 전해투 명동성당 농성 93일째

### 노동법 개악저지에 총력을, 해고자 복직은 잠시 뒤로...

"제가 89년에 해고되었으니까 햇수로 8년이지요. 딸린 식구가 없었기에 땅정지 정찰 힘든 싸움이에요. 저는 다만 노동해방 염원을 실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9일로 농성 92일을 맞고 있는 민주노총 해고자복지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나현균, 전해투)의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만난 박원주(32·89년 LG 산전 해고노동자) 씨의 말이다. 지난 6월 10일 상반기 집중투쟁 때 민주화 투쟁의 상징인 명동성당에서 시작된 농성이 하반기 중앙 집중투쟁 때까지 계속될 줄은 전해투 소속 노동자들도 몰랐다. 하지만 이들은 한총련 사태이후 보수화 경향을 노골화하고 있는 재계와 정권에 대응하면서, 또한 곧 있을 노동법 개정이 개악될 우려가 높은 이 때 자신들의 요구인 복지문제를 뒤로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투쟁의 하나로 전해투 노동자들은 지난 7일 명동성당 입구에서 과천 정부종합청사까지 약 21Km의 구간을 걷는 '고난 행군'을 했다. 40여 명이 참가한 고난 행군은 7~9일의 긴 세월을 원직복직과 해고노동자 발생을 막기 위해 싸우는 해고 노동자들의 삶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주고자 계획되었다. 하지만 쉬지 않고 5시간을 걸어 노동부에 도착해 만난 근로기준국장은 '노동부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봤자 기업에서 복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변명만 급급했다고 한다.

박원주 씨는 "해고된 노동자들 대부분이 쿠데타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노동약법에 의해 해고된 것"이라며 "노사관계 개혁의 첫 출발은 노동약법에 의해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씨는 자신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노개위 위원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도 "이러한 현실보다 나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해고될 때 나오는 정당한 요구를 했으며, 지금도 나는 당당하다"며 "10년이 되면 20년이 되면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권, 북한경제, 환경 등 시사강좌 이대총학생회, 1기 개방대학 개최

이화여대 총학생회 인권연대와 학술위원회는 "대학인의 꿈과 상상력의 대학만들기"란 주제로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주간 1기 개방대학을 연다. 인권·북한경제·환경 등 세 가지 주제를 맞아 핵문제에 대한 위협성을 점검해 보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영광 핵발전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찾아본다. 강의를 최재훈(환경운동연합 반핵평화부간사) 씨가 맡았다.

교류협력과 문제점, 남북경협 경제방안 등의 주제로 단국대 장원석 교수가 강연한다. 또한 환경분야에서는 체르노빌핵발전소 참사 10주년을 맞아 핵문제에 대한 위협성을 점검해 보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영광 핵발전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찾아본다. 강의를 최재훈(환경운동연합 반핵평화부간사) 씨가 맡았다.

### AI 조사단 방한 9월 10-26일

국제 엠네스티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씨 등 2명이 한국 인권상황 조사를 위해 10일부터 26일까지 방한한다. 해마다 이맘때쯤 한국을 방문해온 맥베이씨는 올해도 국내 인권단체는 물론 정부기관을 방문해 조사작업을 벌이며 이를 기초로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는 "한국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단체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면담을 원하는 단체들의 요청을 바란다"고 전해왔다. 문의:715-9185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성폭력상담 전화 263-6471 으로 변경

### 사랑방 한쪽 날개 꺾이다!

93년 이덕우, 박연철, 김연수, 이기욱, 이오영님의 힘으로 마련한 복사가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다 수명을 다했습니다. 새 복사가기 마련에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 주/간/인/권/호/름 (96년9월2일부터 9월8일까지)

<2일>

검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관련된 제법 회장등 피고인 18명에 대해 항소포기/대한적십자사 북한이 비전향장기수 출신 김인서(70) 씨의 송환을 요구한다. 대해 이산가족 재회문제를 먼저 응할 것 촉구/경찰청 한총련 핵심간부 16명에 대해 현상 수배/연세대·숙명여대등 대학당국이 한총련 사태를 보도한 대학신문 개강호 기사를 문제삼아 신문 배포금지/산케이신문> 보도, '일본교사회' 중학교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술을 삭제요구하는 결의문 문부성에 제출

<3일>

신한국당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할 방침/경찰청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1천2백76억원의 추가 사업비 요구

<4일>

전남경찰청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채 광주대학회관을 뒤져 총학생회 간부 임경환(21) 씨 등 2명을 붙잡은 뒤 철수/국민회의, 자민련 및 시민·사회단체 등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정부와 신한국당,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도입키로/부천시 휠체어 장애인 전용버스 운행키로/경찰청, 내년 특수전압 경찰대원과 파출소 근무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5일>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 문철환 씨 등 (주)삼익악기 해고노동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복직거부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 판결/상업은행, 한총련 사태 관련자 불합격 처리방침/경기 수원시 경기서적 앞길에서 뽕소니범을 쫓던 수원 남부경찰서 고등파출소 이성남(29) 경장이 손권총실탄에 시민 2명 맞아 중상임어/현직교사 1천5백여명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선언문 발표/소설가 김하기 씨 간첩혐의로 검찰 송치/인하대 학생회관 앞에서 학원침탈규탄대회를 벌이던 중 상공에 인천경찰청 소속 헬기 2대 저공비행하면서 해산경고 방송

<6일>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 연세대 교수들의 대차보 철거에 항의한 학생들 패륜적 요소가 있다며 수사 지시

<7일>

경찰, 한양대 부속병원에 입원중인 부친 면회는 서울산업대 총학생회장 이상희 씨 연행과정중 병원복도에 가스총 쏘/검찰,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대학생 4백40여 명 기소방침/충남 공주시 신동면 영농후계자 이부형 씨, 정부의 식용할 수입품에 항의해는 6백평에 심어놓은 벼 트랙터로 갈아엎어

<8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남성 육아휴직제도 신청자 12명/서울시교육청 학교건물 진단결과 발표, 시내 7백99개 국공립 초·중·고 가운데 7.6%인 61개교, 완전히 헬고 신축해야 할 개축대상으로 나타나/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승 대법관) 유용음식점 점대부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정리·축소 등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현민투표 개표결과 투표자의 90%가 미군기지의 축소에 찬성으로 집계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④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과  
애도의 표시  
-테오 반 보벤-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이젠 집회도 경찰 손아귀에 여의도 농민집회, 경찰 무력시위 속 축소

경찰력이 강해지고 있다. 아무렇지 않게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정부의 의도에 맞춰 경찰력은 거칠 것 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10일 오후 여의도에서는 의료보험 통합 실시와 식용 쌀 수입 반대를 위한 전국 농민대회가 열렸다. 여의도 광장 한편에서 농민들의 집회가 열리는 동안, 그 바로 뒷편에선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다는 듯 전경과 백골단 1천여 명의 무력 시위도 동시에 진행됐다. 집회와 시위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전경·백골단 1천여명 시위 이날 농민집회를 막기 위한 경찰의 시도는 집회 준비과정에서부터 집요하게 펼쳐졌다. 지난 3일 주취측은 예년과 달리 행진규모를 축소한 채 집회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은 교통혼잡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다. 이에 주취측은 행진계획을 삭제한 채 집회신고를 냈고, 9일 낮 12시 집회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9일 밤부터 갑자기 '모형 수입 배' 화형식을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화형식을 진행할 경우 집회를 해산시키겠다는 방침을 통보해 왔다. '방

화가 일어날 경우,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어서'라는 것이 경찰측이 밝힌 이유였다.

방화 우려, 화형식 불허 주취측은 "화형식은 집회 신고 때 공식 식순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를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경찰의 요구대로 화형식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날 화형식의 제물이 될 '모형 수입 배'는 폭 2미터에 높이 1미터 정도 크기의 조형물로써, 넓은 여의도 광장에 모인 농민들을 광분시키기에 너무나 초라한 모습의 단순 상징일 뿐이었다. 김진원 전농 교육국장은 "수입배의 화형식은 쌀 수입에 대한 농민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를 막는 것이 오히려 농민들을 흥분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질서문란이라는 억지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한총련 사태를 빌미로 모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지적했다.

"농민마저 탄압하는 구만" 경찰은 또한 농민들이 가지고 올라는 농기구와 나무막대기 등을 회수하지 않으면 진압에 나서겠다고 수차례 협박했고, 농민들은 이러한 경찰의 요구까지 들어주었다. 참석한 농민들은 "한총련을 깨더니 이젠 농

민마저 탄압하려 하는구만. 자꾸 이러면 가만 있지만은 않을 것인데"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집회는 분명한 합법 집회였고 아무런 위협요소도 없었지만 경찰은 자신들 구미에 맞게 집회를 요리했다. 국민들의 권리가 자꾸만 축소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농민집회였다.

### 안기부법등 개악 중단 전국연합 정기국회 촉구

전국연합은 15대 첫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소위 한총련 사태 이후 퇴행일로를 차단하고 있는 정국이 정상복원되기를 바라는 내용의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 주요 공판 안내

- 9월11일(수) 김규식, 국보법, 오전10시, 단독11부, 526호 신권 박치현,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김병득,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 9월12일(목) 여성성·화염병사용등 위반, 오후2시, 단독2부, 321호 속행
- 9월13일(금) 이원구,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유용기, 국보법, 오후2시, 합의1부, 418호 속행 양규현, 제3자개입금지법등, 오후2시, 단독4부, 524호 속행 서형준, 국보법, 오후3시, 단독4부, 524호 속행 강순정(신권),이철우(속행)국보법,오전10시,합의23부,311호 허인회, 국보법,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속행 현준희, 출판물예외한 명예훼손,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최진수,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이상 서울형사지법

## 사회단체 노동악법 저지 앞장 16일 사회개혁 공대위 발족

올 하반기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등)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확립과 사회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영도(민변 회장) 변호사는 "노사관계의 개혁은 사회 전체의 기본적인 구조를 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고 민주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사회구조 및 세력 지형을 기본적으로 결정짓는 큰 사안에 많은 단체들이 공동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96 정책 워크숍'을 계기로 사회개혁과 사회복지 실현에 관한 공동 활동을 하기로 한 이후 공동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했으며, 지난 5일 노동법 개정에 대한 공동선언문 발표까지 이룬 것이다.

공동선언문에서 이들은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이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을 거부하고 분쟁조정 기구의 민주적 개편확보 등을 16일 공동대책위원회 발

족에 앞서 바람직한 노동법 개정에 대한 각 단체 입장 발표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후 토론회와 서명·청원운동,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동두천 살해사건 진상규명 미군근절운동본부 촉구

10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미군근절운동본부)는 지난 7일 오전 10시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이기순씨 살인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정부의 주체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미군근절운동본부는 45년 이래 전국 1백여 개 기지에 약 3만7천 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군범죄에 의해 희생된 한국인이 10만 명이 넘지만 불과 0.7%만이 국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군범죄 관련사건들이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나 버린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95년 5월 동두천에서 살해된 이금연(당시 68세)씨의 경우를 비롯해 92년 10월 동두천에서 살해당한 윤금이 씨의 경우에도 미군당국의 공식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채 끝나 버렸다.

**사랑방 한쪽 날개 꺾이다**  
93년 이덕우, 박연철, 김연수, 이기욱, 이오 영님의 힘으로 마련한 복사가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다 수명을 다했습니다. 새 복사가기 마련에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 한총련 명동성당 농성 26일째 <인터뷰> 현석호(서울 서부총연 의장) 씨 "진실을 알리는 속에 시민들의 변화 느껴"

지난 달 16일부터 10일 현재까지 한총련 소속 학생 8명은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며 한총련 사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명동성당 주위를 철통같이 지키는 전경들로 인해 이들 농성학생들은 명동성당을 벗어 날 수도 없으며, 찾아오는 학생들도 쉽게 명동성당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한총련 사태 본질을 말하기를 꺼려하는 이 사회에서 이들은 무엇을 말하려고 한달 가까이 농성을 하고 있는지 직접 농성단장인 현석호씨를 만나 보았다.

- 농성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 오늘로 농성 26일째를 맞고 있다. 연세대 사태 기간인 16일 연세대에서 빠져 나온 학생들과 학교에 들어가서 못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안전귀가'를 요구하는 집회를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농성을 시작한 것은 20일 이후 연세대 탄압이 심해지면서 부터다. 그때 '김영삼 정권의 살인·폭력 진압 분쇄와 구속학우 석방을 위한 한총련 농성단'이 구성되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무엇을 얻기 위해 농성을 하고 있는가?  
= 물론 우리들의 '구속학생 석방' 요구에 응할 정권이 아니라는 것은 안다. 다만 우리의 의무는 한총련 사태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을 시민들에게 꾸준히 알려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농성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현재하고 있는 홍보활동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우리들은 명동성당 밖으로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으며, 집회도 전혀 할 수 없다. 또한 검문이 심해 학생들이 명동성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힘이 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전활동이라는 것은 스피커를 통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사태의 진실을 알려내는 것과 사진 전시 외에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 시민들의 냉담한 반응이 더 힘들 것 같은데...  
= 16일 처음 선전전을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우리들에게 빨갱이라고든가, 나쁜 놈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후 시민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어떤 분은 '뉴스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전물을 달라'고 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 수배된 상대일 텐데 현재 가장 바라는 것은?  
= 1, 2학년 후배들이 많이 구속되었다. 그들은 통일에 대한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참석했다. 이번 구속으로 그들은 분단국가에 살고 있다는 현실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힘이 들겠지만 잘 이기고 나왔으면 한다. 그들을 위해 나도 구속을 각오하고 열심히 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21세기의 통일시대의 주역이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대대적인 탄압을 한 것은 김영삼 정권의 한계라는 생각이 든다.

근 조  
영남대 김하영 씨의  
명복을 빙니다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과거청산 작업 어디까지 왔나

### 16-21일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열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민족화운동 명예회복 및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가 1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추모제 기간에 준비되는 영정은 모두 2백67인.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전직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이들의 문제는 관심의 뒷전에 밀려 있다. 따라서 이번 합동추모제를 통해 의문사 진상규명과 열사 추모사업 등 과거청산의 또다른 한 축이 열마만큼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될 것인가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합동추모제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은 예년과는 다른 자세로 올해 행사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의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열사들에 대한 보훈사업 △군사정권에 의한 피해자들의 구제와 명예회복 △

국보법과 노동약법 등 악법 폐기 △열사추모관 건립 등의 문제 등은 꾸준히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구호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사회적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다각적 모색이 이뤄지고 있다. 박찬영 유가협 사무국장은 현 상황에 대해 "김영삼 정부 집권 이후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정부는 열사와 희생자 문제 해결에 전혀 의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차기 정권까지 넘어가면 아예 이 문제가 매장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 선거 때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선 합동추모제 중앙집행위원장은 "개별적 명예회복은 의미가 없다"며 "이번 추모제를 계기로 추모사

업의 전국적 구심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위원장은 학문적 차원의 검토작업도 필요하다며 10월 중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구상을 밝혔다. 이번 제7회 합동추모제엔 '열사의 거리' 선포사업이

새롭게 진행된다. 민족민주열사의 정신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청계천은 '전대일의 거리', 명동은 '조성만의 거리' 등으로 명명하게 된다. 16일부터 진행되는 기념주간 동안 명동, 가리봉 5거리, 동대문운동장 등에서 추모행사가 열릴 예정이며, 합동추모제는 21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게 된다.

기사제보 715-9185

## 범민족대회 참가 여학생 사망 경찰의 강경탄압 죽음 불러

연세대 사태로 지난 8월 21일 김중희(20) 상경이 숨진데 이어 9일 두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숨진 학생은 김하영(영남대 문화인류학과 3) 씨로 14일 쓰러진 이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소생하지 못한 채 지난 9일 오후 6시 30분 운명했다. 11일 김씨의 장례는 김천 화장터에서 영남대 학생 2백여 명의 눈물 속에 치뤄졌다. 영남대 총학생회는 김 씨가 언론이나 경찰에서 발표한 대로 음식에 기도가 막혀 숨진 것이 아니라 선천성 천식이 있는 상황에서 김영삼 정권의 유해없는 탄압을 맞아 이를 피하려다가 몸에 한계가 와 숨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고인의 명복을 비는 플래카드와 검은 리본을 달아줄

것을 다른 학교측에 당부했다. 한편 숨진 김 씨는 대회 참가를 막기위해 터미널등에서 있었던 삼엄한 불심검문을 피해 13일 서울에 올라왔다고 한다. 그는 올해로 세번째 범민족대회에 참가했으며,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어 사고가 나던 14일에도 동국대에서 혼자남아 다른 친구들의 짐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평소 천식을 앓아온 데다, 검문을 피해 다니면서 몸은 극도의 긴장과 피로로 지쳐 있었다. 그 상황에서 상경한지 이틀만에 처음은 것이 곧바로 부작용을 일으켜 쓰러진 채 구급차에 실려 국립의료원으로 우송되었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끝내 숨진 것이다.

### <인권하루소식>

바른정보 「참세상」 통신서비스 개시  
팩스가 없어서 <인권하루소식>을 못보신 독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01410 바른정보 「참세상」으로 <인권하루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참세상 ID가 없어도 '손님'이나 'GUEST'로 인권하루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접속방법 : 01410망에서 참세상을 입력하고 56.인권하루소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 경관은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연세대 사태 이후 총기사용 발언을 비롯한 일련의 변화는 공권력의 범위와 권한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법집행공무원의 윤리강령'은 경찰관을 비롯한 법집행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총기사용 부분과 진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윤리강령'을 요약해 실는다<편집자주>.

-법집행공무원 윤리강령-(1979년 12월 17일 유엔총회 결의안 34/169에서 채택)

1조 법집행공무원(경관)은 공동체에 봉사하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등, 항상 법률이 부과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경관은 임명되었던 선출되었던, 경찰력 특히 체포와 구금권을 행사하는 모 든 관리를 의미한다. (2)군 당국이 경찰력을 행사하는 국가에서는 군 요원들도 경관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략>

2조 임무 수행시, 경관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보호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지해야 한다. (1)인권은 국내의 법을 근거로 보호된다. 국제적 장치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고문 및 가혹행위와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대우 방지 선언(이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79년으로, 한국

정부가 가입한 바 있는 고문방지조약은 84년 채택, 87년 발효되었으며 당시에는 선언에 머물러 있었다-편집자), 인종차별철폐조약, 집단학살에 대한 처벌과 방지 조약 등이 있다. <중략>

3조 경관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1)이 조항이 강조하는 것은 경관의 물리력 사용은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관은 범죄 방지를 위한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범죄자나 용의자를 합법적으로 체포하는 데 조력을 주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2)국내법은 보통 균형의 원칙에 따라 경관의 물리력 사용을 제한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 조항을 합법적인 목적에 맞지 않는 물리력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3)총기의 사용은 극단적 수단이다. 경관은 총기를 사용하기 전에 모든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일반적으로 용의자가 무장저항을 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경우, 그리고 다른 수단으로는 용의자를 제지하거나 체포하는 것이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총기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중략>

4조 임무수행상 또는 재판상의 필요가 아니라면, 경관은 가지고 있는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임무상 경관은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나 타인의 이익과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임무수행이나 재판상의 필요에 의해서만 공개될 수 있으며, 정보를 이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다른 용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5조 경관은 고문이나 가혹행위 및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부당대우와 처벌을 가하거나 묵인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누구도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전쟁상태나 전쟁위협,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정치적 안정 또는 여타의 긴박상황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 호소해서는 안된다. (1)이 조항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고문 및 기타 가혹행위 방지 선언'에서 비롯됐다. 선언에 따르면 그러한 행위는 인간존엄을 무시하는 것이며, 유엔헌장의 정신에 대한 부정으로서, 세계인권선언에서 주창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비난받을 것이다. (2)선언에 따르면, '고문은 본인 또는 제 삼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6조 경관은 피구금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진료를 보장해야 한다. (1)공인된 의사나 의료보조원 등의 의료진에 의해 수행되는 진료는 필요시 또는 환자의 요청이 있을시

보장되어야 한다. <중략>

7조 경관은 부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경관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반대하고 싸워야 한다. (1)어떠한 부패행위도 권한의 남용행위와 마찬가지로 경관의 직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략>

8조 경관은 법률과 현행 법조문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최선을 다해 법 위반을 막고 반대해 나가야 한다. 경관은 법 위반 사실이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경우, 이를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엔 다른 관련 단계에도 보고해야 한다. <중략>

【번역=인권운동사랑방】

## 공권력남용 중단 촉구 전국연합 성명

최근 잇따른 경찰의 총기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1일 경찰의 공권력 남용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경찰의 무도한 공권력 남용행위는 연세대 사태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보수강경회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며 "공권력의 임정함은 총을 소고 사회분위기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과정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경찰의 무도한 공권력 남용행위는 연세대 사태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보수강경회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며 "공권력의 임정함은 총을 소고 사회분위기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과정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경찰의 무도한 공권력 남용행위는 연세대 사태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보수강경회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며 "공권력의 임정함은 총을 소고 사회분위기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과정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 조  
영남대 김하영 학생의  
명복을 빙니다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전교조 합법화, 산넘어 산

### 교사 노동권 둘러싸고 전교조·교총 대립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 노동법 개정 최종안 발표 시안을 앞두고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확보를 위한 요구와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막바지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노개위에서는 지난 7월 15일 대통령에게 제출한 1차 보고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 기본권익을 존중하되, 책무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허용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종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공익위원들이 노동기본권 인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혜숙, 전교조)은 지난 2일부터 10일간 노개위의 최종안과 관계없이 전교조 인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 교사들과 공유해 결의를 높이기 위해 전교조 본부와 16개 지부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또한 3천1백81명의 현직 교사들이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국교사 선언'을 2차례에 걸쳐 신문광고를 냈다.

홍진관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의 요구에 동감한 현직 교사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신문에 기재한 것은

전교조의 해고사태를 겪었던 교사로서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전교조 농성으로 얻은 최대의 성과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신문광고를 통해 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 등 공식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나 몇몇 학교의 교장이 선언 교사에 대해 경위서를 내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총 역시 12일 신문광고를 통해 교총의 입장을 발표해 △교사를 6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으로 간주하는 것을 반대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국제기구의 교원노조 허용은 전교조측의 확대 해석한 것이며, △교원단체의 복수화는 교육현장의 황폐화와 교단 분열만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등의 입장을 발표해 교사 노조와 다른 교원단체의 구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홍진관 전교조 대변인은 "노동 자체를 천시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동안 교총이 정권에 기생하면서 교사들의 이해를 대변한 적이 없다.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질 것을 우려한 시대착오적인 발표"라고 비난했다. 또한 홍중언(전교조 서울시지부 교육부장) 씨는 "ILO에서는 2차례에 걸쳐 한국정부를 대상

으로 전교조 인정을 권고했다. 권고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섭·협의를 있었던 교총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 최종안은 전체회의를 통해 19일 확정되고, 23일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 이기순씨 살해범 미군 14일 동두천서 규탄집회

지난 7월 발생한 이기순(44) 씨 살인사건의 범인이 한국 군부 3주제인 미군 사병 무니치 에릭 스티븐(22·미군 제2사단 2여단 보병)이 범인이라고 밝혀지자,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등 관련 단체들은 제2의 운동본부가 살인사건이라며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력 대응을 밝히고 있다.

동두천민주시민회(의장 최송권, 동두천시민회)는 "이 살인사건의 원인에 대해 한 미군병사의 개인적 잔혹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 미군 주둔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두천시민회는 △한국 여성의 살인사건이므로 한국 수사기관이 범인을

구속 수사할 것 △미국 대통령 공개사과와 주한미군 8군 사령관의 경질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완전한 배상 △한미행정 협정을 완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1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7차 개정 협상이 미국측의 구금시설 개선과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대책 등 많은 요구사항으로 인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미국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실익없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켰느냐"며 "유럽과 일본처럼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순 씨는 10일 오전 장례 절차도 없이 화장되었으며, 스티븐이병은 현행 한미행정협정상 살인자에 대한 신변을 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평택 미 육군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이다.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는 오늘 낮 12시 용산미군기지 제1정문 앞에서 규탄대회를, 동두천민주시민회는 '이기순씨 살해사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4일 오후 4시 동두천 터미널에서 시민 규탄대회를 연다.

### 복사기 마련에 힘써 모아 주십시오

복사기가 남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이 보고서는 지난 8월초 불처벌 문제에 대한 전문가 반 보벤 교수가 유엔인권소위에 제출한 것이다. 가거청산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여기에 실는다. [편집자주]

###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을 존중할 의무

1. 국제법 하에서 모든 국가는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 의무의 범위

2.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의무의 내용 : 인권침해 방지·조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치료 제공, 희생자에 대한 배상. 특히 대규모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되며, 국제법상의 범죄자를 기소하고 처벌할 의무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 적절한 규범

3. 인권과 인권관련 규범은 국제법에 의해 규정되며, 국내법 상에 포함되거나 적어도 효력을 가져야 한다. 국내규범과 국제규범이 다른 경우, 개별 국가는 더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규범을 확보해야 한다.

### 구제받을 권리

4. 모든 국가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 누구에게나 적절한 법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구제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내적 국제적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5. 모든 국가의 법체계는 적절한 보상과 위협이나 보

복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징계·행정·민·형사 소송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보편적 사법권을 제공해야 한다.

### 배상

6. 직접적 희생자나 가족 또는 관련된 사람이나 집단 등은 개인적으로나 혹은 집단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7. 국제법에 따라 국가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위한 특별수단을 채택할 의무가 있다. 배상은 부당한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고 보상함으로써, 그리고 침해 방지함으로써 정의를 세운다. 배상은 침해사실의 중대함의 정도와 손해에 비례할 것이며, 반환, 보상, 갱생, 사죄, 재발방지 약속 등을 포함한다.

8. 모든 국가는 배상절차를 국내의에 공식·비공식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9.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의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이 없는 동안에는 출소기한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의 중대한 침해에 대한 배상에 관련된 시민적 요구는 출소기한법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10. 모든 국가는 배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소관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희생자 배상에 관련된 결정사항은 부지런하고 신속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 배상형태

배상은 다음에 언급하는 것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럿의 형태를 취한다.

12. 반환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을 복원시키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반환은 그 중에서도 자유, 가족생활, 시민권, 거주지의 복귀, 재산소유 등에 대한 복구를 의미한다.

13. 보상은 경제적 손해에 대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 (1)육체적 고통 및 정신적 상처
- (2)교육받을 기회를 포함한 기회상실
- (3)물질적 손해와 수입원 및 수입의 손실
- (4)인간 존엄성에 대한 피해
- (5)법적 비용 또는 전문가 조력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 14. 갱생은 법적·사회적 서비스 뿐 아니라 의학적인 심리적 치료도 포함한다.
- 15. 사죄 및 재발방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완전하고도 공식적인 공개 사과  
(3)희생자 또는 희생자들과 연관된 사람들의 존엄과 명성, 법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사법적 결정 또는 공식적 선언

(4)공식적인 사실확인과정 책임인정을 포함한 사죄

(5)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제재

(6)희생자에 대한 기념  
(7)인권침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역사교과서와 인권훈련과정에 포함시킬 것  
(8)재발방지 수단  
(a)군대 또는 정보기관에 대한 시민의 효과적 통제 확보  
(b)군사법정의 사법권을 군인이 저지른 범죄로 제한  
(c)사법부 독립 강화  
(d)법관과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보호  
(e)사회 전 영역에 걸쳐-특히 군, 정보기관과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화 <끝>

### ○행사와 동정○

- 신노사관계 구상과 노동법 개정 투쟁의 방향
  - 일시:9월14일(토) 오후 2시-6시
  - 장소:서울대 경영대 국제회의실(서울대 정문에서 5분거리)
  - 내용:신노사관계 구상의 배경과 의미(채만수)/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박하순)/하반기 노동법 개정 투쟁의 방향(남구현)
  - 주최:노동조합 기업경영분석 연구상담소(882-0634)/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874-2933)
- 공인탄압 저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일일주점
  - 일시:9월14일(토) 오후 3시-11시
  - 장소:홍익대학교
  - 내용:특별공연-꽃다지, 조국과 청춘 등/연대사태의 진실을 담은 영상물 상영
  - 주최:한총련 탄압과 공안정국 분쇄를 위한 서울지역 대책위원회(747-5377, 747-4362)
- 라이브 콘서트 '평화만들기 1'
  - 일시:9월21(토), 22일(일) 오후 5시
  - 장소:동성고등학교 대강당
  - 주최:평화만들기실행위원회(226-5923)/주관:천주교인권위원회

근 조  
영남대 김하영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여학생들 "성추행 당했다"

### 연세대사태 인권침해 1차 조사결과 발표

연세대 사태에서 대학생 고 20여일 간에 걸친 조사  
들이 당한 폭행 및 성추행 결과, 상당수의 대학생들에  
등, 인권침해에 대한 1차 게 집단적·조직적인 폭행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과 성추행이 가해졌음이 확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 인됐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  
13일 비공개 기자회견을 갖 한국인권단체협의회에서 인

#### <연세대 피해학생 증언> 나는 이렇게 당했다!

**곤봉으로 여궁 가격**  
박 아무개(23·남) 씨: 이과대 탈출 후 경찰에 잡혔다.  
머리채를 잡힌채 연희초등학교로 끌려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전경이 곤봉으로 얼굴을 때려 앞니 4개가 부러  
졌고 이후 1-2개를 더 빼야한다. 전경들 사이에서 '4명  
의 전경이 죽었다'는 말이 퍼지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전경 사망 소식을 퍼뜨려 격분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리 벌리고 앉아!**  
정 아무개(23·여) 씨: 20일 종합관에서 연행될 때 전  
경이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팔로 뿌리치자 곤봉으로  
머리를 때렸다. "588이나 가라. 정신대로 보내야 돼. 김  
정일 기쁨조나 해라. 밑을 드러내겠다. 우리 차에 타면  
다 강간해 버릴거다' 등의 계속 성폭언을 했는데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에서 폭언은 말 이상의 공포를 주었다.  
밤 12시경 강남서 강당에 수용되어 있을 때, 누군가 '눈  
을 감고 다리를 벌리고 앉으라'고 명령했다. 몇 분이 수  
시간이나 지난 것처럼 길었고 수치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정 씨는 울먹이며 말을 잊지 못했다)

**시위 무관학생 폭행**  
이 아무개(홍익대 1년·남) 씨: 17일 자취방을 구하려  
갔다가 골목길에서 학생들과 함께 연행되었다. 계속 "자  
취방을 구하러 왔다"고 이야기 했지만 구타를 당했다.  
서대문경찰서에 도착하니 전경들이 "저 새끼 사수대다"  
라면서 약 5분간 집단적으로 구타했고 19일 훈방됐다.

**"내가 가져가야겠다"**  
한양대학교 2학년 남학생: 20일 종합관에서 잡혔을  
때, 가방을 빼앗아 뒤졌다. 가방안에 피피와 지갑 등이  
있었는데 피피를 보더니 "내가 가져가야겠다"며 가져가  
고 지갑과 가방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

권피해센터를 개설한 이후  
신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피  
해 학생들을 직접 만나면서  
진행되었다.

1차 조사결과 모두 1백8건  
의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  
조사되었다. 주요 인권침해  
유형은 폭언, 폭행, 성추행,  
최루탄피해,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자백 요구 등으로 드러  
났으며, 소지품과 돈을 뺏은  
재산상의 피해도 있었다.

폭행은 연행과 수사과정  
에서 집단적 모기가 광범하  
게 자행됐던 것으로 나타났  
으며, 심지어 경찰이 직접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  
병까지 던졌던 것으로 밝혀  
졌다.

여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은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는 여학생들에게 성  
적 폭언을 가하고 가슴과  
엉덩이 등을 일상적으로 만  
지는 등, 1차 조사대상 70

명의 여학생중 41명이 성추  
행 사실을 신고해 왔다. 비  
대위는 이번 사태에서 발생  
한 인권유린에 대해 "경찰  
의 행동은 전쟁터에서 사로  
잡은 적군을 농락하고 노획  
물을 빼앗는 승리자의 모습  
과 같았다"고 전했다.

연대사태에서 피해입은  
학생들의 후유증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  
몽을 꾸거나 환영에 사로잡  
히는 경우는 다반사이며,  
일부 학생들은 대인공포증  
에 시달려 등교를 포기하거  
나 아예 가족들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  
다고 한다. 비대위측은 "학  
생들이 피해의식이 크고 공  
포에 사로잡혀 있어 접근이  
어려웠으며, 조사과정도 난  
항을 겪었다"고 밝혔다.

비대위측은 이후에도 조  
사활동을 계속 벌여나가며,  
9월 말경 종합보고서를 만  
들어 공개하기로 했다. 또  
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바탕  
으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  
하거나 방기한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을 폭력 및 직권남  
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6호 발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시대의 인권상황판 <인권하루소식> 합  
본 6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합본6호는 제501호부터 제655호까지 묶  
었습니다. 52차 유엔인권위 총괄과 을 상반기  
의 인권상황 소식이 상세하게 담겨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가격은 1만5천원(하루소식 정기독자 1만원)

## 6월 항쟁 범국민사업추진위 결성키로 기념사업에서 청산투쟁까지 다양한 계획

87년 6월항쟁 정신의 계승  
과 미진한 과거청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준비되고 있다.

13일 오후 1시 이창복 전  
국연합 상임의장, 박형규  
목사, 권영길 민주노총 위  
원장 등 사회 각계 인사  
10여 명은 성공회 앞뜰에  
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  
칭) '6월 민주항쟁 10주년  
사업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오는 10월 18일 결성하겠  
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의 전 단계인  
현 준비위원회에는 5백30명  
의 각계인사가 참여하고 있  
으며, 발기대회까지 3천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6월항쟁 10주년 사업으로  
는 문화·학술 사업 등의  
행사성 프로그램에서부터  
악법개폐, 희생자 보상 등  
인적·법적 청산을 위한  
범국민투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사업이 논  
의될 전망이다. 논의 결과  
에 따라 10주년 사업은 단  
순 기념축제로 진행될 수  
도, 본격적인 청산투쟁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주년 사업의 방향과 내  
용에 대해, 준비위원회의  
임종철(건강사회를 위한 약  
사회 회장) 씨는 "현 단계  
에서는 6월항쟁 사업에 대  
한 다양한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관심있는 사람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해 구체적 방향과 계획을  
결정짓지 않았다"며 "추진

위가 구성된 이후 본격적으  
로 사업방향과 내용이 구체  
화될 것"이라 밝혔다.

### 과거청산 작업 시급 안기부법 개정 반대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  
복)은 13일 신한국당의 안  
기부 대공수사권 부활기도  
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  
했다.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부  
활을 검토할 때가 아니라,  
안기부의 과거 인권유린법  
죄에 대한 진상조사와 문제  
등 철저한 과거청산 작업을  
단행할 때라고 주장했다.  
전두환 정권이 공식 단죄된  
현 상황에서 지난 군사정권  
시절 안기부가 저지른 구악  
을 씻는 것이 필요하며, 안  
기부는 과거 내란 정권안보  
차원에서 저지른 무수한 정  
치공작과 불법연행, 구금,  
고문, 사찰 등의 직권남용  
범죄들에 대해 공식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 미 대통령 사과해야 이기순씨 살인사건

참여연대(공동대표 오재식  
등)는 동두천 고 이기순씨  
살인사건에 대해 주한미군  
에 의한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이라  
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  
정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 사랑방 한쪽 날개 꺾이다

93년 이덕우, 박연철, 김연수, 이기욱, 이오  
영님의 힘으로 마련한 복사기가 효자 노릇을  
독특히 하다 수명을 다했습니다. 새 복사기  
마련에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을 정부가 책임지 합사령관과 주한미대사, 미  
고 주한미군과 미국정부에 국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낼  
대해 입증의하여 한미연 것을 촉구했다.

### ○ 인권간행물 ○

- 함께가는 여성 9월호-한국여성민우회(269-5763)
  - 주요내용:매매춘알선, 그 실태와 진단/방송비평·드라마에 나타난 부부간 언어구도 분석/방송비평·제2회 동아시아여성포럼 '환경과 개발' 워크샵 등 19쪽.
- 전국연합 통신 통권106호-전국연합(747-4363)
  - 주요내용:12·12와 5·18 재판에 대한 평가/한총련즉이기' 무엇을 노리고 있나/하반기 정세와 민족민주운동 등 106쪽.
- 평화의 일꾼 9월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장기수가족후원회(719-2172)
  - 주요내용:한총련 통일대추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연대진입사태 그후/장기수소식 등 8쪽.
- 빛두레(제268호)-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3672-0251)
  - 주요내용: 부활로 오는 것발· 잘못되기 쉬운 조직/해발전 문제 다시 생각한다 등 4쪽.
- 그루들 9월호-참교육시민모임(965-9170)
  - 주요내용:주제가 있는 폭지-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반성적 단상, 학원폭력 어떻게 볼 것인가/교육자료-부모로부터 받는 아이들의 스트레스 등 70쪽.
- 민족예술 9월호-민예총(743-5872)
  - 주요내용:특집-'선별적 직권심'이라는 밧/새로운 영상문화를 위하여/민족예술의 현장 등 100쪽, 3천원
- 국제엠네스티 9·10월호-AI 한국지부(053-426-2533)
  - 주요내용:제물이 된 인권(이집트 편)/지금 세계는(세계의 인권상황)/테러수출/캠페인(터키 편)/사형이 특별한 억지책인가?/남북한에 대한 AI의 관심 등 27쪽.
- 이달의 민변(1996. 8)-민변(522-7284)
  - 주요내용:외부에서 본 민변/판례소개-①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는 선거부호결정 권한의 한계, ②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등/노사관계개혁위원회 관련 활동보고 등 171쪽.
- 현 부패사정기관 이대로 좋은가?-참여연대 등
  - 주요내용:부패사정기관의 현실과 문제점(강성남)/부패방지를 위한 법제개혁과 특별검사제(홍준형) 등 42쪽.
- 12·12와 5·18재판 평가와 과거청산 과제-민변 등
  - 주요내용:재판을 통해서 본 5·18의 정치사회적 의미/12·12와 5·18 재판에 대한 평가/12·12와 5·18 재판 이후의 과거청산: 과제, 원칙, 전략 등 33쪽.
-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한국여성NGO 위원회
  - 주요내용:참가국 보고(한국, 중국, 마카오, 몽고, 대만)/정신대, 고용안정, 인권(여성장애인·외국인노동자)/여성의 정치세력화·종교와 문화·환경과 개발·경제 및 개발·여성에 대한 폭력·평화운동 등 289쪽.
- '공익적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의 개혁'-경실련등
  - 주요내용:노사관계 개혁의 과제와 방향(김윤환)/노동법개정 어떻게 되어야 하나(이광택) 등 69쪽.
- 여성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토론회-여연(273-9535)
  - 주요내용:여성복지예산의 현황 및 개선방향/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차별의 문제점/사회복지서비스와 여성복지의 현 실태/예산분석을 통해 본 노동여성복지정책의 평가 및 요구 등 49쪽.

**<이달의 주제>**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③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테오반 보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루스벨트상 수상 낮 뜨거워

## 김 대통령 집권 4년, 장애인 정책 오히려 후퇴

지난 15일 김영삼 대통령 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뒤, 장애인 단체들은 낮 뜨겁다는 반응에서부터 황당하다는 반응에 이르기까지 좁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 대통령 집권 4년 동안의 장애인 정책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겐 이번 루스벨트 상 수상이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의 장애인 관련 통계들은 이러한 의혹의 시선을 뒷받침하고 있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제자리 걸음도 아닌 몇발짝 후퇴한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정책추진 의지를 반영하는 예산 편성의 경우, 장애인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년간 0.13%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2년 전체 33조의 국가 예산 중 40억을 차지하던 장애인 복지 예산이 3년이 지난 95년엔 50조의 국가 예산 중 64억을 차지하면서 4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기부 예산이 91년 9백69억에서 93년 2천3백33억에 이르렀던 것 평균 20% 씩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제자리가 아니라 후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다.

또한 장애인 관련 핵심 문제라 할 수 있는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4년간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 스스로가 최소한의 법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장애인 고용율은 92년의 0.66%에서 94년에는

0.78%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상황이 이러한데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역시 장애인을 2% 이상의 무고용해야 하는 3백인 이상 사업체에서 92년 이후 4년간 장애인 고용율은 0.4% 수준에서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심지어 95년의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은 개악이라는 비난마저 듣고 있다.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연계고용제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더욱 격리시키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밖에도 각종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 문제도 장애인 복지 향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과 편의시설법의 제정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될 전망은 불투명하고, 편의시설법은 올 가을에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가원수가 국제적 권위의 상을 수상했는데도 낮 뜨거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복사가 마련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주십시오**

# 문민정부, 장애인 죽음 잇따라

## 이덕인, 최정환, 정인석, 백원욱 씨 등

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죽어가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다. 삶의 고통이 힘에 겨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때로는 사회로부터 강제적으로 격리되어야만 했던 장애인들. 자살이던 사고사던 간에 결국 사회에 의해 간접 살인당한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현실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94년 1월 산재 장애인인 정인석 씨가 회사측의 부당 대우를 견디다 못해 죽음으로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다. 95년 3월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씨는 무자비한 단속에 항의하며 역시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그 해 겨울엔 같은 장애인 노점상이었던 이덕인 씨가 인천 앞 바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떠올랐다. 이 씨의 경우는 경찰에 의한 타살이라는 의혹 속에 더욱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었다. 대학 교정에서 휠체어 사고로 어처구니 없게 목숨을 잃은 시인 백원욱 씨, 목을 매 자살한 노점상 박용환 씨. 이들 모두 성실한 생활인이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와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이다.

죽음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절망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았다. 소아마비라는 이유로 밀짚허리 다녔던 직장을 잃어야 했던 운전기사의 이야기.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여덟 번이나 공무원 시험에 불고도 채용되지 못한 정강용 씨.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될 수 없었던 전현자 씨의 이야기 등.

"유엔의 이상 실현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여 장애인 상을 수여한다." 아직 구권을 떠들지도 모르는 여러 장애인 영혼들이 벼락이라도 내릴 소리인 듯 싶다.

# 민족민주열사 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

## 21일까지 명동,청계천 일대 행사

제7회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 주간 선포식이 16일 오후 4시경 명동성당에서 열사 가족 및 각 계인사 1백여 명이 참여한 속에 열렸다.

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된 기념식에서 박정기(유가협 회장, 박종철 열사 아버지) 씨는 "열사들의 죽음이 민주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제 칠천만 겨레의 힘으로 이땅의 민주화를 완성시키자"고 강조했다. 최규업(전 국연합 정책위원장) 씨는 "민주화의 힘으로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이 기념식마저 명동성당측의 반대 부딪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한 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집시법과 안기부법 개악에 대해 규탄연설을 했다.

열사에게 드리는 시 낭독과 노래극단 '희망새'의 추모공연이 펼쳐졌다.

# 국보법 무죄판결 자료집

## 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

무죄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주요사건의 자료집이 발행되었다.

자료집은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이창복 씨 사건, 박치관 씨(북한소설 용해공출판) 사건, 진상호 씨(PC통신 공산당선인) 사건, 신회주 씨(북한소설 소지)사건, 주우열 씨 사건, 박종렬 씨 사건 등 95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사건의 개요, 판결문, 신문기사 스크랩 등을 수록했다. 총 144쪽.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정보자료실 715-9185)

**인권하루소식 합본 6호 발간!**

제 52차 유엔인권위 총괄과 올 상반기 인권상황소식이 상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가격 1만5천원(하루소식 정기독자 1만원)

- 주요 공판 안내 ○**
- 9월17일(화) 서미연, 국보법, 오후 2시, 단독3부, 320호 속행 심민규, 국보법, 오전 10시, 단독7부, 523호 속행 임현준의 2, 집시법, 오후 2시, 단독11부, 526호 속행
  - 9월18일(수) 하광동, 국보법, 오전 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 9월19일(목) 연성수, 추원회, 국보법, 오전 10시, 합의23부, 319호 선고
  - 9월20일(금) 양의성, 국보법, 오전 10시, 합의23부, 311호 신권 김미경, 유현수, 국보법, 오전 10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9월21일(토) 김정두의 1, 국보법, 오전 10시, 합의22부, 319호 신권 명원창, 국보법, 오전 11시, 단독5부, 519호 속행 함운경, 국보법, 오후 1시, 단독11부, 526호 속행
- 이상 서울형사지법

# 주간/인/권/호/름

(96년9월9일부터 9월13일까지)

<9일>  
 민고협, 언론개혁 위해 언론대책특별위원회 출범키로/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만 65살 이상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탈치산 자료집』 펴내/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영욱) 이 성환 과천시장에게 징역3년, 추징금 3천5백43만원 선고

<10일>  
 부산예전 만화예술과 전임교수 전승일 씨, 89년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됐었다는 이유로 실직/국제연대센터 클레어 맥베이 씨등 한국인권상황 조사차 방한/여의도 농민집회, 경찰 사사건건 시비/영광학 발전소 5·6호기 건설 반대로 실행 선고받은 박재완 신부등 5명 항소제기/로스앤젤레스 아시아계 이민단체, 미국 당국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최초의 공동집회 열어/미 상원, 동성애자들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안 통과

<11일>  
 동두천시 이기순(44) 씨 피살사건 범인 미군 제2사단 에릭 스티븐 (22) 이병으로 밝혀져/경찰청, 주체사상 지하조직 활동 혐의로 서울대 '자주·민주·통일 애국청년 선봉대'와 부산외국어대 '자주대오' 조직 적발/경찰, 한 달전 발생한 송파경찰서 잠실1동 파출소 피습사건 당시 빼앗긴 권총을 찾는다며 압수수색영장 없이 서울시내 지하철도에 설치된 모든 물품보관함 뒤져/신한국당과 안기부,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 국보법상 불고지죄와 고 무한양죄에 대한 수사권 부활키로/서울평화상 문화재단, 제3회 수상자로 '국경없는 의사회' 선정/한·미 당국, 소 파개정을 위한 제7차 협상 열고 미군 피의자의 형사재판 관련 문제등 핵심쟁점에 대한 질충 벌여

<12일>  
 이양호 국방장관, 불순한 사상을 가진 장병 6천여 명 가운데 신원이 노출된 1천6백여 명 직접 관리를 받고 있다고 밝혀/김영삼 대통령, '루스벨트 국제장애인상' 제1회 수상자로 선정/재경원, 94년 이후 외국인 산업연수생 12개국에서 5만1천6백97명이 입국했으나 1만천3백71명(33.6%)이 직장 이탈한 것으로 집계/정아무개(15) 양 등 중학생 6명 "후배들 금품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자주 학교 선생님들한테 매질당해 학교가는 것 두렵다"며 집단 교살 기도, 중태/법원 행정처의 '96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사람 10만9천4백92명으로 구속영장 발부자의 76.2%에 불과/고려대, 한밤중의 학내 범죄를 막는다며 이과대·학생회관 등에 가스총 지닌 청원경찰 두기로해 학생들 반발

<13일>  
 '한총련 강경진압 및 탄압에 대한 비상대책위' 기자회견 갖고, 연세대 사태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폭로/경찰, 서울대에서 예정된 서총련 집회에 열기 3대 띄워 쫓겨며 뿌리며 강제해산/일 오키나와 미군기지문제 일단락

해설  
 며칠전 정보통신부는 '불건전 정보 유통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며, '컴퓨터통신에 불건전 정보를 올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들 형법 등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자칫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우려를 낳는 만큼, 법안 마련에 앞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달의 주제>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③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테오반 보벤-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추석 앞두고 쫓겨난 주민들

### 반포2동 53세대 거주지 전격 철거

17일 서초구청은 백골단을 포함한 전경 4개 중대 및 (주)거산 용역회사 직원 3백여 명과 포크레인을 투입해 반포2동 시유지 내 53세대가 살던 주거와 상점등을 전격적으로 철거했다. 이로써 이곳 53세대 주민들은 집과 일자리를 잃은 채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

오전 9시 경 철거반원들이 들어 닥치자 주민 40여명은 이에 저항하고 나섰다. 그러나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한 주민들은 2시간 만에 진압되었고 오전 11시경부터 철거는 예정대로 진행·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 18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사당의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이창남(63·상업) 씨는 허리에 탈골증세를 보였으며, 김광석(35) 씨

는 "백골단에게 복부를 발로 얻어 맞은 뒤, 10여 명의 철거반원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철거에 앞서 구청은 주민들에게 1백만원에서 5백만원의 이주비용을 제시했다. 구청에서 영세민으로 판정한 세대에 한해서 5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세대에는 1백만원만의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자진해서 이주할 경우에만 비용을 지급한다는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날 강제철거가 진행된 이상 주민들은 일체의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보상액과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거주지를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 본래 불법 건물에 대해선 무대책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원한다면 15

세대 정도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한달 정도 재워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아침에 집과 일터를 잃어 버린 주민들의 가슴은 걱정과 분노로 가득찼다. 인근 공원에서 신문지 한 장을 의지한 채 자리를 잡고 있는 주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구청 직원들이 살림살이를 다 가져가 오늘 밤엔 이부자라도 없이 공원 땅바닥에서 자야

할 형편"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화자(42)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의 교과서, 노트도 모두 가져갔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또 주민들은 이날 전격 철거가 이루어진 배경을 듣고 더욱 분노하고 말했다.

주민들은 구청직원으로부터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추석경비를 주기 위해 철거를 진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서울철거민연합의 강삼규 사무국장은 "추석 이후엔 동계철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당겨 철거를 실시했을 것"이라며 "반포2동 뿐만 아니라 상계동 광성마을 등 몇 군데 지역에서 조만간 철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사상통제·검열 강화" 밝혀 검찰, 연세대 사태 중간결과 발표

사상 검열과 출판·통신 검열 등 이른바 반민주주의적 통제와 검열의 통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7일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벌어진 이른바 '연세대 사태'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의식화 정도를 수사하겠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등 심각하게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사방침들을 서슴없이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사태의 불구속입건 피의자들에 대

해 '향후 시위 참가 의사'를 수사하겠다고 밝혀, 집회와 시위를 실행이 아닌 목적 행위만으로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까지도 드러냈다. 더불어 검찰은 각종 이적표현물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뱉드리지 않고 발표했다.

이같은 검찰 발표는 집회·시위·언론·출판을 비롯한 기본적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구속하겠다는 방침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 취학전 1년 유치원 무상교육 요구 연대모임, 교육기본법에 첨가돼야

「취학전 1년 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모임」(상임대표 임재택, 오성숙)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교육기본법에 유치원 무상교육 관련 조항 삽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참교육 학부모회, 민주노총 등 24개 단체로 꾸려진 연대모임은 10월 4일경 기자회견을 갖고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연대모임은 이와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우선 유치원 교육을 원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군 단위 이하 지역의 공·사립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방안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연대모임은 교육기본법에 유치원 무상교육 관련 조항을 삽입시키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각 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일반인을 중심으로 서명운동과 엽서 이송 사업유치원에 다니는 21만명은 한 해에 1백93만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연대모임은 이와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우선 유치원 교육을 원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군 단위 이하 지역의 공·사립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방안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연대모임은 교육기본법에 유치원 무상교육 관련 조항을 삽입시키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각 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일반인을 중심으로 서명운동과 엽서 보내기운동, 공청회 등을 벌일 예정이다.

## "교원노동권 인정해야" 노동기본권 확보 선언 교사 6천여명 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16일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국교사선언 3차 선언교사 3천8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로써 지난 5일 선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6천2백66명이 참가했다.

선언을 통해 교사들은 "89년 여소야대 시절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가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거부된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너무도 마땅한 역사바로세우기"라며 교사의 90.3%와 노동법학자의 92.7% 그리고, 국회의원의 83.3%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는 "만일 노개위에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전노동계와 연대해 현장교사투쟁

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언교사들은 노개위에서 노동법개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23일까지 1만명의 선언자 명단을 공개하고, 기자회견과 지역별 결의대회, 노개위와 국회청원 등을 통해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 장애인, 외교적 희생물 장애인상 수상철회 요구

김영삼 대통령의 루스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을 둘러싸고 장애인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6일 전국장애인항거연합회는 성명을 내 "미국 루스벨트 재단이 제1회 수상국으로 한국을 선정한 것은 이땅 4백만 장애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수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이번 루스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은 생계조차 해결할 수 없어 힘겹게 살아가는 대다수 장애인에 한·미 간 외교적 희생물로 삼는 정치적 술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학교는 지금 위기상황에 있다. 교육개혁안이 세 차례나 발표되어도 학교 현장에 개혁다운 개혁은 찾아볼 수 없다. 보충·자율 학습은 더 강화되고, 학력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교육개혁에서 '신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한 "더불어 사는 인간, 슬기로운 인간, 열린 인간, 일하는 인간"은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로 떨어지고 있다. 수백억원을 들여 교육개혁박람회를 연다고 개혁의 실종이 가려질 일이 아니다.

교육 현장에 있는 우리는 정작 세 차례나 개혁안이 준비되는 동안 공청회 한 번 참가할 기회가 없었으며, 질문에 한 번 응해 본 적도 없다. 학생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는 동참은 커녕 늘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려왔다. 학교 현실에 근거하지 못한 채 위에서 마련된 개혁안은 이미 현장을 바꿀 수 없고 교육계의 수구적인 입김에 의해 다시 왜곡되거나 실종되었다. 교사들이 하나로 나서 우리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고 실천할 때만이 오늘의 교육을 바꿀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이다.

대통령은 노사개혁을 교육개혁과 함께 '국가의 핵심 전략'이며, '구국 운동'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국민이 뽑은 '교육대통령'의 약속을 진실로 믿고 싶다. 이른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산업화 시대 그 이전의 봉건적인 논리를 들이대며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사의 90.3%, 노동법학자의 92.7%, 국회의원의 83.3%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국민 정서를 앞세워 이를 더 이상 왜곡해서는 안된다.

지난 7월 노사개혁위원회는 개혁의 기본방향을 보고하면서 '국제적 노동기준과 관행의 존중'을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밝혔다.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집행이사회에 들어간 ILO에서 4차례나,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이 된 UN의 사회권위원회에서, 가입 예정으로 있는 OECD에서 사회적 인권차원으로 즉각 보장할 것을 누차 촉구해 왔다. 세계화 시대에 더 이상 국제적인 보편규범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른바 문명시대에 53년 노동법이 제정될 때 이미 보장되었다가 5·16 군사쿠데타로 금지되었고 89년 여소야대 시절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거부된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너무도 마땅한 역사바로세우기이다.

노동은 새 역사 창조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성숙된 전문직 교육 노동자로 창의적인 인간을 키우는 교육개혁에 나서고자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이 아닌 그 어떤 단체로도 교육개혁을 할 수 없음을 반 백년의 한국교육 역사에 의해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따라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모르쇠 하는 일은 교육개혁의 부정이며, 노사개혁이 개혁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는 신뢰받는 국민의 교사로서 아이들의 꿈과 미래의 미래를 보듬어 키우고 싶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학교 현장에 교육개혁을 뿌리내리는 민족사적 과업에 방관자가 아닌 당당한 주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오늘 우리의 목소리를 묶어 널리 알린다.

1996년 9월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국교사 일동



<이달의 주제>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③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태오반 보벤-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이기순씨 살해, 미국사과 촉구 20일 용산기지 앞 살인만행 2차 규탄대회

동두천 이기순 씨 살해사건이 발생 2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미국측의 공개사과와 정부의 적극적 태도 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18일 오후 김경남(KNCC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목사, 전우섭(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공동

대표) 목사 등 5명의 대표단은 주한미군 살인만행에 대한 항의를 전달하기 위해 미대사관과 외무부를 방문했다. 이들은 대사관과 외무부에 각각 항의서한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대사관에서 미국인 대표를 내보내지 않자 서한전달을 연기하고 의

무부측에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표단은 정부측에 △미국의 공개 사과 등에 대해 강력한 의사를 표명할 것 △미군범죄에 대한 수사권 완전 확보와 미군기지 사용 임대료 징수 등 한미행정협정의 전면적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20일 낮 12시 용산미군기지 앞에서는 이기순 씨 살인만행 제2차 규탄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미8군사령부 관계자는 "사령관이 이미 유감

(regret)을 표시했고, 한미 행정협상 신병 인도는 불가하다"고 밝히며 "다만 한국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살인범인 무니크 일병은 평택의 미군부대에 유치돼 있으며, 한국정부의 기소가 끝난 뒤에는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

### 「평화만들기」 콘서트 천주교인권위

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에서는 오는 21, 22일 오후 5시에 대학로에 위치한 동성고등학교 대강당에서 「평화만들기」이라는 콘서트를 개최한다. 공연문의 : 266-5923

### ‘공권력 남용’ 시민이 막는다 광주시민, 총기남용 경찰관 고소

시민들 스스로 공권력 남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17일 최창희(28·광주시 북구 용봉동) 씨 등 광주 시민 6명은 이무영 전남 경찰청장, 류환춘 광주북부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20여 명을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이는 최근 경찰력 남용 사건이 빈발한 가운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초 대응으로써, 향후 검찰 및 사법부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무고한 시민들을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입산부를 가스총으로 위협했다해서 물의를 빚어 왔다. 고소인들은 "지난 9일 밤 경찰관들이 쇠파이프, 곤봉, 총으로 무장하고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집을 무단 침입하여 입산부의

머리에 총을 겨눴으며 고소인들을 집단폭행하고 불법으로 연행, 감금하여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은 연행 1시간만에 풀려났으나, 현재까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불면증과 대인기피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공권력을 수호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겠다는 경찰청장의 담화가 있고 나서 무리한 공권력의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본인들에게 닥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며 "이 사회의 평화와 안정이 도리어 그것을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 의하여 깨어지고 난도질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김명희】

### 한국경찰이야! 미국경찰이야!

18일 오후 3시 세종로 한국통신 빌딩 앞. 정장 차림의 신사 세 분과 아주머니 두 분이 40여 명의 전경들에게 길을 막힌 채 인성을 높이고 있었다. 목사와 수녀 신분인 이들은 미군병사의 한국여인 살해사건과 관련해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가는 길이었다.

"우리는 단지 편지만 전달하러 갈 뿐인데 왜 길을 막는 것인가."

이에 경찰의 답변은 궁색하기만 하다. "안됩니다. 2명이상이 움직이면 시위에 해당하니 두 사람만 움직여 주십시오" "어깨띠를 메고 있으면 집회가 되니 안됩니다" 도대체 목사와 수녀님 5명에서 무슨 대단한 시위를 벌인다고 난리를 벌이는지. 집시법을 충실히 지키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파잉충성이 빚은 해프닝이던 결국 경찰은 길을 내주었다.

"일본에선 윤간사건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의 사과를 직접 받아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항의서한조차 전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것도 같은 민족인 한국 경찰이 앞장서서 막고 있다"는 목사의 말씀에 순간 전경들은 시선을 피한다. 한국경찰인지 미국경찰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든 씩씩한 광경이었다.

##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② '푸른영상' 김태일씨 통일을 향한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흔적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추억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그 순간들을 서너장의 사진으로 남기는 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본다면 김태일 씨가 보내온 서른 넷의 삶은 3편의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남아있다. 봉천동 보라매공원 부근 푸른영상 작업실에서 만난 김태일(34) 씨는 낙성대 장기수 분들을 주제로 한 작품의 막바지 손질을 잠시 뒤로 하고, 다큐멘터리 연출담당자로서의 생활을 들려주었다.

### 91년 <깃발>로 시작

그가 카메라를 잡은 것은 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91년부터다. 당시 운동을 같이하던 친구들은 "네 성격상 현장이 맞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는 "하고 싶은 일을 통해, 장기간 전방 속에서 작지만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며 주저없이 이 길로 접어들었다.

91년 독립영화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독립영화워크숍을 수강한 뒤, 수강생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92년 태백지역 선거에 관한 작품을 만든 것이 첫 작업이 된다. 작품 이름대로 그 역시 <깃발>을 든 것이다.

다음 작품은 직업병의 대명사로 불리는 원진태이는 노동자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38분의 <원진태이>이 만들어지기 까지 소요된 시간은 1년 6개월. 촬영을 마치고 편집을 위해 워크숍에서 강의를 한 김동원 씨를 찾아간 것이 푸른영상과의 인연의 끈을 만들어준다.

### 김태일 씨가 그린 장기수 문제

세 번째 작업은 93년 3월 6일 장기수 선생님들의 가석방출소에서 시작된다.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장기수 선생님들이 계신 곳은 다 쫓아다닌다. 그 과정에서 그의 고민은 "현시점에서 장기수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인권' 문제처럼 포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93년 8월부터 95년 2월까지 24개월의 작업 끝에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2년간의 시간은 그에게는 지치고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으며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작업이었다고 고백했다. 빨치산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한 두 사람의 힘으로 하기에 는 벽찬 일이기 때문이지만, 한 해가 다르게 기억력을 잃어가는 나이드신 장기수 선생님들을 대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초조함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해 지곤 했다. 자료는 역사의 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을 너무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촬영활동을 해오면서 가슴아픈 일이 많다. 무엇보다 그것은 촬영할 때마다 한 분씩 세상을 등지는 것이다. 원진태이에서는 김 씨가 촬영했던 노동자가 자살해 숨졌고,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을 완성하기도 전에 장기수 윤기남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이다.

### 촬영도중에 들려오는 비보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무

### 역사의 사실을 담아내는 카메라

개만큼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듯이 김태일 씨도 좌절을 느낄 때가 많다. 절망감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지난 6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표 김동원 씨가 불구속 수사를 받았고 이와함께 압수 수색으로 1천여 편의 작품과 편집기 자체가 압수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 뒤부터 그나마 나오던 활동비 40만원은 중단되었다. 푸른영상은 상근자가 9명인데 활동비의 기준이 결혼했느냐의 여부로 나뉜다. 결혼을 했다면 40만원, 미혼은 30만원. 아이가 있느냐는 무척 중요하다. 아이 1명당 육아비로 10만원 씩 지급된다.

이젠 모임이나 결혼식도 부담스러워 잘 안간다고 하며, 크게 욕심내는 것도 아닌 데도 보통사람처럼 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비상금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아프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숨이 막힐 때도 많다고 한다. "내가 선 자리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루에도 좌절과 희망을 수십번 왔다갔다한다"며 더욱 속상한 것은 이

렇게 만들어지는 작품이 많은 사람에게 평가받지도 못한 채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들려준다.

### 발톱 2번씩 뽑으며 결혼에 골인

그는 작년 2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지금 부인은 임신 7개월째다. 부인은 봉천동 산동네에서 8년동안 놀이방을 해온 사람으로 지금도 놀이방에서 일하고 있다. 급여는 40만원. 맞벌이 부부의 한달 수입은 80만원인데, 그나마 몇 달전부터 절반이 줄어든 셈이다. 소개로 만난 부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서로의 생각이 비슷하고, 그가 하는 일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애시절을 그는 '치열하게' 보냈다. 퇴근하고 신림역에서 만나 서초동 비닐하우스촌까지 바래다주는 그 길은 데이트 코스였다. 그들은 신림역에서 서초동까지 그 길을 1년 동안 한결같이 걸어다녔다. 서초동에 도착하면 새벽 4시를 넘기가 일쑤였는데, 아내는 발톱이 2번씩이나 빠지기까지 했다. 처음에는 4시간 걸리던 그 길이 1년이 지나니 2시간에 도착할 정도로 익숙해질 무렵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 고문피해자에 관한 작품 계획

한국에서 다큐멘터리의 전망은 아직도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자본의 제한과 검열, 통계로부터 억압이 따른다. 지난 10여 년간 열악한 환경과 법적 투쟁 속에서 역량을 축적할 시간이 있을 리 만무하다.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 가 보다는 제작하는 데 의미가 있는 단계를 벗어난지 얼마 안된다. 완성도가 떨어진다든 평가를 받지 못하든 지금 당면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좋은 작품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철칙이 여기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1년간 사무실 운영에 힘쓰며 작품제작 보다는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똑심 하나로 스스로를 너무지치게 하진 않았나하는 반성과 후배들에게는 닦여진 길을 주고 싶다는 소망이다. 그러면서도 다음엔 고문피해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단다.

<이달의 주제>  
희생자들에게 대한 배상③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테오반 보벤-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매춘! 필요악인가? 대책마련 시급 '매춘여성과 함께' 한소리회 10년 맞아

매춘문제를 고민하는 이들로 시작된 모임 '한소리회'(회장 문예현, 수녀)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19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조출한 기념자리를 가졌다. 같은 인간이면서도 울타리 밖에서 살아가는 매춘여성들을 위해 86년 10월 첫발을 내딛은 한소리회는 92년 10월 윤금이 사건 대책위의 중심적 역할을 했으며,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하는데 힘 이 되었고, 95년 경기도 자기기술학원 방화사건 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행사는 매춘의 확장과 매춘 여성의 저연령 등으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매춘의 실태를 고민하게 하는 자리였다. 또한 이들 매춘여성들을 위해 위협 속에서도 10년을 꿋꿋하게 버텨온 한소리회의 활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배경에 있는 공통점을 살펴본다면 그것이 사실과 다를 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결혼가정, 불안정한 가정 등 기능장애 가족이었으며, 아내구타나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폭력이라는 공포 속에서 성장했고, 성적학대와 강간 등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미국의 경우 매춘여성 중 약 90%가 매춘이전에 성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의 경우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70% 이상이 그 길로 들어서기 전에 성적학대를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특히 미리암 수녀는 '매춘은 필요악'이라는 의견에 반대하며 "약 1백만 명의 여성들이 매춘업에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25만 명의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매춘이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강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많은 사회 도처에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다. 우선 매춘여성을 원하는 '고객'과 포주, 섹스관광조직, 성을 상품화시키는 매체들, 화장실·전봇대·벼룩시장을 통한 구인광고, 포르노와 그 제작자들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충격을 주는 것은 뇌물을 받고 눈감아주는 경찰들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특히 미숙련 여성들이 겪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과 10대들을 위한 지원과 상담 그리고 공개보호소가 필요하며, 포괄적인 성교육과 아동들을 위한 탁아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전해투 농성장 공권력 투입 나현군 위원장 등 21명 연행 수사

18일 새벽 민주당사 전해투 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현장에 있던 해고노동자 21명이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경찰병력은 민주당측의 사전요청에 의해 투입됐으며, 연행사유는 '민주당 불법점거 및 퇴거불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자의 대다수는 대우정밀 해고노동자들이었으며

이들은 마포, 서부경찰서 등 5군데로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나현군 전해투 위원장과 박종석 대우정밀 해부투 위원장은 별도로 남대문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투측은 즉각 민주당에 대한 항의방문을 실시했으며, 명동성당 농성장을 임시 상황실로 이용하며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매춘여성 대다수 결혼가정 한소리회의 10년 보고에 이어 고미리암 수녀(성적으로 착취당하고 학대받은 여성들을 위한 쉼터)의 '매춘과 여성인신매매'에 대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매춘 문제의 실태와 심각성을 짚어볼 수 있었다. 미리암 수녀는 여성이 왜 매춘행위를 하는가에 대해 '돈을 벌기 위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매춘여성들의

직업소개소 인신매매 심각 또한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인신매매인데, 직업소개소를 통해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의 향락산업에 약 1만 명의 한국여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매춘을 유지시키는 시스

## <동선이네 추석이야기> "철거반원 들어올까봐 무서워요"

중학교 2학년인 동선이에겐 올해 추석도 별 재미없는 휴일일 뿐이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힘들고 무서운 시간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철거동거서는 하루가 멀게 계속해서 날라 오고, 아버지마저 병원에 누워 계신다. 그래서 요즘 동선은 밤이 더욱 무섭다.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신 집에 언제 철거반원이 들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동선이네 집은 봉천2동 재개발 지역. 송실대와 서울대를 잇는 고개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92년 봉천2동 재개발조합이 결성된 뒤, 1천9백여 세대에 달하던 이웃들이 모두 떠나갔고, 동선이네 가족만이 유일하게 남아 힘겨운 생존의 싸움을 벌여 나가고 있다. 동선의 아버지인 정광해(44) 씨는 속칭 노가다 건설현장의 미장일로 일당을 벌어서 가족들 생계를 꾸려왔다. 하루하루 일당을 벌어가며 3년간에 걸쳐 힘겨운 철거투쟁을 벌여온 그는 이제 생계마저도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다. 8월 20일 교통사고를 당해 벌써 한달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다. 오른쪽 다리가 낫기 위해선 최소 다섯달 이상 입원해 있어야 한다는 1차 진단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처음에 철거 소식을 들었을 때, 정 씨는 주민 대표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생업에 열중했지만, 주민들 사이에 정 씨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정 씨는 스스로 힘든 싸움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제 몸마저 성치 못한 가운데 정 씨는 시름을 놓지 못한다. 가족의 생계와 주거 걱정에 답답하다며 "우리엔 법적으로 가이주 단지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

니다. 이주비용으로 몇 백 만원을 주셨지만 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 식구 잠자고 생활할 공간만 있으면 그만입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개발조합측은 정 씨 가족에게 최후통첩을 보내왔다. 병원으로 정 씨를 찾아온 조합장 임한섭(구 의원) 씨는 "이사비용 줄 테니까 이주하라"는 종전 방침을 다시 전달했다. 17일 병상의 정 씨 앞으로는 특별등기 한 통이 날라왔다. "9월15일까지 자진 이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철거를 시행하겠다"는 강제철거 통지서였다. "부모는 병원에 있고 아이들만 단 둘이 생활하고 있는 오갈데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지금까지 정 씨의 가족은 주변의 도움으로 근근히 생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책은 막막하기만 하다. 정 씨가 병상에 누워 있고 부인은 입원수발을 위해 병원을 떠날 수 없는 처지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큰 딸과 막내 동선이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 피해자 진술권 확보키로 5.18 항소심 대책 논의

민교협, 민변, 5·18공대위, 전국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민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두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생업에 열중했지만, 주민들 사이에 정 씨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정 씨는 스스로 힘든 싸움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제 몸마저 성치 못한 가운데 정 씨는 시름을 놓지 못한다. 가족의 생계와 주거 걱정에 답답하다며 "우리엔 법적으로 가이주 단지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

## 행사와 동정

- 부상학생·전경 돕기 하루주점
  - 일시:9월20일(금) 오후 5시-자정
  - 장소:종로2가 파노라마
  - 주최:한총련 비상대책위원회(921-4090)
-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대위 결성 기자회견
  - 일시:9월20일(금) 오전 11시
  - 장소:종로성당 3층
  - 주요단체:민변, 전국연합, 민교협, 실천불교승가회 등
- 주한미군에 의한 이기순 씨 살인만행 2차 규탄대회
  - 일시:9월20일(금) 낮 12시
  - 장소:용산미군기지 제1경문 앞
  - 주최: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 '폭력없는 가정, 폭력없는 사회 만들기' 시민포럼
  - 일시:9월20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주최: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269-2962)
- 96년 KNCC 「언론광장」
  - 일시:9월20일(금) 오후 4시-6시
  - 장소:기독교회관 2층 강당
  - 내용:주제-〈사주를 위한 신문인가? 국민을 위한 신문인가?〉/발제-신문의 지면과 광고(김학수 서강대 교수), 신문의 소유와 판매(주동황 광운대 교수)
  - 주최: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742-8981)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원 간담회
  - 일시:9월21일(토) 오전 7시30분-9시
  - 장소:국회 본청 귀빈식당
  - 주최: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795-5918)
- 장애인복지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
  - 일시:9월21일(토) 오후 2시-오후 5시
  - 장소: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한국장애인복지공대협(521-5364)
- 제7회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
  - 일시:9월21일(토) 오후 2시
  - 장소: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문의:742-3180)
- 콘서트 '자유 2'
  - 일시:9월20일(금), 21일(토)
  - 장소:한양대학교
  - 출연:20일-강산애, 한영애, 꽃다지 등/21일-안치환, 시나위, 메이데이 등
  - 주최:한양대 총학생회, music center 21century
- 제4회 시민인권상 시상식
  - 일시:9월23일(일) 저녁 6시30분-7시
  - 장소:호텔 인터컨티넨탈(2층) 그랜드볼룸
  - 수상자:박석은 노동정책연구소장
  - 주최:서울지방변호사회(3476-0986)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9월 17일 이사
  - 주소:성북구 동소문동4가 278-2 백호빌딩 4층
  - 전화:921-4090
- 박찬운 변호사 미국 내 주소 이전
  - 주소:820 Kains ave #209 Albany, CA94706
  - 전화(팩스):510-525-7738

<이달의 주제>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③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테오반 보벤-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최저생활보장·차별금지' 등 요구 7년만에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 논의

장애인복지법이 89년 12월 30일 제정된 이후 7년만에 법개정을 위한 장애인계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공동대표 조일목, 장대협)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이미 작년 11월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측은 올 2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소위원회를 구성해 매달 1-2회 모임을 가져왔다. 장대협은 "장애인은 시혜 대상이 아닌 복지제도를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주체로서, 장애인관련법을 실질적 구체적인 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제·개정되어야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권리주체로 당당히 요구 조문순(장대협) 간사는 "정부에서 편의시설법 제정을 들고 나와 사실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은 이번 국회에서 다뤄질 가망성이 약간 희박해졌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개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제정의 의미를 가진 '장애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 이를 기본틀로 장애인고용촉진법·특수교육진흥법·편의시설법 등 제반 장애인관련법 개정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치대 등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복지기본법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기존 장애인복지법에는 지체·시각·청각·언어 장애 및 정신지체 정도로 구분된 데 비해 왜소증·자폐·치매 등을 장애인 범위에 첨가하고 있다. 또한 각종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청원권도 새로운 부분이다.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에 방이나 교육·직업지도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그 규정 자체가 추상적이었는데 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영

·유아에 대한 정기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국민의식변화를 위한 복지교육과목 설치, 사회통합을 꾀하는 법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관련기사 2면>.

### 민주당 항의방문, 규탄집회 전해투위원장등 2명 구속

민주당사 내 전해투 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된 뒤 사흘째, 민주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해투 대표단은 20일 민주당사를 방문하고 이기택 총재의 공식사과 등을 촉구했다. 전해투는 항의서한을 통해 △고소 등의 법적조치 취하 △구속자에 대한 당 차원의 해결 노력 △컴퓨터 등 전해투 집기와 사무용품 원상복구 △도덕성 회복 등을 민주당에 촉구하며 대화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전해투는 오는 23, 24일 민주당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기로 했다. 또한 울산, 마산, 경기지역 등 각 지역별로도 민주당 시도지부당사 방문 등 규탄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18일 연행됐던 21명 가운데 나현규 전해투 위원장과 박동석 대우정밀 해복투 의장이 힐튼호텔 및 민주당사 무단침입의 이유로 구속되고 19명은 불구속 석방됐다. 19일 자정 풀려난 서대영(대우정밀 해고자) 씨는 "민원인을 고발해 공권력을 투입시킨 것은 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 114 여성교환원 31% 직업병 한국통신노조 조계사 농성 1주일째

지난 7월 한국통신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안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노조의 정상활동에 대한 사측의 방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통신노조는 조계사에서 △산재대책 마련 △노조간부 고발, 징계, 감봉 등 노조탄압 중지 △통신분할 중단 △노동약법 철폐 및 개악음모 중단 등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이른바 '경견환장해'(일명 VDT 증후군)로 산재판정을 받은 주부노동자들이다. 96년 8월 현재 전국 검진대상인원 3천7백14명 중 3천3명에 대한 검진 결과 요주의자는 4백20명 전국 114 교환노동

자의 최소 31%가 △목이 열려 오고 돌아가고 △숨쉬기가 곤란하며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의 증세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95년 12월 기준 서울번호안대국 통계는 90년 대비 가입자 수가 1백30만 회선이나 증가한데 비해 교환인원은 1백15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통신 노조는 16일부터 산재대책 마련 등 위 4개항에 대한 특별단체협상을 요구하며 출근투쟁을 벌였으나, 사측은 18일부터 노조측의 사옥출입을 불법적으로 가로막고 있으며, 사측의 폭력행사로 노조 부위원장 허남희 씨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한 동티모르 망명가의 편지> 기아차 4만5천대 이름만 바뀌 '인도네시아 국민차로 수출' 항의

조지 J. 아디트존드로(뉴캐슬 대학 동남아시아 사회학과 겸 인류학과 강사, 저널리스트) 씨는 인도네시아 인으로 현재 호주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8월말 인도네시아 민주화 운동과 동티모르 독립을 지지하는 아시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뒤늦게 접수·소개한다<편집자주>.

결론적으로 나는 기아차와 토미 수하르트와의 특별 계약이 인도네시아 국민과 동티모르 국민, 그리고 한국민들에게 엄청난 모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 왜냐하면 이 계약은 인도네시아 헌법 13조도 명시되어 있듯이 외국 수입차에 부과하도록 된 관세를 탈취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는 큰 모욕이 되는 것이다.

96년 8월 29일, 홍콩에 본부가 있는 아시아 학생연합이라는 민간단체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영사관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이 시위는 한국의 기아자동차가 4만5천 대의 기아차를 인도네시아의 국민차로 수출을 개시한 데 대해 항의한 것이었다.

또한 한국에서 100% 완성 조립된 한국차가 인도네시아의 국민차로 명명된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는 모욕적인 사실이다. 더구나 21년 전 동티모르를 무력으로 침공한 인도네시아에 대해 항하여 처절한 독립투쟁을 전개해 온 티모르 국민들에게도 이번 계약은 참으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이 계약은 수하르트가 부와 정치적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며, 그로 인해 티모르의 독립투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소위 재벌이라는 거대기업들의 총수들이 광우화살과 5,6공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운동탄압과 수하르트가와 한국재벌(기아차)의 정·경유착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라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 100% 완전 조립된 기아차가 인도네시아의 국민차가 되었다는 것 또한 모순이다. 더욱이 토미 수하르트에 의해 한국에서 수입될 이 차의 이름이 대통령인 아버지의 이름을 따 "티모르"라고 붙여진 것은 더 큰 모순이다. 나는 한국이 일제 36년간을 민족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그 소중한 역사적 경험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식민화를 지지하는 신제국주의 국가들의 한 성원이 되었는지를 묻고 싶다.

###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 장애인의 범위를 지체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청각 또는 평형장애, 음성 또는 언어기능장애, 지능장애, 중요기관기능장애 등의 내부장애, 안면상장애, 왜소증, 정신지체, 자폐, 정서장애,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사회적 장애를 규정함(안 제2조)
- 각종 복지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안 제6조)
- 대통령직속으로 '장애인복지국가조정위원회'를 두어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정부 각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대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도록 함(안 제7조)
- 분만과정과 영·유아기에 발생하는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하여 3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2회 이상의 정기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 장애인 교육에 있어 영·유아보육, 유치원교육, 초등학교교육, 중등학교교육을 의무, 무상교육으로 하고 고등학교교육은 무상교육으로 받을 권리를 명시함(안 제16조)
- 장애인의 적절한 직업진로 개발을 위한 작업지도, 적절한 직업선택을 위한 직업평가 및 직무분석, 직업평가에 따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하며 취업 후 원활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후지도를 실시하도록 직업재활체계를 명시함(안 제19조)
- 영금이나 공공부조 등에 의하여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간호, 이동, 부양, 훈련 등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생계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간호수당, 부양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4, 제25조)
-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변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등 정규학교 교육과 사회교육과정에 복지교육과목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8조)
- 보장구의 제조 또는 수리업체는 보장구 기사를 반드시 두도록 함(안 제47조)
-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학대의 금지, 시설설치에 대하여 반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64, 제65조)

### ○인권간행물○

- 「노동과 건강」 통권42호-노건(866-9175)  
· 주요내용: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와 투쟁/정부의 산업안전진화 계획안에 대한 산재추방운동계의 대응/의료보험통합과 의료보장/산재동향 등. 81쪽
- 「세상열기」 9월호-청년정보문화센터(516-1542)  
· 주요내용:인도네시아와 터키에서의 민중 투쟁/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말한다-생태 위기 시대/노동법 개정은 또 하나의 역사바로세우기 작업등. 115쪽
- 「교회와 인권」-천주교 인권위원회(777-0643)  
· 주요내용:하루감옥체험기/연세대 사태의 인도적 해결을 바란다/미래의 꿈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등. 8쪽
- 「사월혁명회보」 제45호-사월혁명연구소(888-3682)  
· 주요내용:한총련 강경진압에 대한 우리의 입장/보수 지배체제의 대동단결/한총련 사태 언론보도의 교훈/세계자본주의와 한국통일의 전망 등. 32쪽

1996년 8월 28일

<이달의 주제>  
희생자들에게 대한 배상③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테오반 보벤-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송광영 추모비'를 찾아라 새벽 틈타 중장비로 철거...경원대측 "모르는 일"

경원대학교 교정에 있던 '송광영 열사 추모비'가 사라졌다. 22일 새벽 누군가에 의해 제거된 것이다. 23일까지도 추모비의 행방은 묘연하며, 소행인이 누구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추측만 무성한 상황이다. 현재 의심의 표적은 학교 당국. 사건이 교내에서 발생했다. 중장비가 투입됐으며, 외부인이 추모비를 제거해 갈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무엇보다 목격자 진술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들이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연세대 사태 이후 학생들에게 불리한 분위기, 소강상태에 빠진 학원민주화투쟁, 최근 총학생회 간부 4명 구속에 10명 수배상태라는 배경도 무관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당일 새벽 학교측이 의도적으로 추모비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차단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21일 밤 C동(추모비 앞의 건물)에 있던 학생들은 자정 전에 경비원에 의해 모두 쫓겨났다고 한다. 이날 따라 경비원이 "경찰이 치고 들어올 것 같다"며 학생들에게 귀가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C동 경비원은 상관의 지시에 따라 D동 건물로 이동, 그곳에서 야근을 했다. 이런 가운데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추모비 철거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1일 근무했던 학교 정문 경비원들은 "기증기가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며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모든 차량이 통제된다"고 말해 엇갈린 진술을 줬다. '송광영 열사 추모위원회'와 학생회측은 추모비 제거 사건을 독재정권으로의 회귀와 학원탄압을 노리는 세력들에 의한 소행으로 단정 짓고,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추구하고 나섰다.

경관은 "이번 사건은 포크레인과 중장비를 동원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학교 당국과 학교 관계자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측 관계자는 "현재까지 아는 것이 없다. 차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송광영 씨는 85년 9월 전 두환 독재 정권에 항거하며 분신, 그 해 10월 사망했다. 추모비 건립은 87년 경원대 학원민주화 투쟁과정에서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으로 당시 학교측과 재학생, 동문, 유가족 등의 모금으로 2천여만원의 경비를 들여 건립되었다.

### 공권력 성추행 항의 여성계, 총리에 서한

이효재 정대협 대표 등 여성계 인사 1백42명은 20일 각각 이수성 국무총리, 김우석 내무부 장관, 정무제2장관 앞으로 '공권력에 의한 여학생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건의문'을 발송했다. 건의문은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연행과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성추행이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성폭력범죄라는 여성계의 강력한 항의

### 희생자·열사 합동추모 제7회 추모제 열려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희생된 열사·희생자들에게 대한 합동추모제가 지난 21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유가족, 재야인사, 시민등 7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합동추모위원회(위원장 이장복, 합추위)가 주관한 이날 추모제는 전태일 씨 등 노동자 70명, 김상진 씨 등 학생 57명, 최종길 씨 등 의문사 44명을 비롯한 총 2백52명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대형 제단을 설치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참석자들은 대회 선언문에서 "96년 이 가을,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양심수, 칠천만 겨레의 희생으로 이루어 낸 역사의 발전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음에 분노한다"면서 최근의 안기부법, 집시법 등의 개악 움직임 등을 강력히 비난했다. 또, 이들은 △반민주적, 반통일적인 모든 악법의 철폐 △열사와 희생자, 민주화 운동 관련 인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은 시인이 추모시를 낭독했으며, 연희때 담판, 아라리요 등이 부활곡과 노래공연을 꾸몄다.

### 주요 공판 안내

- 24일(화)
  - 심민규(선고), 오전10시, 국보법, 7단독, 523호
  - 임현준의 2명(선고), 오전10시, 집시법, 11단독, 526호
  - 김규식(속행), 오전11시, 국보법, 11단독, 526호
  - 여성오(선고), 오후1시, 화염병처벌법, 2단독, 321호
  - 원용호의 1명(속행), 오후2시, 국보법, 합의6부, 424호
- 25일(수)
  - 김병목(선고), 오전10시, 국보법, 합의1부, 416호
  - 최진수(선고), 오전10시, 국보법, 합의22부, 319호
  - 이원구(선고), 오전10시, 국보법, 합의22부, 319호

## <고 장현구 군 아버지 장남수 씨> "을 추석엔 아들 묘까지 돌봐야 해"

경원대 학원민주화투쟁의 정신적 버팀목이던 장현구(경원대생, 분신사망) 씨. 장례가 끝난지도 다섯 달이 넘었고, 이제 그 이름 석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 싶다. 아들의 죽음 앞에 누구보다도 분노했던 아버지 장남수(54) 씨도 어느덧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와 있다. 무려 1백34일, 넋 달이 넘도록 아들의 시신을 땅에 묻지 못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기에 아들을 보낸 장 씨의 사무침은 유달리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남수 씨는 몇 번이고 되뇌인다. "잊을 건 잊어야 돼"하면서.

### "건전한 95% 때문에 우리사회가 유지돼"

장남수 씨는 30년이 넘게 화원을 해 오고 있다. 가락동에서만도 벌써 10년째 예닐곱평 남짓한 자그마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 씨에게 욕심이 없다. "다 사리사욕만 차린다면 사회가 지탱되기 힘들지. 건전한 95%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게야" 그의 소망은 뒤에서 열심히 성원하는 것이라. "힘과 길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싶소."

장 씨는 지난 몇 달 간의 어려움 속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을 잊지 않는다. 특히 아들의 죽음 이후 장례가 끝날 때까지 음양으로 도왔던 김해성 목사에 대한 감사는 남다르다. 김 목사가 외국인노동자 문제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땐 포박포박 범정을 찾아다녔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김 목사의 교회에 간다. 신자가 아니라면서도 장 씨는 "김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예배에도 참석하게 됐다"며 허허 웃는다.

### 연세대 사태 때는 학생들 걱정에 신촌 배회

지금도 장 씨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경원대학교의 앞날이다. 아들의 장례식 이후에도 경원대 문제가 여전히 어둔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1학기 내내 팽팽하게 전개돼 오던 학교측과의 줄다리기는 연세대 사태 이후 학생들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바뀌었고, 간간이 제기되던 협상태이불도 치워진지 오래. 오히려 학교측의 재고발 조치로 인해 방학중에만 4명이 구속되었고, 10명이 수배생활에 들어갔다.

장 씨는 "비록 타협하는 방법을 모르지만 아직도 학생들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다"며 안타까워 한다. 가끔씩 찾아오는 아들의 후배들에게도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장 씨는 지난달 연세대 사태 때, 자식같은 학생들이 공권력에 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연세대 앞을 배회하고 다녔다고 한다.

### 아들 유언 따라 "해야할 일은 할 것"

"유족단체를 찾아가 보라." 죽기 직전 아들 현구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던다. 장 씨는 여건이 되고 옳다는 판단만 선다면 모임에 동참해 "해야할 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 장남수 씨의 추석은 예년보다 바쁘다. 선산에 모신 조상 묘도 살펴야 하고, 마석 모란공원에 잠들어 있는 아들 현구의 묘소까지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 주/간/인/권/호/름

(96년9월16일부터 9월23일까지)

### <16일>

민변, 안기부법 개정 반대 성명/최창희 씨 등 시민 6명, 자신을 폭행한 경찰 광주지검에 고소/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 북한사회과학원 발간 『이조실록번역본』을 무단복제·배포한 혐의로 윤영수(41·출판업) 씨에게 징역1년, 징유2년 선고

### <17일>

안기부, 재경원 예비비의 72x(2천7백89억8천8백만원)를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 명목으로 사용/검찰 '한총련 8·15 친북난동 사태' 중간수사 결과 발표, 구속자 4백65명 가운데 4백38명 구속 기소/서울대 총학생회 간부 20여명, 서총련 서울대 집회때 경찰의 교내 헬기 비행 등 공포분위기 조성/항의 4일간 시한부 발생 단식 농성/부산대 교수회, 경찰의 대학 난입 항의 성명

### <18일>

정부와 신한국당, 화염병 사용자 처벌 7년이하 징역으로 대폭 강화키로/서울지검 공간2부 손영기 검사, 밀입북 한총련 대표 정민주 씨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법원내 시위 혐의로 이광호(22·인천시립대 국문과) 씨 등 피고인 3명에 법정최고형인 징역 1년 각각 구형/마포경찰서 민주당사에 경찰력 동원 건물 지하 1층에서 농성 중이던 전해부 해고노동자 21명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

### <19일>

노개위, 모든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과 노조 정치활동 허용방안 합의/기업체 감원바람 산업체 근로학생에까지 번져, (주)경남모직 산업체 근로학생 1백29명 퇴사/연세대, 한총련 사태 관련 총학생회장의 2명 제적, 11명 무기정학 등 재학생 14명 중징계 결정

### <20일>

노량진 경찰서, 연세대 한총련 집회 주도 혐의(국보법 위반)로 중앙대 총학생회장 백주선 씨 구속

### <21일>

민주노총, 노개위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전국 4곳서 노동법 개정투쟁승리 결의대회/서울경찰청,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청학련 조동위 정책조정실장 김용지(경희대 교육대학원 4학기) 씨 긴급구속

### <22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한국 중국에 이어 세계 2번째 무기수입국이라 보도

### <23일>

서초구 보건소 내 장애인 전문치과 최초로 개원

### 해설

지난주 국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편에선 대통령의 '루스벨트 국제 장애인상'을 수상을 놓고 안팎의 잡음이 일기도 했다.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들은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장애인 문제는 시혜가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대통령의 수상이 장애인계의 비난을 샀던 이유는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여전히 전시행정, 시혜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정착 요구되는 것은 편의 시설 몇 개보다도 정책입안자들의 인식 전환이다.

<이달의 주제>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③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테오반 보벤-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양심수 석방 서명서 압수 일본 인권단체 사무국장, 감금 뒤 강제출국

법민련 관련자 석방과 한총련 탄압에 항의하는 서명지를 한국정부에게 제출하기 위해 방한한 일본 인권단체 사무국장인 김포공항에서 공안요원에 의해 서명부를 압수당하고 호텔에서 감금당한 뒤 곧바로 강제출국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법민련 관련자를 구원하는 회(대표 덴 히데오, 일본 참의원 의원, 법민련연구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법민련연구원회 코치 토오루 사무국장은 일본 각계 인사 1만5천여 명이 서명한 법민련 관련자 석방 요구서명과 2백20개 단체와 저명인사가 서명한 한총련 탄압에 항의하는 단체·저명인사 서명을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안요원에게 압수당했다. 그뒤 공안요원이 동행한 상태에서 호텔로 갔고, 다음날 김포공항에서 출국하는 순간까지 공안요원들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공안요원들은 김포공항에서 5시간이나 코치 사무국장을 감금했으며,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양심수 석방운동 상황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했다고 한다. 특히 사무국장에게 서명용지를 들이갈 때 반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24일 재일한국인 정치범을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법민련관련자를 구원하는 회·한국인권국제기금센터는 서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정부측의 반민주적인 행위를 규탄했다. 이들 세 단체는 "이러한 공권력 남용행위는 한국에서의 민주화 실현정도가 어느 수준이며 인권상황이 어떠한가를 충분히 가늠케 한다"며 "한국정부가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양심수 석방운동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폭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서명을 모으고 해당 당국에 제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당연한 권리이며 국제인권규약이나 대한민국헌법에도 인정되는 권리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 "추모비를 갖다놔라" 박정기씨, 무기한 농성

도난당한 '송광영 추모비'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박종철 열사 아버지인 박정기(유가협 회장) 씨가 24일 부터 경원대 교내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24일 경원대를 방문한 박정기 회장은 추모비가 뒤편 자리에 농성장을 마련한 뒤, "추석 기간은 물론 추모비가 원상복구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선언

###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24일 오후 서울 기독교연합회관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시안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의 인도(9조 1항2호) △의료기관으로의 인도(9조 1항3호) 등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동 등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29,30,31,36,37조). 또한 △피해자의 절차참여권(10조 3항) △재판과정에서의 임시처분 신청권(15조 1항)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한 의견 진술권(20조 1항) 등을 조문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충분한 진술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이상덕 한국여성의 전화 부회장은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과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며 "이 법의 제정은 가정폭력이 중대범죄임을 선포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과 달리 반복적,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 여성의 14.4%가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여성이 자녀와 함께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폭력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폭력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가족의 해체, 나아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는 등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이다.

추석연휴로 <하루소식> 26~28일자는 휴간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10월 1일자로 뵙겠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6년 9월분 총목차(718-734호)

호	월	면	기사 제목
718	9/3	1	"영화속의 인권, 인권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초 개최/"정권안위에만 부심", 정의구현사제단 시국성명/"노조와해 맞서 싸울터" 현중간부 단식농성
		2	교환원 '정년차별인정'에 항의집회/폭행 지시·방조 혐의로 대우해고자 김우중회장 고소/주간인권호름
		3	<자료> 제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719	9/4	1	이주계획 없이 서초구청 철거명령, 서초구 반포 2동 53세대 생존권 위협/또 다른 조직사건 부산외대 총학간부 11명 연행
		2	<자료> 제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② "국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720	9/5	1	"한총련 통일노선, 민주사회 견해의 하나" 시국토론회, 창구단일화 원칙 반박/국제 비정부단체에 중재요청 계획,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씨 송환돼야
		2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강력 반발/인터뷰: 통신연대 김영식 대표 "사용자 자체정화기능 민어야"/현대판 연좌제, 남편 복역 이유로 교사임용 탈락
721	9/6	1	10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노사관계법 개정방향 공동선언문 발표/공개조직 활동 7명 연행, 서울대에 국청년선봉대/AI, 성명서 발표 "한총련 사태 노동운동계 확산 우려"
		2	세계의 인권⑥-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722	9/7	1	대학자율성 침해 넘어 정치도구화 우려, 연세대 교수들, 학생 의사소통 공간 차단/KNCC 시국성명, "김정권 보수회귀 우려"
		2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① -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양해우 사무국장
		3	창간 3주년 축하·격려 글모음-<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4	창간 3주년 축하·격려 글모음-<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전국연합, 전농집회 금지항의 서명
723	9/10	1	국보법 사면자 부산예전 전승일씨, 89년 구속 문제삼아 2주만에 교수직 박탈/한국여성민우회, 평등한 혼례문화토론회 개최/전해두 명동성당 농성 93일째
		2	이대 총학생회, 인권·북한경제·환경을 주제로 시사강좌/AI 조사단 9월 10-26일 방한/주간인권호름
724	9/11	1	이전 집회도 경찰 손아귀에, 여의도 농민집회 경찰 무력시위 속 축소/전국연합, 안기부법 개악 중단을 정기국회에 촉구/영광 핵발전소 반대 시위 박재완 신부 등 항소심
		2	사회단체 노동악법 저지 앞장, 16일 사회개혁 공대위 발족/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동두천 이기순씨 살해사건 진상규명 촉구/한총련 명동성당 농성 26일째, 현석호씨 인터뷰
725	9/12	1	16-21일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열려/법민족대회 참가 여학생 사망/주요 공판 안내
		2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726	9/13	1	전교조 합법화 산 넘어 산, 교사노동권 둘러싸고 전교조·교총대립/이기순 씨 살해범 미군, 14일 동두천서 규탄집회
		2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 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 기본원칙
727	9/14	1	여학생들 "성추행 당했다", 연세대 사태 인권침해 1차 조사결과 발표/<연세대 피해학생 증언> 나는 이렇게 당했다
		2	6월 항쟁 범국민사업추진위 결성키로, 기념사업에서 청산투쟁까지 다양한 계획/과거청산 작업 시급, 전국연합 안기부법 개정반대/이기순씨 살인사건, 미 대통령 사과해야
728	9/17	1	루즈벨트상 수상 낮 뜨거워, 김 대통령 집권4년 장애인정책 오히려 후퇴/문민정부 장애인죽음 잇따라, 이덕인·최정환·백원옥 씨등
		2	민족민주열사 추모 및 기념주간 선포, 21일까지 명동·청계천 일대 행사/국보법 무죄판결 자료 집 발간/주간인권호름

### <인권하루소식> 96년 9월분 총목차(718-734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729	9/18	1	추석 앞두고 쫓겨난 주민들, 반포2동 53세대 거주지 전격 철거/사상통계·검열 강화 밝혀, 검찰 연세대 사태 중간결과 발표
		2	취학전 1년 유치원 무상교육 요구, 연대모임 교육기본법에 참가돼야/<자료>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선언/“교원노동권 인정해야” 노동기본권 확보선언 교사 6천명 참가/장애인상 수상철회 요구, “장애인, 외교적 희생물”
730	9/19	1	이기순씨 살해, 미국사과 촉구, 20일 용산기지 앞 살인만행 2차 규탄대회/천주교 인권위 「평화 만들기 1」 콘서트/공권력 남용 시민이 막는다, 광주시민 총기남용 경찰과 고소/이기순씨 살해 규탄집회 스케치 기사
		2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② ‘푸른영상’ 김태일씨-통일을 향한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
731	9/20	1	매춘! 필요악인가? 대책마련 시급, ‘매춘여성과 함께’ 한소리회 10년 맞아/전해투 농성장 공권력 투입, 나현균 위원장 등 21명 연행수사
		2	<동선이네 추석이야기> “철거반원 들어올까봐 무서워요”/피해자 진술권 확보키로, 5·18 항소심 대책 논의
732	9/21	1	‘최저생활보장·차별금지’ 등 요구, 7년만에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 논의/114 여성교원 31% 직업병, 한국통신노조 조계사 농성 1주일째/민주당 항의방문·규탄집회, 전해투 위원장 등 2명 구속
		2	<한 동티모르 망명가의 편지> 기아차 4만5천대 이름만 바꿔 ‘인도네시아 국민차로 수출’ 항의/<자료>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인권간행물
733	9/24	1	송광영 추모비를 찾아라, 새벽 틈타 중장비로 철거...경원대측 “모르는 일”/공권력 성추행 항의, 여성계, 총리에 항의서한/제7회 희생자·열사 합동추모제 열려
		2	<고 장현구 군 아버지 장남수 씨> “올 가을엔 아들 묘까지 돌봐야 해”/주간인권호름(9월16일부터 9월23일까지)
734	9/25	1	일본 인권단체 사무국장, 입국하자 공안요원에 의해 양심수 석방 서명서 압수당하고, 강제출국/박정기씨, 추모비 탈취에 항의해 무기한 농성/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2·3	9월 총목차(제718호부터 제734호까지)

# 인권하루소식

## 96년 10월

(제735호 - 제756호)

**<인권하루소식>**  
**바른정보 「참세상」 통신서비스 개시**  
 팩스가 없어서 <인권하루소식>을 못보신 독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01410 바른정보 「참세상」으로 <인권하루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참세상 ID가 없어도 '손님'이나 'GUEST'로 \* 인권하루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접속방법 : 01410망에서 참세상을 입력하고 56.인권하루소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59. 인권철폐인란에는 한총련 인권유린 사례가 담겨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 -**  
**국가보안법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주요 사건 자료집**  
 이 자료집에는 국제사회주의자 사건과 최근의 박종철씨 사건 등 모두 7개의 무죄판결 사건이 실려있으며, 판결문과 변론요지서, 신문기사스크랩 등이 다양하게 담겨져 있어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가격 1만원 · 연락처 715-9185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일시 :11월 2-8일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창살없는 감옥’이라 불리는 보안관찰법. 이 법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거주·이전, 사상·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89년 7월 국회의원 서경원 씨 사건으로 구속돼 7년간 복역하고 지난 7월 9일 단기 출소한 방양균(42·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는 최근 광주 서부경찰서로부터 출두명령서를 받았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조작’ 진상부터 규명돼야 그는 출소할 때 ‘보안관찰 처분대상자로 신고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은 이래, 줄곧 ‘신고하러’는 시달림을 겪어 왔다. 이에 지난 9월 20일엔 직접 광주서부경찰서를 찾아가 “내 죄는 45일간 잠안재우기와 가혹행위 등을 통해 조작한 범죄”라

며 무죄를 항변했다. 7년이 지나도록 허리가 아파 잠을 못이루고, 하루 저녁에도 심하면 3번씩 약통을 끈다는 그는 “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도 아니고 신고할 의무도 없다”며 “법으로 처벌하면 당연히 맞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가족들까지 피해 입어 보안관찰법은 사실상 모든 공안사범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는 보안관찰법 처분대상자를 “보안관찰해 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받은 사실이 있는 자”(보안관찰법 3조)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93년 5월 출소한 임종석 씨는 출소 직전부터 현재까지 관할경찰서 형사로부터 고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당

할 수 있다’는 협박과 수없이 날라오는 출두명령서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또한 그는 “찾아오는 형사들과 전화 때문에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관찰법 벌미 2명 구속 사회안전법의 대체입법인 보안관찰법은 89년 제정되었는데,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 받은 예는 아직 없다. 지난해 12월 문규현 신부가 이들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기소를 받은 바 있지만 현재 기소중지 상태이다.

보안관찰법을 벌미로 구속된 경우에는 91년 강기훈 무죄석방운동을 벌이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와 94년 비전향 출소장기수 고 윤기남 씨의 강제식과 관련한 기세문 씨의 경우가 있다.

보안관찰법에 대해 이창호(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보안관찰법은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에게 또다시 이중의 굴레를 씌우고, 그 굴레를 중신토록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법”이라며 한마디로 국민의 일상적 삶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통제하는 사상탄압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문규현 신부는 “집단적으로 폐지운동을 벌이지 않는다면 보안관찰법은 폐지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 송광영 추모비 찾기 온 힘유기협, 7일째 천막농성

‘송광영 추모비’를 찾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박정기 회장의 천막 농성이 일주일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들과 졸업생, 재학생들도 추모비 되찾기에 온 힘을 모아 나가고 있다.

경원대 민주동문회(회장 양정우)는 신문광고를 통해 이번 사건을 알리고 동문들의 모임을 확산시키기로 했으며, 1일 저녁 8시 학교를 방문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재학생들도 1일 오후 3시 교내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30일 오전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등 유가협 회원들은 김원섭 총장 등 학교관계자를 만나 추모비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는 최근 공안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며 “수구와 독재를 부활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 행위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국연합은 이어 △학교당국의 책임 있는 태도 △경찰의 적극 수사 △관련 당사자들의 엄중 문책과 사법처리 등을 촉구했다.

### 주요 공판 안내

- 10월1일(화) 이광철, 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속행, 311호
  - 10월2일(수) 문형건, 국보법, 오전10시, 합의7부 속행, 423호
  - 10월4일(금) 이승환, 국보법, 오전10시30분, 합의23부 신건, 311호
  - 황윤미, 국보법, 오전10시, 5단독, 속행, 519호
  - 강순정, 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속행, 311호
  - 허인희, 국보법, 오후2시, 9단독 속행, 317호
  - 양귀성, 국보법, 오후4시, 합의23부 속행, 311호
- 이상 서울형사지법

### <인터뷰> 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 씨 "한국의 인권상황은 충분히 심각하다"

지난 9월 10일부터 26일까지 한국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앰네스티(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36) 씨는 이번으로 5번째 한국을 방문했다. 17일간의 긴 일정을 마쳐갈 무렵, 숙소에서 맥베이 씨를 만나 조사과정에서 느낀 소감과 활동 등을 들어보았다.

-91년부터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번 방문에서 특별히 느낀 점은?  
=매번 친근함이 더해가고,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가는 것을 느낀다. 또한 한국 인권단체들과 AI와 긴밀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기억에 남는 만남은?  
=장기수 김선명, 안학섭 씨이다. 40여 년이 넘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는데 큰 충격을 받았고, 그럼에도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했고 사려가 깊은데 다시한번 놀랐다. 무척 매력적인 사람들이었다.

-대전교도소를 찾아갔으나 방문을 못했다고 들었다  
=방문에 앞서 법무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승락한다는 답신을 받았다. 그러나 대전교도소측은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고, 서울에 올라와 이를 법무부측에 알리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오히려 알 수 없다는 식이었다.

-이전과 비교할 때 최근 김영삼정권 들어 변화는  
=일시적일지는 모르나 최근 들어 경찰폭력이 너무 심하다. 많은 사람들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적어도 경찰을 상대로 인권옹호에 대한 훈련을 받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한국 인권상황 중 주 관심사는 무엇인가?  
=앞서 말한 경찰폭력과 국가보안법 등이 주 관심사이다. 국보법에 의한 구속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점수를 준다면?  
=AI의 원칙상 다른 나라와 인권정도를 비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인권상황은 정부에 얘기할 만큼 충분히 심각하다.

-한국정부에 권고하고 싶은 말은  
=우선 국가보안법 개정이다. 또한 경찰폭력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5·18 재판등 불처벌문제에 피해자 배상과 진상규명을 주력할 것을 당부한다.

-국내 인권단체들에 대한 소감은  
=그간의 너무나 많은 성장에 감명받았다. 해운 일의 규모에도 역시 감명을 받았다. 특히 국제연대사업이 굉장히 성장한 것 같다. 인권운동에 있어 연대사업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점수를 준다면?  
=AI의 원칙상 다른 나라와 인권정도를 비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인권상황은 정부에 얘기할 만큼 충분히 심각하다.

**사라진 추모비를 찾습니다**  
9월 22일 새벽, 경원대 교정에서 탈취된 송광영 열사의 추모비를 찾습니다. 3미터 높이에 달걀모양의 석조 추모비를 발견했거나 사진 당일 현장을 목격한 분은 연락바랍니다.  
연락처:0342-750-5446(경원대 총학생회)

### 주간/인권/초/름 (96년9월23일부터 9월29일까지)

<23일>

경원대 송광영 열사 추모비 22일 새벽 철거된 것 밝혀져/대법원, 내년부터 형 확정 전까지 불구속재판 원칙을 확대 적용하는 쪽으로 형사소송규칙 개정기초/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제4회 시민인권상 수상/전남 영광·전북 고창 주민들과 전국 환경단체 회원 등 1천여명, 영광 원전 5·6호기 건축허가 무효화 촉구 시위/노랫말을 바꿔 북한가요를 부른 혐의 등으로 경찰이 대학생 10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됨/세계은행 관계자, 농촌의 빈민 8억명이 매일 굶주리고 있다고 발표

<24일>

범민련 관련자를 구원하는 회 등 지난 22일 사무국장 코치 토오루 씨가 범민련 관련자 석방 및 한총련 탄압에 항의하는 서명서를 김포공항에서 공안요원에게 강제압수당했다고/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가정폭력방지법(가칭) 시안 발표/김기수 검찰총장, 기소 전에는 피의자 혐의내용이나 소환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보건복지부, 의료사고 면책범위를 대폭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예고/서울지법 형사2단독 신형근 판사, 교내 시위 등을 이끈 혐의로 구속된 여성오(24·서울대총학생회장) 씨에게 징역 2년 실행 선고/5·18 관련 단체들과 민변, 12·12와 5·18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적극 행사하기로/국방부, 무장간첩 침투사건과 관련해 덤스파리트 훈련의 재개 방안 적극 검토중/재정경제원 발표, 관련단체에 대한 내년도 배정액은 모두 1백10억원으로 올해의 40억원에 비해 125% 증액/미국 공화당, 이민개혁 법안에서 불법이민자 자녀들의 공교육 혜택을 박탈하는 조항 삭제키로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인수),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제 범민련 남쪽본부 정책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 선고/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경수), 지난해 8월 여대생 방북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이원구(25) 씨에게 징역 2년6월 실행 선고/경기 고양경찰서, 자신을 때리는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라화순(37) 씨 긴급구속/노동부 발표, 지난 7월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시작이후 신청자 계속 증가

<26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료, 94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안기부가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이유로 실시한 우편물 검열은 모두 15만4천7백1건이며,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등의 목적으로 전화통화를 중단시킨 사례는 같은 기간 모두 4천1건

<29일>

서울고법 특별11부, (주)대덕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제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도급계약과 같이 회사경영과 직접 관련된 일이라도 단체협약에 노조와 사전협의하기로 규정돼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한다고 판결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일시 :11월 2-8일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인터넷에서 벌이는 검열반대

##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서명 작업

지난해 프랑스의 핵실험이 한창일 때, 통신 공간에서는 핵실험 반대 서명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됐다. 당시 서명운동은 단 세 사람의 일본 동경대생에 의해 시작돼 전 지구상으로 확산되면서 인터넷의 위력을 확인시켜준 사건이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상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 대표 김영식)가 제안한 이번 서명운동은 정보통신에 대한 검열 반대와 통신 민주주의 확보의 일환으로 시작했다.

시민연대는 지난달 정부가 한총련 CUG(전용정보통신망)을 폐쇄하자마자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토론공간의 폐쇄는 민주적 토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며 "더 이상 정보통신상에서의 검열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CUG의 폐쇄는 명백한 '감청' 행위에 해당하며, 이미 증거물로 확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열람하지 못하게 지워 버린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 지적하면서, △CUG 안에서의 토론을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 및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해 보호할 것과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정보기본권을 보장할 것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한총련 시유지를 즉각 복구할 것 등을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서명운동과 동시에 △한총련 시유지 폐쇄의 부당성 홍보 △시

민연대의 홈페이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하기(http://kpd.cybercom.co.kr/cuac) △모든 게시물의 제목 혹은 본문에 「검열반대」 넣기 △청와대 경찰청 등에 항의 메일 보내기 등을 시민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시민연대의 김영식 대표는 "CUG 폐쇄 사건은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 서명운동을 벌이게 됐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통신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고 올바른 통신정책과 통신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 밝혔다.

- ◆항의 메일 보낼 곳◆  
· 하이텔  
청와대-bluehs1, bluehs2  
경찰청-NPA1, NPA2  
· 천리안  
청와대-ZBLUEHS1  
서울지법-ZPISDC  
경찰청-ZNPA1, ZNPA2

## 대학생 인권운동 출발 1일 인권연대 창립총회

작년 말 이덕인 씨 죽음에서부터 올해 8월의 한총련 인권유린 사태 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한국사회에서 인권의식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권운동을 시작하려는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있어 주목을 끈다.

이들은 서울대, 이화여대, 한신대 인권모임을 중심으로 「인권운동대학생연대」(대표 박신혜, 인권연대)를 결성하였으며, 1일 오후 6시30분 서울대 법대 강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총회는 이대훈(참여연대 사무국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씨의 축사가 있었고, 약 40여 명이 참석해 대학생 인권운동의 첫 출발을 다짐했다.

박신혜(이화여대 94학번) 대표는 "대학생들의 인권교육활동, 인권정보활동, 인권연수활동 등을 일상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인권연대에는 동국대, 계명대, 부산대 등이 추가로 가입할 예정이다.

## 사라진 추모비를 찾습니다

9월 22일 새벽, 경원대 교정에서 탈취된 송광영 열사의 추모비를 찾습니다. 3미터 높이에 달걀모양의 석조 추모비를 발견했거나 사진 당일 현장을 목격한 분은 연락바랍니다.

연락처:0342-750-5446(경원대 총학생회)



### 국제무대에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정부가 OECD에의 조속한 가입을 위해 지난달 26일 열린 OECD 이사회 회의 직전에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요강 논의에 관한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무리를 빚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에 따르면 문제의 허위보고는 현재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교사단결권 보장 부분이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교사의 단결권에 대해서 노개위 법안소위 위원인 공익위원들은 교사의 노동조합 결성권리, 단체교섭권 및 교원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정부는 OECD에 제출한 '노동권 문제 관련 설명서'에서 "경제불황에 더불어 최근 북한의 잠수정 침입으로 인한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노사관계 개혁을 단행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동시에 노동권 문제가 한국가입의 장애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측은 "노개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교사의 단결권에 관한 사항에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공익단체만을 허용하고, 교원단체별로 조직할 수 있으며, 제한적 교섭권만 인정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개위 불참 의사를 밝히는 것을 비롯해 노동부 및 노개위 합의 방문집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OECD 이사회 산하

「고용·노동·사회 문제 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의 가입을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했는데, 유럽연합 국가 및 노르웨이 등 11개 국가는 공식발표된 노개위의 건의안 또는 정부안을 검토·보고한 뒤에야 한국가입을 최종결정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일본·호주 등 9개 국가는 노동법 문제와 상관없이 한국가입 결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쨌든 한국가입에 대한 최종결정은 11일 이사회 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국제무대에서의 허위보고는 이번 뿐만이 아닌데, 지난 1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최초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실제도 없는 「어린이·청소년권리 국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거짓보고한 바 있다.

### 4기 사회복지학교 참여연대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조홍식 서울대 교수)는 오는 12일부터 12월2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여성단체협의회 강당에서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4기 사회복지학교를 연다.

이번 사회복지학교의 주요내용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조홍식) '사회복지법과 공익소송'(윤관영 전주대 교수) '정보화시대의 사회복지와 시민참여'(한덕연 사회복지정보원장) 등이다. 총 10주, 수강료 5만원.

문의:795-5918/ 797-8200

### 성교육 대안찾기 모임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2일 오전 10시30분 여성평화의 집 교육실에서 중학생 딸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 대안찾기 모임'을 갖는다.

이날 순서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의 모습과 그 원인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강의 등이 마련되었다. 참가비는 5천원. 문의:269-2965.

### 성차별의식 여전 언론사 여성참여 확대 필요 민우회 신문 기사 모니터

우리나라 신문들은 여전히 전통적 여성상과 남녀차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동아, 조선일보 등 5대 중앙 일간지를 대상으로 여성 관련 기사를 모니터 한 결과, 대체적으로 신문기사들이 '남성은 사회노동, 여성은 가사노동의 전담자'라는 성별역할 분업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 국가보안법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주요 사건 자료집

이 자료집에는 극제사회주의자 사건과 최근의 박종철씨 사건 등 모두 7개의 무죄판결 사건이 실려있으며, 판결문과 변론요지서, 신문기사스크랩 등이 다양하게 담겨있습니다.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가격 1만원 · 연락처 715-9185

여성 관련 기사는 육아나 가사노동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고,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진단이 팽배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여자자들에 의해 써여진 기사들은 여성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어 그나마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준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언론사의 구조화된 성차별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언론사에 여성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평등의 전화 개설 1년 상담사례집 발간

10월 고용평등의 달을 맞아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대표 이철순, 한여노협)는 '평등의 전화' 상담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작년 9월 개설한 평등의 전화는 그간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평등실현을 위해 임금채불, 비정규직 고용, 차별임금, 모성보호 등에 대한 상담을 벌여왔다. 문의: 869-1347

10월 3일은 개천절 휴일 관계로 <인권하루소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 호외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간첩혐의 구속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스님(48·법민련남측본부 정책위원장)이 10월 1일 김제 금산사에서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안기부와 서울경찰청은 2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스님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새벽1시경 서울시 종로구 화동에 위치한 불교인권위 사무실과 진관스님이 주지로 있는 광주 서구 광천동 미륵정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안기부와 경찰에 따르면 진관스님은 반국가단체인 법민련 남측본부 결성에 참여하는 한편 김인서 씨 등 미전향 장기수 출신 출소자 3명의 복송을 추진하면서 지난 9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와 팩시밀리, 우편 등을 통해 친북인물인 법민련 해외대표 강병연 씨(캐나다 거주)에게 국내 불교계와 재야단체의 동향과 자료를 전달한 혐의다. 또한 95년 9월11일 캐나다에서 강 씨를 만나 불교인권위 활동보고서와 한국통신 노조 간부 7명의 인적사항을 전달한데 이어 19일 중국 북경 시내 한 호텔에서 북한에서 온 김모,이모 씨 등과 만나 여비조로 미화 4천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2일 오후 4시경 윤기원 변호사가 접견할 예정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접견 이후에나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 장기수 송환운동, 법민련 구속자 돕기 모금운동 벌여

불교인권위는 작년부터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비전향 장기수 송환운동을 벌여왔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측과 판문점에서 송환문제 논의를 위한 예비회담 제안 및 양심수석방을 위한 남북공동기도문 낭독등을 추진했다. 또한 1월말에는 불교인권위 산하 통일인사 석방 불교대책위 구성해 법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개신교목사들에 대한 모금운동 벌여 박석률, 강희남, 박병준, 김병균 씨 등에게 성금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과 관련해 95년 12월 통일원측은 불교인권위측이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로 북한측과 서신을 보낸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조처를 부탁하기도 했으며, 올해 5월 부처님오신날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남북공동기도문이 통일원과 정보기관의 압력에 의해 취소되기도 했다.

### 인권운동가의 권리옹호는 국제적 이슈

지난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옹호자의 권리'에 대해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 집단 및 사회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권리선언 기초에 관한 결의문」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운동가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옹호는 국제적인 인권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인권운동가로서 정당한 활동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인권단체 대표인 진관스님의 구속에 대응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일시 : 11월 2-8일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진관스님 간첩혐의 부인 인권운동가 보호위한 법적 장치 마련돼야

인권운동가 진관(48·불교인권위 공동대표, 범민련 남측본부 정책위원장) 스님의 구속사태를 맞아 인권·불교·재야단체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진관스님은 1일 김계 금산사에서 나오던 중 대기중이던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2일 현재 내곡동 안기부 청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과 안기부측은 반국가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참여 및 비전향 장기수 송환 추진 과정에서 94년말부터 지금까지 수십차례 범민련 해외대표 강병연(캐나다 교포·세탁업, 민족자주평화 통일협의회 중앙상임의 의장) 씨에게 국내 불교계와 재야단체의 동향과 자료를 전달할 혐의를 두고 있다.

“4천달러 받은 적 없다” 2일 오후 집전을 마친 윤기원 변호사에 따르면 진관스님이 강 씨를 만나 인권문제 자료를 건넨 것은 사실이나 해외에서 홍보차원으로 써달라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한다. 또한 진관스님은 북한 사람을 만났지만 장기수 송환·범민련·인권문제등을 논의했을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불교인권위측에서 수차례 장기수 송환문제로 통일원측과 접촉하고자 했으나, 통일원측은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했고 그러던 중 강 씨의 주선으로 북쪽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사람으로부터 미화 4천 달러를 받은 점에 대해 묻자 진관스님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윤 변호사는 전했다. 이

번 진관스님의 구속은 강순정씨의 구속에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장기수 자료가 왜 기밀? 공개된 사실일 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국연합은 성명을 내고 “비전향장기수의 복송은 인도적·동포애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며, 장기수에 대한 자료는 국가기밀이 아닌 공개된 사실일 뿐”이라며 이번 구속은 인권운동과 통일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 사건은 인권운동가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위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인권단체 대표인 진관스님의 구속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전국불교운동연합등 불교단체들은 긴급모임을 갖고 대응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마련을 위해 선언문 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85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로 「인권운동가 지원에 대한 선언문 초안제정을 위한 실무분과」가 생겨나 올해까지 11차례 회의를 가졌다. 선언문 초안을 보면 인권운동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정보를 수집·배포할 권리, 국내외로부터 제정을 지원받을 권리,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보 수집·배포권리 있다 지난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인권위원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 집단 및 사회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권리선언」 기초에 관한 결의문,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렇듯 인권운동가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옹호는 국제적인 인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사상·표현의 자유, 그 참된 시작 4일, 박노해 문화제 열려

오랜만에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학생들의 대규모 문화제가 준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와 박노해 후원을 위한 모임은 오늘 오후 6시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박노해 문화제를 연다. ‘참된 시작’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날 행사에는 박노해 시인의 부인이며 과거 사노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바 있는 김진주 씨가 출연하여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행동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민족문학 작가회의, 민들레(사노맹 구속자 가족모임) 등이 후원하고 있다.

인권운동가 보호위한 정치적, 국제법적 대응 필요 인권운동가에 대한 탄압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70년대 남미에서 인권운동가들이 대량으로 구속, 실종, 살해된 사건들을 계기로 국제연대네트워크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권운동가를 보호하는 정치적·국제법적 차원의 조치

<인권하루소식>에  
힘을 주십시오.  
구독료 납부  
잊지  
않으셨습니까?  
지로번호:  
7618848

## 세계의 인권⑥ 땅끝에 선 선주민 (indigenous people) 땅의 일부분인 사람들, 자기결정권의 절실함!

구아라니, 파라카나, 콜라, 토바, 티벳, 오고니, 리수... 이 생소한 이름들은 무엇인가? 아주 오랫동안 자신들의 땅에서 살아왔으나, 이제는 발붙일 곳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그야말로 땅 끝에 서있는 선주민의 이름들이다. 세계지도를 펼쳐들면 3억이 넘는 이들 인구를 만날 수 있다. 북아메리카에 1백50만,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 1천3백만, 남아메리카의 고지대에 인디언 1천8백50만, 서아프리카 유목민 8백만, 동아프리카 유목민 6백만, 중앙아프리카의 피그미(PYGMIES) 25만, 동아시아 6천7백만, 남아시아 5천1백만, 뉴질랜드의 마오리(MAORIS)가 35만 명이다.

경제, 정치, 역사, 종교 등으로 우리는 나라별 특성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선주민에게 있어선 문화적 정체성이 모든 삶의 영역에 녹아 있다. 각 선주민이 어떤 문화적 관점을 가졌는가에 따라 그 땅의 자원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르며, 그들에겐 땅이 갖는 영적 성격, 주변 경관을 통해 느끼는 역사의 숨결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땅과 호흡할 수 없다면 그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 흔들리는 삶의 터전

북극과 북아메리카의 예를 보자. 에스키모인이 사냥과 수렵, 특히 고래잡이를 통해 살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70년대 이후로 캐나다연방어획규제를 이유로 이들의 생업은 불법이 되었고, 실제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95년 이누트(Innuit)의 한 일원이 “우리 사냥꾼들은 부모님께 복종하여 평생 삶 속에서 배워온 것을 했을 뿐이다. 이누트의 사냥권리는 어떤 규제나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굴, 조개 등의 채취를 위해 해변가에 접근하면, 그건 비선주민의 사유지를 침입한 것이다. 선주민에겐 환경과목과 전통주거지역의 파괴를 불러올 대형댐의 건설이 국가의 신성한 사업일 뿐이다. 92년, 선주민 부모의

동의없이 인디언 아동과 유아들에게 공인되지 않은 실험용백신이 투여되고 수천 명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동의없이 불임수술을 받은 일이 법원에 제기되었다. 선주민의 문화는 이국적인 눈으로 꺼리인 민속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뿌리깊은 문화적 차별은 헤어나기 힘든 늪이다. 미의회가 만든 ‘알래스카원주민 위원회’는 “선주민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고, 질병과 알콜중독, 자기파괴적 행동, 문화적 붕괴, 자존감의 상실로 고통받고 있다”고 94년 연구보고서에서 자인하고 있다.

러시아의 옐친은 3년 전 선주민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약속했지만 토론에조차 부쳐지지 않았다. 중국은 인구의 8%에 이르는 선주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파테말라의 치타공힐트렉스와 같이 외진 곳의 선주민에게는 대량살상, 고문, 강간, 군사점령의 위협이 무섭기만 하다.

### 쫓겨온 빈민들과의 갈등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사정이 더하다. 구조조정의 폭풍은 팔아치우기 위한 자원을 긁어모으고 하고 있으며, 부채국들은 최후 수단으로서 자원채취를 위해 선주민의 영토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켰다. 에콰도르에서 페루에 걸친 석유탐사와 구야나와 수리남에서의 대량벌목 등이 그 예이다.

구조조정의 주요수혜자는 남북 모두에서 부유한 엘리트들이며, 이들은 아주싼 값으로 천연자원을 이용한다. 지적소유권과 특허법은 강화되나, 이 권리는 대회사와 개발권자들의 것일 뿐이다. 국제적으로 형성된 부정의는 국내관계에 투영되어 선주민은 이종고통을 받고 있다.

갈등은 내부에도 있다. 실업과 궁핍을 피해 도시와 농촌의 빈민들은 선주민의 영토로 몰려들고 있다. 이는 때때로 이주정책을 통해 장려되기도 한다. 그 결과는 어김없이 빈민과 위기에 놓인 ‘선주민’ 간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한 선주민의 장기적인 안전과 그들의 환경은 보장될 수가

없는 것이다.

### 대부분의 국가들 문제회피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선주민 문제를 대하는 국가들의 한계는 그 용어에서부터 나타난다. 사회적 집단으로서 ‘선주민족들(indigenous peoples)’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개인의 집합으로서의 ‘선주민(indigenous people)’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선주민’이란 단어 자체가 민족으로서의 자기정체성, 자기 영토에 대한 통제, 제도과 문화의 인정과 존중,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 부터 선주민을 떼어놓고 있는 것이다. 자기결정권이 40-60년대에 식민화에 대한 도전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가 독립국가의 형성으로 나타났다면, 그때 이후로 자결권의 개념은 독립국가 뿐만 아니라 그 국가내에서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길 원하는 선주민들에게도 또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각 국가와 선주민족간에 차별과 억압을 멈출 수 있는 건설적인 협약을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주요한 것은 자원에 대한 영토권의 개념으로, 선주민의 삶의 근거인 땅을 보호하는 문제이다. 개인적인 땅 소유자를 구별하지는 것이 아니라 선조대부터 그 땅의 일부분으로 살아온 ‘민족’이라는 점을 보자는 것이다.

### 유엔, ‘국제 선주민의 10년’ 선포

95년은 유엔이 정한 ‘국제선주민의 10년’이 시작되는 해였다. 이 기간이 끝날때면 선주민 인구는 그들이 속해 있는 국가와 평화롭고 역동적인 대화관계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세계는 선주민이 문화적, 생물학적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적극 원조하게 될 것인가? 선주민의 땅에 가해져온 다국적 기업의 끝없는 자원착취에 대해 어떤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 대답은 변화의 바퀴를 굴러나갈 선주민 스스로의 노력과 국제적 연대와 지원에 달려있을 것이다.

【류은숙 인권교육실장】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일시 : 11월 2-8일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두산기계 50일째 직장폐쇄 ‘노동유연화 정책’ 관철 위한 노조와해 공작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 노동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직장폐쇄 조치가 늘어가고 있으며, 올해만도 쟁의를 겪은 75개사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27개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는 방어적으로 사용하던 직장폐쇄를 최근 들어 노조에 대한 공격적 대응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노동쟁의에 대한 회사측의 대응이 갈수록 강경해지는 양상이다. 5일 현재 50일째 계속되고 있는 두산기계(대표이사 정재식)의 직장폐쇄는 이러한 강경대응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그리고 회사의 강경대응의 배경에는 ‘노동력 유연화정책 관철’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두산기계의 직장폐쇄는 단협협상 기간중인 지난 8월 17일 새벽 단행됐다. 노조(위원장 정용국)가 13일 4시간 동안 경고성 파업을 벌인 것이 빌미가 됐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4시간 경고파업 후 정상조업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직장폐쇄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16일 노조는 정상조업을 약속했지만, 회사측은 이튿날 전격적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또한 노조측은 “회사 간부가 새벽마다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와 탈퇴하고 집으로 찾아와 탈퇴”하며, “협상도 거부한 채 노조탈퇴만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폐쇄가 노조 와해를 목표로 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4시간 파업빌미로 직장폐쇄 당시 3백여 명에 달하던

조합원 가운데 반수 정도는 회사측의 회유와 압력에 굴복해 조합을 이탈했으며, 현재 남아 있는 1백 50여 명이 회사 정문 앞 렌트농성과 출근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또 조합원들 가운데 20여 명이 상경,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이며, 이들은 서울역 등지에서 선전활동을 벌이고 있다. 노조측은 회사측에 △단협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 △직장폐쇄 철회 △노조탈퇴공작 중단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고용불안” 노사쟁점

두산기계 노동쟁의의 핵심사항은 고용문제다. 두산기계는 95년말부터 외주용역(하청노동자)을 증가시키고 그 용역사업체의 사장을 개개 공정의 ‘소사장’으로 임명하는 일명 ‘소사장제’를 확대 도입해 왔다. 따라서 기존의 직영노동자들은 ‘배치전환(작업장 이동)’을 명령받게 되고 새로운 작업공정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자진사표를 내는 노동자가 늘어가게 됐다. 조합원들이 “숙련도와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더불어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지게 된다”며 소사장제의 확대를 반대했으나 회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입단협 과정에서

노조측은 ‘고용불안해소’를 핵심요구사항으로 제시했으나, 협상은 계속 결렬됐다. 회사측이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노조탈퇴를 계속적으로 종용하는 이유는 ‘배치전환’ ‘소사장제’ 등 노동력 유연화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이며,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노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풀이다.

### 김형태변호사 재선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권위는 2, 3일 의정부 한마음수련관에서 정기총회 갖고 김형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재선임했다. 또한 양심수특별위원회, 박노해후원을 위한 모임, 동티모르특별위원회,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오창래 위원(천임 사무국장, 신임), 이종걸위원(변호사, 연임), 김용수 위원(한양대 교수, 연임), 이석범 위원(변호사, 신임)을 선임하였다. 신임 사무국장에는 오창래 전임 사무차장이 임명되었다.

### 진관스님 석방촉구 결의

또한 총회에서는 결정사항으로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스님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천주교인권위는 결의문을 통해 이번 사태가 최근 남북관계의 긴장을 이용한 현 정부의 의도적인 공안 탄압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 인권운동가 또 구속!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경원 씨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 목사) 간사 이경원(25) 씨가 지난 3일 밤 집에서 연행돼 긴급구속됐다. 이 씨는 지난 6월 김해성 목사와 양혜우 사무국장이 구속될 때,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이 씨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 기소중지자 집중단속 차원에서 구속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성남 중부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다.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김 목사와 양 사무국장이 석방되는 등 이미 종결된 사건이므로 무리한 수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 씨의 빠른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요약>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17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대범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단체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이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초고)을 요약해 실는다(편집자주).

### 다. 신법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합헌성

신법 제7조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조항은 구법 제7조 제1항과 대비하여 보면 두 가지 점에서 뚜렷한 변경이 있었는 바, 그 하나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구법 제7조 제1항 후단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라는 부분을 삭제한 대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라는 부분을 삽입한 점이다. 신법 제7조 제1항에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된 것은 우리 재판소의 위 헌정합헌결정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구법 규정보다는 그 구성요건이 훨씬 명확히 규정되었다고 보여지나 아직도 구법 규정의 결합이었던 법문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이 조금은 남아 있다. (중략)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 재판소는 우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특히 이른바 “표현의 자유”는 그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기본적 입장에 서 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법 제7조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첫째로, 구법 제7조 제1항의 가장 큰 위헌적 요소는 법문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때문에 이를 법문의 문리대로 해석하는 경우 행위자의 행위의 동기가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그 헌법적 기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치는 영향등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나타난 인행만을 형식논리의 잣대로 재어서 이 조항을 합부로 적용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인데, 신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이 법의 입법목적(신·구법 제1조 참조)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신법은 제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규정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또 제1조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본준칙을 신설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략)

둘째로, 신법 제7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도 그 내용이 다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을 말하는가에 관하여는 앞서 본 우리 재판소의 결정내용이나 학설, 판례에 의하여 그 개념정립이 되어 있고,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부분도 우리 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판시취지에 따라 이를 합법적,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개념의 불명확성은 제거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풀이하면, 신법 제7조 제1항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로, 신법 제7조 제1항 후단에 새로이 신설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라는 구성요건 중 “변란”이라는 개념은 1948. 12.1. 법률 제10호로 공포, 시행되었던 구 국가보안법에서부터 계속 사용되어 온 용어이고 신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의 정의규정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이미 판례에 의하여 그 개념이 상당한 정도로 정립되어 있다. 더구나 이 부분 즉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라는 구성요건은 같은 항 전단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하나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 개념의 불명확성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 신법 제7조 제1항에서도 “구성원”, “활동”, “동조” 등 다의적이고 적용범위가 넓은 개념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나, 구법 규정과는 달리 이들 개념은 모두 같은 항 앞머리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과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고 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우리 재판소의 위 견해와 같이 제한해석한다면 이들 개념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은 제거된다. (중략)

다음으로 신법 제7조 제3항 및 제5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조항들은 모두 같은 조 제1항을 전제로 하는 조항들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항에서 그 위헌성이 제거된 이상 이들 조항도 그 구법 규정이 되고 있던 위헌성은 제거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이 조항들 그 자체에 따라이 어떤 독립적인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신법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은 제정법원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 “국민의 힘으로 해결을” 위안부문제시민연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가칭, 위안부문제시민연대)가 18일 결성을 앞두고 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대협을 중심으로 37개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인사들이 참여한 위안부문제시민연대(상임 공동대표 오재식)는 스일본정부로 하여금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와 법적 배상실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부로 하여금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증액하여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모금운동을 벌여 할머니들의 생활기금을 모집하는 일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대학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와 함께 서명운동 전개와 1명당 1구좌(1천원) 이상 모금 운동을 벌이게 된다. 또한 전국병원 및 한의원들이 할머니들에 대한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등을 진행중에 있다.

### 외무부 앞 항의시위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국정부가 있던 ‘안방살인’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4일 낮 12시 용산 미군기지 제2정문 앞에서 [제3차 고이기순 씨 살인만행 규탄대회]가 열린 데 이어, 오후 1시40분에는 정부 제1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최로 항의시위가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살인미군의 조속한 신병인수 및 재판권 행사 ▲미군범죄 근절대책 마련 ▲미국정부의 공식 사과 ▲불평등한 한미행협 조속개정 등을 요구했다.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일시 :11월 2-8일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명미상 5인

## 고 김말룡의원 장례

노동운동가이자 전 국회의원인 김말룡 씨의 영결미사가 7일 명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집전으로 열렸다. 미사에서 김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한평생 헌신적으로 노동운동을 위해 살았던 고인의 뜻을 이어받았으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곧 이어 성당 입구에서 열린 민주사회장 노조에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 3백여 명이 모여 평생 노동자들을 위해 헌신해왔던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고인의 유해는 이날 오후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안장되었다.

## “경찰 인권교육 절실” AI, 한국방문 결과 논평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주 한국 방문 결과에 대해 “남한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남한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과 훈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달 10 - 26일까지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과 광주를 방문했던 AI 대표단은 구속시와 경찰유치장에서의 부당행위에 관한 사항들을 조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난 8월 연세대 사태 때 학생들에 대한 구타와 성적희롱이 자행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안기부 수사권 확대를 우려하며 “과거부터 안기부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온 책임자였고, 최근의 여러 사례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는 96년에만 국보법에 의해 체포된 수가 3백명 이상이며, 대부분의 정치수들이 난방이 이뤄지지 않는 감옥에 구금되어 있고, 불충분한 영양과 부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I는 “양심수들의 투옥이 계속되는 한 남한은 개방된 민주사회라는 평가를 얻지 못할 것”이라 덧붙였다.

# 노진추 회원 23명 대거연행

##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 전화통까지 떼어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노진추) 회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동이 일고 있다. 6, 7일 양일에 걸쳐 23명의 노진추 전국 지부원들이 연행되었고, 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랐다.

서울지부의 경우 6일 아침 김광수(정책실장) 씨 등 5명이 긴급구속장을 제시한 대공분실 수사요원들에 의해 각각 자택에서 연행되었고, 회원들이 자리를 비운 야간을 틈타 6일 밤에서 7일 새벽 사이에 지부사무실에 대한 불법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울산에서는 안기호(효성금속 전 노조위원장·노경추회원)씨 등 3명이 7일 오전 8시30분경 연행되었다. 효성금속 노조관계자들에

따르면 안기호 씨를 연행한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사전 구속영장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7일 오후 1시경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위원장 김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한다. 효성금속 노조원들은 7일 오후 1시경 안씨 면회를 시도했으나 울산 대공분실 측은 수사중임을 이유로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안씨가 이적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만이 확인되었다.

한편 전국 노진추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공분실 측이 컴퓨터, 팩스는 물론 전화기까지 불법적으로 압수해가 노진추 측이 전국 각 지부의 정확한 연행자 수와 명단을 파악하는데 심각한 어려움

## ◎ 주요 공판 안내 ◎

- 8일(화)
  - 김규식, 오전10시, 국보법, 11단독, 526호 선고
  - 이광철, 오후2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속행
  - 정수일, 오후4시, 국보법(간첩행위 등), 319호 선고
- 9일(수)
  - 유용기, 오전10시, 국보법, 합의1부, 416호 선고
- 10일(목)
  - 명원장, 오전10시, 국보법, 5단독, 519호 선고
  - 이철우, 오전10시, 국보법, 합의23부, 319호 속행
- 11일(금)
  - 김미정, 오전10시, 국보법, 합의22부, 319호 속행
  - 유현수, 오전10시, 국가보안법, 합의22부, 319호 속행
  - 장대영의 1명·김성훈 오후2시, 국보법, 합의21부, 422호 선고
  - 김정두의 1명, 오후2시, 국보법, 합의21부, 422호 속행
  - 이상 서울지법 형사국

# “해외포교 차원의 상식적 행동” 불교대책위 결성, 안기부 항의방문

전국불교운동연합·실천불교 전국승가회·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등 불교 6개 단체는 5일 긴급회의를 갖고 「진관스님 구속 진상규명과 석방을 위한 불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내국동 안기부 후문에서 대표 및 임원 중심으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의집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11일 2차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불교대책위는 “진관스님은 불교인권위 공동대표로 활동중이었으며, 조계종 중앙총회 위원으로 도주종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인의 양심으로 인권운동차원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한것이므로 혐의가 있다고 해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계종 중앙총회 사회분과위원장(위원장 명진스님)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속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강병연 씨의 확실치도 않은 진술을 근거로 스님을 구속한 것은 공안정국을 이끌고 가려는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 “역사적 요청에 따르길”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

민변·인권운동사랑방·여연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부터 시작된 12·12 및 5·18 항소심에 앞서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역사적 심판이라는 의의를 깊이 자각해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반관과 내란, 시민학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 △5·18 관련 피해자들의 공판정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 △검찰은 소추권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 불교인권위 성명

또한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6일 성명을 내고 “진관스님이 해외에서 교포와 동포를 만나 해외포교의 일환으로 인도적 차원의 불법을 전달한 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지극히 상식적인 행위”라며 구

##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이경원씨 불구속

공무집행방해혐의로 3일 긴급구속되었던 성남외국인 노동자의 집 간사 이경원(25)씨가 4일 오후 11시경 불구속입건조치로 석방되었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6호 판매!

우리시대의 인권상황관 <인권하루소식> 합본 6호를 한정·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본6호는 제501호부터 제655호까지 묶었습니다. 52차 유엔인권위 총결과 을 상판기의 인권상황 소식이 상세하게 담겨있습니다. 가격 1만5천원(하루소식 정기독자 1만원)

## 주/간/인/권/호/름 (96년9월30일부터 10월6일까지)

<30일>

대법원 국감자료, 올해 1월-8월 말까지 국보법·잠시법·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백91명 중 1심 실행선고율 16.8%/문화체육부, 만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4년-96년 8월말까지 49개 사업장에서 4백93명의 산재은폐 적발

<1일>

정부, OECD에 국내 노동법 개정 논의내용을 보고하면서 교사의 단결권 부분을 외국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서울지법(원장 정지형) 국감자료, 95년 9월부터 1년간 검·경이 서울지법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 건수 4만3천1백58건 중 구속기소 건수는 75.12%/내무위 국감자료, 95년 3월 영랑원전 3호기 가동이후 지난 7월말까지 원전고장 19건 중 영랑원전이 11건(57.9%)으로 가장 많아/서울지법 특수1부(김성호 부장검사) 불법 태아 성감별을 해온 혐의로 서울관악구 신림동 오창학산부인과 원장과 조산사 구속/노동부, 국감에서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방안 추진중이라고 밝혀

<2일>

재정경제원,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합병시 정리해고제 도입하는 내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민주노총,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불참 발표/법무부 국감자료, 1월-8월까지 폭력·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미군인 3백94명 중 재판을 받은 사람 전체의 2.8%에 그쳐/안기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스님(국보법 회합·홍신) 구속/전국 초·중·고교에 둔 특수학급의 담당교사 중 41%가 무자격 교사인 것으로 나타나/미국 국방부 산하 8개 부서에 분산돼 있던 인공위성과 정찰항공기에 의한 공중정보활동을 통합관리할 사상초유의 거대 정보기관 발족

<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안)’ 제정 반대/노동부 국감자료, 올들어 6월말까지 산재보험급여 관련 행정소송 1백6건중 정부패소율 60.5%/IMF와 세계은행 총회에서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범세계 차원의 부패적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

<4일>

헌법재판소, 개정 국보법 7조 1·3·5항에 대해 합헌 결정/헌재, 영화법의 사전심의제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공공부문노조 대표자 회의 ‘노동법 개정투쟁본부’ 발대식 /취학전 1년 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 결성/일본과 유럽연합,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을 세계무역기구에 공식제소

<6일>

정부, 영화 등급심의를 뼈대로한 부분등급제 도입키로

## <해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1·3·5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전국연합은 ‘철새판결’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번 합헌결정은 “남북간의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항을 완전히 폐기함으로써 오는 국가적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불모집한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 침해를 납득시키기엔 너무나 미흡한 것으로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을 제1회  
인권영화제의 후원인으로  
모십니다.  
문의:704-7401/715-9185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지령받고 남파된 것 아니다”

### 간첩 혐의 간수 교수 1차 공판

지난 7월 간첩 혐의로 구속된 무하마드 간수 교수(한국명 정수일, 단국대 사학과)는 안기부 발표와 달리, 북한 지령에 따라 남파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8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에서 열린 1차공판에서 간수 씨는 국내 정보를 북한에 보고했다는 혐의 사실 대부분을 시인하면서도 “대남 업무를 맡기 위해 중동으로 파견된 것은 사실이냐, 한국 첩투 임무는 주어지지 않았다”며 안기부 발표를 부인했다. 이어 “한국에 들어온 것은 북한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알게 된 김 모 교수(연세대 한국어학당)와의 친분 때문에 우연스럽게 결정된 것”이라 말했다. 안기부는 간수 씨가 “한국첩투 임무를 띠고 장기간 해외에서 의도적인 신분세탁과정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수 씨는 검사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순순히

시인했다. 여기엔 학문연구를 지속하고 싶다는 간수 씨의 소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간수 담당 변호사는 “간수 씨가 일간신문 기사를 종합한 것에 불과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에 머물렀다가보다 학문적 욕심 때문에 한국에서 교수생활을 하고자 한 것 같다”며 “점점 때마다 자신의 연구작업에 강한 집착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다음재판은 오는 11월 10시 311호 법정.

### 공안비상벨을 울려라

노진추 24명 연행, 3명 수배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대표 성두현, 노진추)의 대거 연행·구속이 진행되는 가운데 8일 현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서 성두현 대표를 포함

해 모두 2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었으며, 임은옥 씨 등 3명에게 사전 구속영장에 내려졌다.

이번 노진추의 대량구속은 지난 8월 연세대 강경진 압을 계기로 몰아친 안기부 법·집시법 개정논의에 이어 최근 터진 무장단체 침투사건 등으로 대공수사력 강화를 비롯한 강경분위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진추는 작년 9월 민중정치연합에서 탈퇴해 올해 1월 정식출범했으며, <노동자신문>을 17호까지 발행해 온 것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활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자신문>을 통해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입장에 반대하며 민노총의 노개위 탈퇴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진추 관련자들의 대량

구속이 무리한 인신구속이 아닌가는 우려도 제기되는 데 철도노동자인 송호준·이철의 씨의 경우 지난 5월 이후 사무실에도 일체 나오지 않았으며, 송 씨는 공식적으로 탈퇴의사마저 밝혔다

그를 집견한 김선수 변호사는 전했다. 이 씨의 경우도 생계문제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에 대한 구속자가족 및 단체회원들의 항의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마창·창원, 울산 지부에서 항의방문을 한 데 이어 서울에서도 오늘 홍계동대공분실로 항의방문을 갈 예정이다. 한편 마창지역에서는 7, 8일 가족면회가 거부되었다.

추가확인 명단: 마창·창원지부- 성명미상(남 1명)/부산지부- 박종만 이상미 이종훈(이상 실무자) 유수진, 정진희(이상 대동간호전문대 재학)/울산지부- 양준석(군복무중)

사전구속영장 발부: 서울지부- 임은옥(회원)/마창·창원지부- 정도원(사무장) 장철우(정책실장)

###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청원

박형규목사의 5만6천5백11명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및 상담지원활동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와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기독교 대책본부」는 8일 오전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제정을 위한 청원집회를 갖고, 5만6천5백12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인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 설치 △노동허가제 도입 △외국인근로자 도입시 정부간 쌍무협정 체결 △사업장 이동의 보장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노동관계법령과 사회보장관계법령을 적용할 것 등이다.

##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12·12 군사반란과 5·18 시민학살의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을 마치고 이제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 1심 재판은 온 국민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만큼 이 재판이 지닌 의미는 중요한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는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1심 판결은 전두환 피고인에게 군사반란 및 내란수괴죄 등을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하였고 노태우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의 경우 시민학살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확정하지 못한 채 무죄를 선고하였다.

전두환 등 피고인들이 자행한 인권침해와 헌정질서 유린 행위가 이미 공지의 명백한 범죄 사실임에도 그동안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추종하면서 찬양했던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살아야 했다. 이런 불행했던 과거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이번 1심 판결만으로도 더할 수 없는 감격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재판의 의의는 피고 개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과거를 심판하여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데 더 큰 목표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서 한차례도 오욕으로 점철된 과거사를 올바르게 심판하거나 청산해보지 못했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 재판이 갖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심 재판은 진행과정과 그 결과에서 이러한 역사적 요청에 부응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2심에서는 역사적 심판이라는 의의를 깊이 자각하여 민주법치국가의 사회정의가 살아있는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첫째, 반란과 내란 그리고 시민학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1심에서는 6개월에 걸친 재판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의 진상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못했다. 특히 5·18내란목적 시민학살의 진상은 거의 밝히지 못했다. 사건의 분명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채 재판의 진정한 의의를 살릴 수 없는 것이며 피고인들에 합당한 처벌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필요한 현장지휘관들과 무력진압에 나선 일선 병사들까지 소환하여 엄정히 심

문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온 국민이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지난 몇 년동안 기울였던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역사에 대하여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둘째, 심리를 집중하여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심리를 집중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실제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부합한다. 특히 이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겠다. 지난 1심에서도 1주 2회 재판을 실시하여 이미 부분적으로 집중심리제를 채용하였으나 집중심리의 원칙을 분명하게 견지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변호인측의 시비를 불러오기도 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집중심리의 원칙을 확고하게 관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판부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등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12·12군사반란과 5·17 내란 그리고 5·18시민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최규하 전대통령이 법정에서 반드시 증언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사건에 가장 핵심적으로 관계한 책임 있는 자로서 마땅히 피고인들과 함께 역사의 법정에서 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최소한 법정 증언조차 거부하고 있다. 재판부가 실제적 진실의 규명이라는 법원의 의무를 다하고 진실에 입각한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형사절차법에 따라 구인을 해서라도 반드시 그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 이밖에도 필요한 증거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넷째, 5·18 관련 피해자들의 공판정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당연한 재판의 5·18학살의 진상, 내란목적살인의 성부를 규명하는 일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법원은 가능한 폭넓게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여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사법부의 위상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판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 재판 피고인들의 혐의사실은 통상의 예와는 달리 공지원 것들로서 재판공개가 특별히 피고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나 국민의 관심에 비추어 볼 때 완전 공개되어야 한다. 실제적으로는 텔레비전을 통한 직접 중계가 최선의 방식이다. 이는 피고인들에게도 국민을 향하여 그들의 주장을 설명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짐은 물론이다.

여섯째, 검찰은 소추권자로서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검찰은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집행자로서의 엄정함을 보이기 보다는 정치적 의도에 흔들리는 모습을 적지않게 보여왔다. 우리는 검찰의 방대한 수사자료, 새로운 사실규명 등의 성과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나, 5·18학살 관련자에 대한 일부기소,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무죄 등은 그 책임이 일차적으로 검찰에 있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검찰이 시대적 소명을 자각하여 학살자의 죄행을 날날이 밝히고 끝까지 엄정한 법집행자로서의 모습을 보일지에 의문을 금할 수 없다. 검찰이 이러한 의문을 불식시키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정의를 위해 싸우는 민주시민과의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재판은 오욕에 찬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굴절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재판은 재판부와 검찰 등 법원 관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재판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일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부여된 임무이다. 그동안 온 국민의 굳은 의지로 막막한 독재의 수렁에서 과거 청산의 불화를 울리던 때처럼,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끝까지 재판에 동참하고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은 미래의 올바른 민족사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996. 10. 6.

전국연합, 민주법연, 민고협, 민가협, (사)민예총,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위, 인민운동사랑방, 유가협,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여러분을 제1회  
인권영화제의 후원인으로  
모십니다.  
문의:704-7401/715-9185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 뜬다

### 프라이버시 침해·정부 통제 강화 우려

21세기형 첨단 주민통제 장치로 일컬어지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위원장 안상운 변호사)가 각 시민·사회단체에 「전자주민카드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으로써 조만간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증, 국민연금증서, 의료보험증, 인감증명서 등 7개분야 41개 정보를 집약해 수록하는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될 경우 △정보누출

시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독점에 따른 정부 통제 강화 등 국민권리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됐지만, 그 동안 국내에선 별다른 반대운동이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각종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는 정부의 선전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왔고, 데이콤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앞다퉀 사업자 선정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대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경우, 2년내에 전자주민카드는 현실로 등장하게 된다.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성에 인식을 같이한 민변, 청년

정보문화센터, 지식인연대, 정보연대 생,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부터 실무자 모임을 통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참여단체를 확대할 계획이며, 국감 기간에는 내무위 자료요청(내무위) 등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기중 변호사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국민의식이 일천한 상황에서 아무런 이익의제기없이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번 저지운동을 통해 사생활과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시각과 권리 의식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 사무노련 중앙위 결의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사무노련, 위원장 김국진·허장)은 노동법이 개악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8, 9일 이틀간의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들은 "민주노총이 동의하지 않는 노동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점에서 연맹은 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10일중에 업종회의별로 투쟁본부 발대식과 운영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이어서 가맹조합 임시대의원대회, 총회를 소집해 파업을 결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가맹조합은 11월 10일까지 쟁의발생신고서를 연맹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대량 감원을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해, 사무노련은 「관치금융을 부활시키고 금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적극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

### 영상악법 및 검열철폐 전자서명운동 전개

영화법, 비디오법 등 영상 관련 악법의 폐지와 검열철폐를 위한 전자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쟁취와 영상관련악법 폐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달부터 통신상의 영화동아리인 시네마천국(go cine, 하이텔), 인디아라인(go ial, \*), 전국대학방송국연합(go uba, \*), 영화동호회(go screen, 천리안)를 통해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2천명에 이른다.

대책위는 10일중으로 서명 결과와 함께 영화법 및 비디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7월 푸른영상 김동원 대표의 구속 이래 11차례나 계속되어온 '독립영화 거리상영회'는 오는 12일 영화법 위헌 판결을 기념해 <파업전야>를 특별 상영하며 막을 내린다.

##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김용준)는 4일 서울지법이 영화법 12조 1, 2항 및 13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전등급심사에 의한 규제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놓고 있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래는 헌재의 결정문 초고의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이다.<편집자주>

주문: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 37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중 공영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 <중략>

판단: 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으로 그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동등히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검열제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거나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

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법률로써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열의 의미는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먼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의미하므로 개인이 정보와 사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미리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표를 저지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공개한 뒤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후심사나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그 외의 사전심사는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심사절차의 허용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이와 충돌되는 다른 법익 사이의 조화의 문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상충하는 다른 법익과의 교량과정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검열금지의 원칙은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조치(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등)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헌법규정(음란, 명예훼손 등)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검열금지의 원칙은 바로 영화에 대한 사전심사를 모두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영화는 영상매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비디오의 보급으로 소비자에게 보급되고 난 뒤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상영·보급 이전에 심사·규제해야 할 필요성과 청소년이 음란, 폭력물 등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할 경우 유통단계에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 설사 등급심사를 받지 아니한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때에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새영화진흥법 시안 제11조의 등급심의)도 검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의 위헌성

법은, 영화의 상영 전 공표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제12조 제1항),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영화의 상영 금지(제12조 제2항)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3조 제1항은 영화에 대한 심의기준을 정하고, 공표이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영화에 대하여는 심의필 결정을 할 수 없으나,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백히 앞서 "가의 (1)"에서 밝힌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법은 영화의 상영 전 공표의 사전 심의를 규정하고 있고, 공표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 의한 공표위원 위촉(공표법 제25조의 3,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시 장관의 승인(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심의결과의 장관 보고(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표의 운영경비의 보조(같은 법 제25조의 3 제6항)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표가 비록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행정권이 공표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표를 검열기관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후략>

여러분을 제1회  
인권영화제의 후원인으로  
모십니다.  
문의:704-7401/715-9185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국회, 경찰 여학생 성추행 국정조사해야 진상조사 거부 여당의원들 질타 한 목소리

9일 국회 내무위는 한총련 사태 당시 벌어진 여학생 성추행사건을 폭로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추미애(국민회의) 의원의 발언으로 일대 소동을 겪었다. 추의원의 폭로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허위주장이라고 답변한 황용하 서울경찰청장의 답변을 옹호하고 나섰다. 결국 여당의원들은 결국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안을 전원반대로 부결시켰다.

이런 사태에 대해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등은 성명을 발표해 ‘국정조사권’ 발동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성명들과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여연 성명: 여성들이 공권력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마당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품위에만 신경을 쓰다니 한 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암담할 뿐이다. 여당의원들은 당론을 떠나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경찰이 가해자인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국회내에 진상조

사단을 만들어 공정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진상조사하지 않고 덮어둔다면 정부의 성폭력근절의 의지는 믿지 못할 근거없는 발언이 될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진상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전국연합 성명: 즉각 명확한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다. 가해 당사자인 경찰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은 경찰에 의해 저질러진

성추행을 비롯한 인권유린 문제를 경찰이 파헤친 사례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왜곡·축소되었다는 지금까지의 관례에 근거하는 것이다. 또한 진상규명 과정에서 증언하는 여학생들에 대한 신변보장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막으로 경찰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시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경찰내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경찰의 자질을 높이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광희(민변) 변호사: ‘품위를 잃은’ 현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을 두고 품위를 잃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또한 국정조사 발동을 거부한다는 것은 진상을 알고 싶지 않다는 말밖에는 안된다. 조사를 해보면 금방 드러날 텐데,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승민(한국교회 인권센터 사무국장) 목사: 내무위 결과는 메카시즘적 사회분위기를 드러낸 것이다. “한 총련은 빨갱이니까 성추행은 권찰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조혜정(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우리 사회에는 인권이 너무 무시되고 있다.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도 없다. 너무나 많은 문제제기만 하고 있다.

## 제1회 인권영화제 기자회견

· 일시: 오늘 10월 11일(금) 오전 11시 · 장소: 종로성당  
· 주최: 제1회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 인권영화제의 주인이 되십시오

제1회 인권영화제는 여러분에 의한 여러분의 영화제입니다. 매 구좌마다 담긴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을 통해 영화제는 힘있게 개최될 것입니다. 개인은 1구좌 1만원 이상, 단체는 1구좌 5만원 이상입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의 후원을 기대합니다. 후원인이 되어 주시는 분께는 팜플렛과 영화해설책자를 보내드립니다.

☞ 후원계좌: 제일 110-20-342272 국민 822-21-0276-824  
농협 033-02-119388 (예금주 서준식)  
☞ 연락처: 704-7461/715-9185

### <독자투고>

## 해맑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길

박정석(전 전국민민연합 간사)

80년대 이래 줄곧 빈민운동에 헌신해 온 김홍겸(36·전 전국민민연합 연대사업국 차장)씨가 지난해부터 암과 투병중에 있다. 현재 그는 위에서 시작된 암세포가 간과 뇌에까지 퍼져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는 그의 책유를 빌려 글을 보내왔다.<편집자주>

행정구역은 ‘특별시’이나 몇 마지기는 뒤집힌 논바닥과 한적한 신작로가 나 있는 그의 집 앞 풍경은 여유롭고 따뜻하다. 구로구 향동 그린빌라 1-5호. 도시빈민운동의 살아있는 역사를 관음에 겨우고 있는 그는 지금, 그 눈물겨운 빈민운동의 과업을 잠시 내려놓은 채 말기의 위암투병을 떠안고 있다.

김홍겸. “아직은 팔팔 날아다녀도 시원치 않은 나이에 이게 무슨 공상이냐”고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를 보면서 문병은 철거민 몇몇 아주머니들은 이내 무겁고 근심스런 표정을 거두고 안도하는 모습이 있다. 한참 후 그의 투병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문병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럼없이 웃다가 혹은 간간이 탄식을 하다가는 돌아갔다.

혼자일 때 그는 다시 풍욕을 시작한다. 일출전 3-5회, 일몰후 3-5회를 30분 간격으로 한다. 죽임과 치커리 엑기스 등으로 음식물을 대신하다가 풍욕의 효험 탓인지- 이제는 예전같지는 않지만- 먹는 것과 잠자는 일이 매우 가벼워지고 있으며 근황을 전한다. 그의 근황 가운데, 그는 결코 말하지는 않지만 기도를 하는 일이 빠질수 없을 것이다. 그의 일생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느님과의 진지한 대화가기 때문이다.

역세계 돈 안되는 삶 그는 81년 연세대학교 신학부에 입학했다.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는 어느날 홀연히 짐을 싸들고 낙골로 거처를 옮긴다. 생애 첫 공식적인 가출. 서울의 수많은 달동네 가운데 하나인 낙골에 오른 그는 단지 그곳에

서 진짜 하느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 가출의 중요한 이유였다. 대학 3학년 때는 민중가요 <허탈한 하나님>을 작곡하기도 했고, <젊은 예수>라는 연극을 만들어 공연하기도 했다. 그런 그는 낙골의 ‘사람사는 것 같은’ 살가운 인정에 발목잡히면서(그가 즐겨쓰는 표현이다) 본격적인 도시빈민운동에 투신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역세계 ‘돈 안되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

암울한 군부통치 시절. 무자비한 군홧발에 짓눌려 신음하는 도시빈민 형제들의 생존권 탄압 현장에서 그는,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몸을 내던졌다. 먹고 자는 일 대신 철거현장에서 의 싸움 속에서 하루를 정리해야 마음이 편하던 그였다.

도시빈민과 숨가쁘게 살아온 80년대 군부독재와 독점체제, 그들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맞을 수록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도시빈민의 삶은 더욱 황폐해지고 구조적으로 열악해지던 80년대는 이땅의 젊은이들의 피를 뜨겁게 솟구치게 하였으며 그는 그 중심에서 한번도 비껴나지 않았다. 정부의 무원칙한 주택정책에 맞서 주민들의 조직적인 투쟁으로 빈민운동의 분기점을 이룬 목동싸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던 상계동과 양평동의 철거싸움, 철거민들의 자주적인 투쟁의 최초의 성과물인 돈암동 영구임대주택 쟁취 싸움, 노점상 형제들의 목숨을 건 생존권 수호투쟁, 일용노동자들의 대중조직화투쟁 등등. 그는 싸움의 현장에서 성실한 조직사업으로 적지않은 도시빈민 대중지도자들의 정치적 사상적 철학적 견해를 좁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메맞는’ 선두투쟁을 즐기면서 완수해 온 조금은 특이한 체질이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을 투병중에도 그는 적지 않은 고민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80년대의 배고픈 싸움이 다소 나아진 것처럼 보이나 전혀 슬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도시빈민 형제

들의 생존현장. 실마하며 일말의 기대를 갖게하던 문민정부의 도시빈민 정책은 실로 정책이랄 것도 없는, 가난을 더욱 구조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제 새롭게 무장하고 더욱 강한 모습으로 도시빈민 형제들과 함께하려던 순간이었다. 좀더 새로운 각오를 품고 비장하게 기도를 드리려던 참이었다.

딸 보미를 보면... 밖에서는 저녁식사를 준비하는지 조금은 부산스러운 가운데 그가 불현듯, “이제 다섯살 난 딸 보미를 보면 ‘무조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면서 지그시 눈을 감았다. 짧지 않은 시간을 누웠다 앉았다하며 나누던 대화 속에 피로가 끼어들어온 것 같다. 그의 집을 나서며 보미를 보면 무조건 살고 싶다는 그의 바람과 같이, 그의 투병을 지켜보는 4백만 도시빈민 형제들도 그가 ‘무조건 일어나’ 해맑은 모습으로 하루속히 그들 곁으로 돌아와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문의: 780-4392(박혜경)

### 노동악법 철폐 대중투쟁으로 쟁취 민주노총, 11월 총력투쟁 결의

지난 1일 노개위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10·11월 대중투쟁을 통한 노동악법 철폐와 개악 저지에 총력을 모아가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이 자리를 통해 대중투쟁 국면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어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중순 총파업 등으로 이어지는 총력투쟁 일정을 의결했다. 노동자대회에는 10만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수위와 내용을 공식 천명하고, 그 시기를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시점에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위노조들은 각각의 조건에 맞게 11월 9일까지 조합원총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 11월 10일 최소한 조합원 1/5이상의 참가서명 받기 △ 10월초부터 지역 순회 문화공연에 참가 △ ‘11월 중순 총파업 총력투쟁’ 조직 △ 11월9일까지 단위 노조별로 쟁의발생 신고 완료 등을 결의하기로 했다.

여러분을 제1회  
인권영화제의 후원인으로  
모십니다.  
문의:704-7461/715-9185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영화 속에서 배우는 '인간의 존엄성'

###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 2-8일 개막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라는 부제를 단 국내 최초의 인권영화제가 오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이화여대 상영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상영에 들어간다.

이번 영화를 주관하는 인권운동사랑방·주간씨네21·월간 키노·이화여대 총학생회 등은 11일 오전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제1회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는 "제1회 인권영화제는 우리에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해주고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참된 위안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뜻깊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 표현의 자유 신장 계기

한편 인권영화제는 사전 검열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정부 당국과의 충돌이 예상돼 긴장감을 주고 있다. 영화사전심의에 제동을 거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매체는 여전히 사전심의라는 검열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인권영화제 역시 비디오 상영이라는 면에서 검열 문제가 남아있는데, 오히려 조직위원회는 "검열거부"라는 고난을 거쳐 치뤄질 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했다.

#### 영화감독과의 만남 음악제 등 행사 다양

이번 인권영화제는 우리 사회의 낙후된 인권의식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높이고, 이를 통해 영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1백50여 편의 후보작품 중 엄선된 상영작 30여 편의 선정 기준은 무엇보다도 '얼마나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느냐'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 예술적 완성도를 평가했다.

상영을 앞둔 주옥같은 30여편의 작품 가운데 개막영화로 선정된 작품은 <인사말자>(Contre L'Oubli)이다. 이 작품은 91년 국제영화제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것으로, 30개국의 인권문제를 유명한 감독들이 약 3-5분씩 미니멀리즘 형식으로 제작했다. 또한 5일 상영되는 <양 도살자>(Killer of Sheep, 감독 Charles Burnett)는 77년 미국에서 제작된 흑백영화로 '영화의 고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로스앤젤레스의 도살장에 고용된 흑인 오 스타인 씨의 일상생활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폐막을 장식할 <지하의 민중> (La Naciom Clandestina, 감독 Grupo

UKAMAU de cine, 89년 제작)은 볼리비아 작품으로 89년 산 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이다. 이렇듯 이번에 상영되는 작품들을 통해 이스라엘·콜롬비아·수단·쿠바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여러 나라의 인권문제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마련

이밖에도 개막제로 분단 희생자들을 위한 진혼곡이 마련되었고, 폐막제로는 음악제가 치뤄진다. 또한 영화제 기간에는 <호남호너>로 잘 알려진 대만의 영화감독 호우 샤오셴 씨 등과의 좌담회를 비롯해 국내 영화 상영시에는 영화의 주인공들인 장기수, 해고노동자들

과의 만남의 자리도 예정되어 있다.

이번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2천5백만원에 달하는 재정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영화제는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상영되는데 시민운동지원기금에서 5백만원의 지원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도의 재정은 없다. 조직위원회는 재정마련을 위해 광범위한 단체와 개인후원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현재 조직위원으로는 신영복(성공회대 교수)·이장호(영화감독) 씨 등 25명, 집행위원으로는 남희섭(독립영화협회의) 씨 등 14명, 후원단

체로는 국제영화제 등 외국인권단체를 비롯해 전국연합·민예총 등 34개 사회·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인권하루소식>에서는 다음주부터 매주 2회씩 제1회 인권영화제 상영작품에 대한 소개를 시작한다.

### 인권영화제의 주인이 되십시오

제1회 인권영화제는 여러분에 의한 여러분의 영화제입니다. 매 구좌마다 담긴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을 통해 영화제는 힘있게 개최될 것입니다. 개인은 1구좌 1만원 이상, 단체는 1구좌 5만원 이상입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의 후원을 기대합니다. 후원인이 되어 주시는 분께는 팸플릿과 영화해설책을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제일 110-20-342272  
국민 822-21-0276-824  
농협 033-02-119388  
(예금주 서준식)  
연락처: 704-7461/715-9185

## 경찰들, 만장 뺏고 영정 깨고 이기순씨 용산미군기지 앞 영결식

지난 9월 7일 미군에게 살해당한 고 이기순 씨의 영결식이 2백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낮 12시 용산미군기지 제1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날 영결식은 사전 신고된 집회였으나 5백여 명이 넘는 전경과 백골단이 나타나 만장을 빼앗고 영정을 깨뜨리는 등 영결식을 방해했다.

이에 전국연합 미군기지대책위원장 김용한 씨는 "경찰은 영결식이 집회이고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와서 신고서에 장례식 순이 빠져있다고 억지부린다"며 "경찰 관계자를 집회 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윤금이 씨의 죽음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한국에 오는 미군들은 한국민을 별레나 식민지 노예로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분개했다.

또한 한명회 여연 공동대표는 "고 이기순 씨의 죽음은 권력 유지를 위해 의면당한 외로운 죽음이자 살인이었다"며 울먹였다.

연대사를 하기 위해 일본에서 온 오후무라(「평화로 운 목소리를 울리자」 소속) 씨는 "오키나와에서도 미군이 주둔한 기간 동안 민사사건만 3만여 건이 넘게 발생했다"면서 "역사에 살인자라는 수치스런 이름을 남기기 전에 미군은 철수하라"고 주장했다.

영결식에 이어 참가자들이 서울역으로 보도 행진에 나서자, 전경과 백골단은 행렬이 들고 가는 개진영정까지 빼앗아 참석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고 이기순 씨는 동두천

기지촌 여성의 공동묘지인 동두천 상패동에 묻혔다.

### 시민입법 캠페인 참여연대

11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정기국회를 맞아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매년 시민입법운동의 주요 과제를 선정·발표하고 입법대안 제시, 시민여론수렴, 시민캠페인, 입법청원 등 종합적 시민입법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정중립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시민입법운동의 주요 일정이 시작된다.

올해 시민입법운동에서는 부패방지법, 정치관계법, 검정중립화 방안(정치·행정 분야), 공정거래법, 상속세법(경제분야), 국민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사회복지분야) 등의 개정 또는 제정이 주요과제로 추진된다.

### 진관스님 불구속수사 촉구 종교인, 안기부 항의방문

진관스님 구속에 대한 항의가 잇따른 가운데 11일 오후 불교인권위·한국통신노조·전불련·대불련 등 소속 35명은 세곡동 안기부 항의방문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김상근 등)는 "진관스님의 구속은 안기부법 개정 기도와 연관된 듯 싶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성직자를, 더구나 중무감사 수행기간에 구속한다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이며 △북한측과 회합·통신한 것이 사실이라고 국보법 대신 남북교류협약법을 적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며 △국제사회에 한국

인권운동가로서 잘 알려진 진관스님을 구속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한편 진관스님에 앞서 연행된 강병연(캐나다 교포,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 중령법률 적용하고, 불구속 이상임위 의장) 씨는 11일 검찰로 송치되었다.

### ○인권간행물○

- 산별노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한국노동사회연구소(778-4225)
  - 주요내용: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산별노조 건설의 의미/각국의 산별노조 건설과정과 단체교섭구조 등 400쪽
- 현장에서 미래를 9.10월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주요내용:노동법 개정투쟁,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신노사관계구상과 노동법 개정투쟁의 방향 등 167쪽
- 시민과 변호사 10월호-서울지방변호사회(3476-0988)
  - 주요내용:강상재 무혐의와 검찰의 중립성/서울의 교통행정/유진호 연구/조봉암 사건 등 277쪽
- 한울노동법강좌 17호-한울노동문제연구소(593-6501)
  - 주요내용:노동법교실-해고무효확인의 노력/판례, "부당노동행위 해고, 위자료 지급해야" 등 64쪽
- 암호명 포고령 13호
  - 주요내용:삼청교육대의 진상규명/서영수 씨의 삼청교육대에서의 체험/포고령 13호 전개과정 등 168쪽
- 사람과 일터 10월호
  - 주요내용:이성부족으로 해매는 한국의 통일 운동·통일정책/지나친 노출은 성폭력을 유발하는가 등 167쪽
- 월간 「민족예술」 10월호 - 민예총(743-5872)
  - 주요내용:세계체제로서의 자본주의와 GNP 1만불 시대의 한국경제/김홍준 감독론 등 92쪽
- 전국연합 「통신」 제107호-전국연합(921-4090)
  - 주요내용:연세대 사태에서 발견한 이 땅의 인권현실/현대판 분서갱유, 대학신문 탄압/김영삼의 나라/북한의 최근 국제 동향 등 108쪽
- 함께걸음 9월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주요내용:실업계 고등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장애 관련 4개 법 이렇게 제 개정되어야 한다 등 85쪽
- 여성의 눈으로 9.10월호- 여성의 전화(269-2962)
  - 주요내용:해의입양아들의 한국 뿌리 찾기/말하지 않는 북경여성대회/행복한 결혼 생활 불일치 없다? 등 56쪽
- 「우리네 아이들」 10월호-지탁연(275-8505)
  - 주요내용:부모 성교육을 위한 제안 및 실천 자료/유치원 1년 무상교육에 대하여 등 79쪽
- 후원회 소식 통권 59호 -민기협양심수후원회
  - 주요내용:우리손으로 매듭지어야 할 '80년대'/한총련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폭력 보고서 등 23쪽
- 자료집: 「가정폭력방지법 시안공청회」
  - 주요내용:가정폭력 현황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가정폭력 방지법 시안의 내용과 방향 등 80쪽
- 자료집: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 주요내용:노동법개정투쟁 현황과 대책/96전국노동자대회 기획안/노개위 요강소위 논의의 결과 보고 등 62쪽



### 제1회 인권영화제

일시 : 11월 2-8일  
장소: 이화여자대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해자진술권 반드시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전두환 씨의 11명에 대한 내란목적살인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진술권 행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민변은 "1심 재판과정에서 5·18 피해자들의 진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건부분의 진상이 명백히 드러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진술하고자 하는 사실들은 1심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사실들로서 항소심의 주요 쟁점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의 점에 대해 1심 무죄인정에 대한 반론을 펴게 된다. 기본권인 법정진술권 형사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은 공평한 재판을 위한 기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제294조의 2 제1항). 또한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소법 제294조의 2 제2항). 이에 따라 87년 4월 17일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적절하고 공평한 재판을 해야 하며, 나아가 형사피해자에 게 법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준 적극적 입장에 있다"고 선고했다.

### "불법채류자엔 인권없다" 법무부, 약속 파기

법무부로부터 신변보장을 약속받았던 내팔인 노동자 빔 스텔라 씨가 지난 4일 인천 검단공단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돼 외국인노

동자대책협의회 등으로부터 '약속파기'라는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스텔라 씨는 불법채류자 집중단속기간 중 불심검문으로 연행됐으며, 현재 휘경동 외국인노동자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

스텔라 씨는 지난 6월 김해성 목사 등의 구속에 항의하며, 명동성당에서 37일간 농성을 벌였다. 당시 법무부는 "농성에 참가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일체의 보복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채류심사과장은 "당시 법무부의 입장은 외국인노동자들을 추적, 연행하지 않겠다는 뜻일뿐, 경찰에 의해 연행된 사람까지 풀어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불법채류자에게 보호해 줄 인권이란 없다"고 주장했다.

### 피해자 진술인 입증 내용

◎김동원 씨... 80년 당시 전남대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교수이자 전남대 대학평의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중 5·18 이후 공수부대의 학생·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살상을 직접 목격했다. 피고인들에 의해 예비검속 대상으로 분류되어 합동수사본부의 추적을 받다가 그해 7월 4일 연행되어 18일간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교수직에서 강제해직당하는 등 피고인들의 내란과정에서 극심한 협박 및 폭행·상해 등을 당했다. 그는 피고인들에게 내란 목적의 살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김준봉 씨... 당시 광주시 소재 고려시멘트 사원으로 근무중 그해 5월 21일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현혈운동에 참여하다가, 22일부터는 시민군 치안질서반에서 일하는 가운데 강제병독침사건을 직접조사하였다. 27일 상무대에 연행되어 조사과정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고 내란중요인무중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 81년 4월 석방되었다. 출소후에도 보안관찰대상으로 감시를 당했고, 5공시대 전혀 취직할 수 없었고, 고문후유증으로 현재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등 이 사건으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이다. 김준봉 씨는 특히 광주시민이 도청을 접수한 뒤의 시민군지휘부의 활동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다.

◎정수만(50) 씨... 80년 5월18일 이후 계엄군의 살상행위 등을 목격하고 27일까지 시민들의 항쟁행위에 직접 참여했으며 친동생이 이때 계엄군에 의해 살해당하였고 다음해 5·18 1주기 추모제를 거행하다가 현장에서 체포·구속되어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계엄군의 잔혹행위,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은폐행위, 광주문제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 등을 입증하고자 한다.

항소심 주요쟁점 증언 박연철·양영태 등 4명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한 피해자 진술 신청인은 김동원(58) 김기수(67) 씨 등 5명인데, 이들 모두 80년 광주항쟁을 겪은 피해자들로 무엇보다 그들의 삶 자체에서 당시의 참혹상을 살필 수 있다. 이들 진술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내란 목적의 살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며, 피고인들의 양행과 관련해 공수부대의 진압의 잔혹성과 학살의 참혹성, 체포된 재야인사들에 대한 가혹행위의 잔인성 및 광주문제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등을 입증할 예정이다. 또한 피고인 정호용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내란목적살인

## 경보전기 유령노조 5년간 지속 국감서 폭로에도, 회사 폭언등 여전

OECD가입으로 선진국 진입을 들먹이는 시점이지만, 유령노조가 버젓이 존재하고 노동자 인권을 함부로 유린하는 사업장이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경보전기(대표이사 김용현)에서는 지난 5년간 유령노조가 존재해 왔으며, 사내에서 관리자들의 폭언과 폭행이 상습적으로 벌어져 반발을 조래해 왔다. 또한 지난 12, 14일엔 지역노조(서울동부지역 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4명이 출근을 저지당하고 작업장 내에 있던 조합원 1명이 회사밖으로 쫓겨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현재 1백60여 명의 경보전기 직원 가운데 46명이 지역노조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회사는 유령노조를 내세워 이들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계속된 선전과 방해로 인해 다수 직원의 조합가입을 막아 왔다.

관할 성동구청측은 10월 2일자 공문을 통해 "경보전기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노동조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령노조로 판

정했으며, 같은날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회 김성곤 의원도 경보전기의 노조가 유령노조임을 폭로하고 직무유기의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을 질타한 바 있다.

김지희 동부지역 금속노조 위원장은 "경보전기 유령노조는 조만간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노조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한 인식을 깨뜨리고 노동자들의 성원을 얻기까지는 더 힘든 투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사 유 아무개 주임으로부터 상습 폭언과 인격모독 행위를 당한 김승미(26) 씨는 9월 23일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5일 유 씨의 행위를 목격한 15인의 서명을 추가로 제출했다.

### 제12기 나눔이 모집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12기 나눔이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PC통신, 외국어, 컴퓨터, 그의 사무업무이다.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접수기간은 24일까지 문의: 576-7128, 576-5513~4

## 인권영화제의 주인이 되십시오

제1회 인권영화제는 여러분에 의한 여러분의 영화제입니다. 매 구좌마다 담긴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을 통해 영화제는 힘있게 개최될 것입니다. 개인은 1구좌 1만원 이상, 단체는 1구좌 5만원 이상입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의 후원을 기대합니다.

☛ 후원계좌: 제일 110-20-342272

국민 822-21-0276-824

농협 033-02-119388

(예금주 서준식)

☛ 연락처: 704-7461/715-9185

## 주/간/인/권/호/름

(96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7일> (월)

ILO 고용주의 사생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규약 마련/한국개발원, 정리해고제·공기업인영화 적극 도입 주장/서울시 방과후 아동 보육시설에 설치비 지원하기로/<자카르타 포스트> 보도,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 국내에서 반대 직면

<8일> (화)

영광 원전 5·6호기 건설을 반대해온 지역 주민 한상석 씨 영광군의 영광 5·6호기 건축허가가 위법행위라며 전남도에 행정심판 청구/신한국당, 삼척교육피해자 보상문제 법원판결에 맡기기로 결정/노동부 국감자료, 95년 산재 근로자수는 94년 보다 13.5% 증가한 7만8천34명이며 경제적 손실은 5조6천6백79억원에 달한다고 발표

<9일> (수)

이상수의원 국회 재정경제원 국정감사에서 시증은행들의 신입행원 채용시 신원조사 불법이라고 지적/「학교내 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대위」, 황수연 전 신양중 교장의 성추행혐의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에 불복, 항고하기로/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96-97년도 군사력 균형> 연례보고서, 아-태 지역이 세계 제2의 무기수입시장으로 성장했으며 한국은 이 지역 3위의 수입국이라고 보도/미국 소비자보호단체 '공공시민' 미연방정부에 전국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중 1/4 폐쇄촉구/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내용 둘러싸고 방송의 자율권과 독립성 침해라며 프로듀서 반발

<10일> (목)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열고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파업등 투쟁 결의/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 경기 동두천시 접대부 피살사건 용의자인 미군 제2사단 에릭 스티븐 유니크(22) 이병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받아/5·18공대위와 민변 등 5·18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진술권 행사할 5명 선정해 재판부에 진술권 신청키로/독일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 난민 13만5천명 본국으로 강제송환키로/유엔관리 발표, 전세계 영양실조자의 2/3가 아시아지역에 거주한다고 <11일> (금)

한국 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결정/벨로 동티모르 카톨릭 주교와 동티모르독립혁명운동 대변인 호세 라모스 오르타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지난 3년간 민주노총 산하 노조 108곳과 노동자 9백15명 대상으로 조사결과 비정규직노동자 4.6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서울지검 공안1부 정홍화 검사 남파 간첩 김동식 관련해 불고지침의로 구속기소된 허인회 씨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구형/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 이문옥(50) 전 감사원 감사관이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확정

<해설>

동티모르 독립운동을 위해 힘써온 벨로주교와 호세 라모스 오르타 동티모르저항평의회 공동대표가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대대적인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그동안 언론과 정부가 보여온 냉대를 떠올리게 된다. 93년부터 국내 인권단체들은 동티모르 독립을 위해 미력하나마 활동해 왔으나 무관심 속에 묻혀왔기 때문이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내에서 동티모르 독립 지지운동이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 제1회 인권영화제

일시 : 11월 2-8일  
장소 : 이화여자대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노벨평화상 계기로 동티모르에 관심

### 인권협 등, 정부에 인권외교 정책 수립촉구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동티모르연대모임 준비위원회는 지난 주말 벨로주교와 조세 라모스 오르타 씨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환영하며, 이번 수상이 민족자결권을 빼앗긴 채 20여 년동안 고통받아온 동티모르인들에게 커다란 격려가 되길 희망했다. 또한 동티모르를 침략한 인도네시아 정부를 정치·경제적으로 후원해온 한국정부와 기업이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보편적 인권에 입각하여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75년 인도네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시작된 동티모르의 비극은 전체 인구 70-80만 명중 1/3인 약 20-30만 명의 목숨을 앗아 갈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91년 11월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민간인에게 인도네시아 군대가 무차별적으로 발포해 사상 2백73명, 실종 2백55명, 부상 3백76명이라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 산타크루즈 학살사건은 80년 광주학살 비극을 연상시키고 있다. 그동안 국제연대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들이 동티모르 독립지원 운동을 벌여왔으며, 95년 51차 유엔인권위에서 호세 아알라소 인권고등판무관의 동티모르 방문이 결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강대국과 아시아 주변국들은 자국의 국익을 앞세워 심각한 인권침해를 외면해 왔는데, 최근 유럽연합등이 세계무역기구에 계소한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에 이어 자동차가 관련돼 있음은 잘알려진 사실이다(인권하루소식 9월 21일자 참조).

#### 93년 첫 방한, 외무부 면담 거절

한편 국내에서의 동티모르 독립을 위한 인권단체들의 움직임은 93년을 시작으로 매년 동티모르 독립운동가의 방문과 연대로 이어져 왔다. 93년 11월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초청으로 국내 처음으로 마리 빈 아무드 알카티리(47, 독립혁명전선 외교부장) 씨가 방한해 국내 언론과 사회·인권단체 등에 동티모르 문제를 소개하고 민간단체의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외무부는 알카티리 씨와의 면담을 거절했다.

이듬해 11월30일 인권협 초청으로 동티모르독립운동가 로케 로드리게스(47) 씨가 두번째로 방문했을때, 방한기간중 국내 최초로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동티모르의 자결권 보장과 동티모르 양심수 자나나 구스마오 씨의 석방 촉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작년 12월초에는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한 조세 라모스 씨가 비공식으

로 방문했으며, <인권하루소식>은 그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은 바 있다. 당시 그는 5·18항쟁과 산타크루즈 대학살을 비교하면서 불처벌에 관한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한국에서 동티모르독립운동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되길 희망했다. 또한 한국정부측에 동티모르에서 인도네시아 군대가 철수하고 독립을 위한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유엔에서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티모르 연대모임 창립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최근 동티모르연대모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오는 11월 12일 산타크루즈 학살 추도일에 맞춰 창립발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인권협은 성명에서 '국내인론들의 무관심과 한국정부의 냉대'로 그간 활동이 큰 관리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동티모르 문제 해결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 성추행 항의에 폭력으로 응답 경찰, 여연 캠페인 상식밖 진압

한총련 여학생들에게 자행된 성추행 만행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또 다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치졸한 작태를 연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여성민우회, 여성의 전화 회원 20여명은 15일 오전 9시 30분 국정감사가 벌어지는 경찰청 정문 앞에서 여학생 성추행 만행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캠페인이 시작되기도 전인 9시 35분경 의경 1개 소대 50여 명의 병력이 여연 회원들을 방패로 에워싸고, 청사외곽으로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했다.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여연 회원들과의 심한 몸싸움이 있었고,

오전 9시 45분경 참가자들이 연행되어 담장차에 실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해산하지 않을 경우 전원 연행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며, 성명서마저도 낭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날 경찰이 행한 상식밖의 진압은 지난 8일 국회내무위가 행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학생 성추행 만행의 진상이 추미애(국민회의) 의원에 의해 생생하게 폭로된 이후 확산된 비난 여론을 차단해 보려는 고육지책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연은 15일 각 사회단체와 언론사에 성명서를 발송,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경찰의 사건 은폐·왜곡기도 중단 △신한국당 내무위 소속의원 사과 등을 요구하였다.

### '민주노총 정리하고 수용'기사 오보 노개위 수정안에 민주노총 불참 재확인

15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민주노총, 정리하고 수용' 또는 '민주노총, 타협안 제시' 등의 기사는 민주노총측의 의사와는 상반되는 확대과장 보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은 15일 "노개위 불참의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민주노총이 정리하고, 변형근로제를 수용해 노개위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15일자 일간지의 기사를 전면 부인했다. 동시에 아무런 확인과 정없이 왜곡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오히려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민주노총측이 아니라 노개위측이었던 것으로 전한다. 지난 12일 노개위측은 △8시간 상한의 변형근로제 △89년 대법판례에 기초한 정리하고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측은 "48시간 변형근로는 주 40시간 근로시간과 연계되어야 하며, 정리하고제는 노조와 '협의' 사항이 아닌 '합의' 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하기 위해 14일 노개위를 방문했으나, 민주노총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회의에 참석치 않았다고 밝혔다. 노개위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총은 노개위 복귀를 공식 결정하지 않았으며, 일부언론에 민주노총이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하고제 등을 무조건 수용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틀렸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13일 임원 및 산별대표자회의를 통해 △자주적 단결권의 조건 없는 보장 △교사의 노동기간 상한 △교사별직 노사관계법 개악 저지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 주요 공판 안내

- 10월16일(수) 이종철, 국보법, 오전10시, 9단독, 신건, 526호
  - 10월17일(목) 양귀성,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선고, 319호 강순정, 이승환, 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속행, 319호
  - 10월18일(금) 함운경, 국보법, 오후4시, 10단독, 속행, 525호 김우호(한총련 중앙위원), 국보법, 오후2시, 합의5부, 속행, 404호
- <한총련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국보법상 찬양·고무동 위반) · 합의21부, 422호, 오전10시: ※김대강/민병국(건조물침입 등)/★서명훈의 6, 나형선의 1, 김민호의 2, 양찬열의 2 · 합의21부, 422호, 오후2시: ★소형주, 김상현/※박병현, 윤석태/◆구분우/★김동준의 2/◆이동수·최진선, 김상범, 장석문/★오민준 · 합의22부, 319호, 오전10시: ★이영래의 4, 백승일의 6 · 합의23부, 311호, 오전10시: ★홍은철/신승용(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지용, 강현용, 현규석/김재중, 조지훈, 장광수, 조민규(집시법 위반)/★박정호의 1 · 합의23부, 311호, 오후2시: ★이국환의 1/◆박종환, 박명정/배종훈(건조물침입등)/최정기, 윤명민, 조영민(집시법 위반등)/※서정관/◆조성준, 문갑태, 윤화중 -이상 서울지법 형사부

### '영화법 위헌 당연' 민변, 검열폐지 지지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최영도 변호사)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영화법 위헌 판결을 진심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인류가 경험한 오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야말로 다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검열제도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도 허용할 수 없다는 깊은 체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변은 검열폐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음란물의 유통이나 상영 등은 현행 형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의해 사법처리될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공론이 계속 등급심의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현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문제는 행정상 단속의 실효성의 문제일 뿐 검열제도 철폐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 차별에서 평등으로 외노보호법 제정 움직임

정부가 10월달을 외국인노동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과 차별폐지를 위한 운동이 활

발히 전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진보민중청년연합, 10월 청년행사모임 등 노동·청년·학생단체들은 '10월 외국인 노동자의 달'을 맞아 각종 캠페인, 심포지움 및 입법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노동과 경제, 인권연대 등 수도권지역 약 10여 개 대학에서는 10월 초부터 일제히 외국인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서명과 캠페인을 벌여왔다.

문화정치 유토피안, 진보를 위한 청년연대 등은 13일 이화여대 가정관에서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심포지움을 열었다.

13일 열렸던 심포지움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3시간 여 동안 진지한 토론이 계속되었다.

첫번째 발제자 박찬민(유토피안) 씨는 인권의 관점에서 외국인노동자 차별과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차별 없는 노동법 적용, 즉각적인 노동허가제 실시 등을 주장하였고, 두번째 발제자 박성호(진보를 위한 청년연대) 씨는 외국인 대량이주를 낳게 한 자본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국제연대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외국인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은 10월 말까지 계속되는데, 오는 19일 제3차 시민캠페인과 20일 96청년문화제, 27일 구미 외국인문화잔치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활발하게 제기되며, 정부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과 차별폐지를 위한 운동이 활

###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를!

지로용자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제1회 인권영화제  
일시 : 11월 2-8일  
장소 : 이화여자대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송덕공고생 노조활동 이유로 강제 퇴사 고교실습생 직업선택권 보장 등 대책마련 시급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취업전선으로 나가야 하는 실업고 학생들. 이들은 '교육목적상'이라는 애매한 이유만으로 자신이 일할 직장과 노동조건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게다가 노조 가입을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강제 퇴사시키는 등 학교당국의 권한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4일 성동구(주)경보전기에서 송덕공업고등학교(교장 이영자) 실습생 14명이 집단 사직한 일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준 사건이다.

서울동부지역 금속노동조합측(위원장 김지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정보전기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을 발표하고 조합활동을 시작하자, 이를 뒤인 25일 송덕공고 안 아무개 교사가 회사를 찾아왔다. 안 교사는 실습생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누구냐? 노조활동을 하면 학칙에 따라 제적시키겠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으며, 결국 실습생들은 10월 4일자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다.

송덕공고 취업담당인 안 교사는 "학생신분에 조합활동을 해서 안된다. 학생들이 경보전기의 노사문제에 휩쓸릴 것이 걱정돼 퇴사시켰다"며 사직을 강요한 사실을 시인했다.

실습생도 근기법 적용대상 민주노총 법규부장은 "학교측이 회사를 선정할 수 있고, 옮길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거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퇴사조치를 내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89년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86다카2920)는 "고등학교 실습생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실습생의 조합활동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장선택문제 등과 관련한 학교측의 간섭과 재량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법적 장치는 없는 현실이다. 전 교조의 송대헌 교사는 "현장의 실습생들에겐 불만이 많다"며 "최소한 본인의 직업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종강 한울노동상담소 소장도 "실습생

인권보장을 위한 연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습생 인권문제는 한 때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온 바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학칙에 따라야 하는 학생이라는 이중성 때문에 실습생들은 직장내에서 반인권적 대우를 받아왔고, 그 실상이 메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송덕공고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과 연구작업이 과제로 남고 있다.

### <한총련 공판 방청기>

#### 검찰, 박수를 찬양·고무로 둔갑시키다

15일 오후 3시50분 서울지법 공판정 311호, 1백50여 개의 방청석 어디에도 빈 자리는 보이지 않고 통로도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다. 그러나 같이 온 사람끼리도 선뜻 눈을 마주치거나 귀속말을 주고 받지 않는 이상한 침묵이 흐르고, 가끔씩 마른 기침소리만 들려왔다.

정각 오후 4시. 재판부가 입장하고, 법대 아래 좌우에 검사와 변호인이 착석하자 공판은 속개되었다. 이날 공판의 15번째 피고인이 재판장의 호명에 따라 입장했다. 피고인 김모 충청총련 대의원(모대학 노어노문학과 4학년)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위반 혐의라는데, 덩수룩한 뒷머리칼 아래 컷부리가 한참 엷어 보였다. 국가변란을 피하는 어마어마한 조직 한총련의 대의원은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다.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의 통일전선전략에 따라 결성된 범청학련의 지시하에 범청학련 남측본부에 주회한..."으로 시작되는 검찰의 추상(?)같은 직접신문이 높낮이 없이 지루하게 계속되었다. 그러나 정각 몇 권의 사회과학서적, 한총련 대의원대회 자료집, 범청학련 남북해의 연석회의에서 박수를 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따위가 북한을 찬양·고무한 증거의 전부일 뿐이었다.

매번 검찰의 토씨 한자 틀리지 않은 신문내용은 이날의 마지막 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 때까지 계속되었다. 피고인들이 친북용공 사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무리하게 입증하기 위해 검찰측이 구체적 혐의사실의 적시없이 장황하게 제시한 정황들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첫 공판임에도 불구하고 62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자 19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대한 구형이 이루어졌다. 징역 6년의 중형이 구형된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에게 단기간에서 장기 3년, 3년의 징역형이 구형되었다. 선고공판은 10월 29일이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게 대한 구형은 검찰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변호인들이 전원 동의하지 않아 10월 29일로 연기되었다.

## "도대체 뭘 말할 수 있나" 교내 낙서판 게재에 국보법 적용

'소나기' 라는 낙서판을 통해 무장간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신문에 게재했던 동국대 신문사 편집장이 16일 구속됐다. 경찰은 국보법상의 고무·찬양 혐의를 적용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자 1명을 더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번 동국대생의 구속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 뿐 아니라, 공안분위기에 편승한 억지 수사라는 데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

내고 있다. 문제가 된 '소나기'란은 특정주체에 대한 학생들의 풍자와 재치를 있는 그대로 옮겨 실는 란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어구들은 교내 낙서판에 적힌 학생들의 의견을 단순 나열한 것에 불과한데도 공안당국은 여기에 국보법상의 찬양·고무죄를 적용하고 있다. 독자의 판단을 돕고자 문제가 된 동국대신문의 내용을 아래에 전재한다.

### 소나기

#### <무장간첩 사건을 보고>

- ▶수색하는 국군도, 도망 다니는 공비도 불쌍한 한민족
- ▶역시 독도문제에 비하면 새발의 피 아닐까
- ▶북에 있는 우리간첩(?) 몸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북한학과 학생입니다.
- ▶최신식 총으로 같은 '인간'인 북한군을 잡고 있는 군인을 람보처럼 보고 있는 무지한 TV watchers
- ▶불쌍한 공비아저씨 죽지말고 무사히 탈출하세요
- ▶국군장병 아저씨들! 무장공비 아저씨들이 새군데만 내려오면 우리나라 디비지겠다. 똑바로 잡아라.
- ▶전철우가 뭘 생각할까.
- ▶날씨도 추워지는데 댕이 치내 불쌍한 무장공비들 고생들 해.
- ▶가끔 김정일은 김영삼을 돕습니다.
- ▶한총련! 간첩사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라.
- ▶죽어간 전우에게 애도를...
- ▶간담들! 내 성격 알지. 예미군 동원되기전에 빨리 넘어가라. 앙~
- ▶무장은...간첩이 아닌데...
- ▶한총련도 간첩도 홍구오빠도 한 목소리로 우리 영삼씨를 도와주고 있네요.
- ▶자기들끼리 다 먹고 우리는 쇼만 보고 재밌는 세상 이군.
- ▶잡아야지 간첩은 03이 편이야. 원래
- ▶참 신기하다. 시기적절한 게
- ▶별이 진다, 별이 진다, 별이 진다.
- ▶'각본'이라고 의심했다가 끌려가는 판인데. 도대체 무서워서 뭘 이야기 할 수 있겠나?
- ▶간첩도 인간이다. 생포하되 죽이진 말자.
- ▶아! 슬프다. 내 기필코 복수하리라.
- ▶슈퍼 카미트 신발 대량 구입했는감?
- ▶쌈술한 아픔의 한 귀퉁이다.
- ▶잘 짜여진 한편의 시나리오를 보는 듯하다.
- ▶남북한 모두에게 '빠때루'를 쫓겨 된다.

## 근조! 명동성당 신도들, 농성장 강제철거

15일 밤 9시경 명동성당 입구엔 50여 명의 철거반이 나타나 전혜투와 한의대생들이 사용하던 농성장을 완전히 때려부숴냈다. 철거의 현장책임자는 성당 평신도회 회장과 사무장, 철거반원은 신도들이었다. 천막을 쓰러뜨리고, 집기를 칼로 찢어버리던 그들은 더 이상 사랑의 전도사도, 약자의 이웃도 아니었다.

16일 오전 명동성당에선 더 이상 전혜투의 깃발이 보이지 않았다. 형체를 잃어 버린 농성장은 찢겨진 플래카드와 천막, 스티로폼 해투의 깃발 대신 '근조, 명동성당'이라고 쓴 깃발만이 펼쳐졌다.

전용철(39·의보노조 해고자) 씨는 "갈 곳이 없다.

## OECD, 한국노동법 개정 감시 정부 "국제적 수준 개정 약속"

OECD 이사회는 한국의 가입을 최종 결정하면서 한국정부에 올해 국회 회기 내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노동법 개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상설 감시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노총에 따르면,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의 가입 초청을 최종 결정한 것은 한국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권을 국제적 규범에 준해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한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민주노총측은 전했다.

이번 OECD 이사회에서 노동법 개정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온 것은 미국 노총의 적극적인 활동에

당장 오늘부터 노숙에 들어간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한의대 농성단인 이철환(한의학 박사) 씨는 "평신도들이 스스로 나선 건지 정부의 압력이 들어온건지 의심스럽다"며 "마이클 채스도 만나는 추기경이 우리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명동성당은 민주화의 성지가 아니라 또다른 인권탄압의 현장으로 바뀐 것이다. 거기엔 최소한의 포용력조차 실종되어 버렸다.

무엇보다 이번 일은 단지 몇몇 신도들의 과격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장덕필 주임신부는 지난 13일자 주보를 통해 "농성장이 짜증과 무관심을 자초하고 있다"며 "더 이상 농성장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신도와 목회자가 공범이었던 것이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총의 스위니 위원장이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앞으로 보낸 지난 3일자 서한에서 한국의 노동법이 국제 규범에 준하게 개정되어야 하며 노동법 개정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OECD 가입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법 개정 현황 감시기구」는 OECD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의 임원진과 추가위원으로 구성되며,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비금가는 위상을 갖게된다. 또한 노동조합자문위원회의 협력 하에 월 1회 모임을 가져 총측은 전했다.

이번 OECD 이사회에서 노동법 개정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온 것은 미국 노총의 적극적인 활동에

### 제1회 인권영화제

일시 : 11월 2-8일  
장소: 이화여대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국보법 구속 남편과 이혼해야 교사 임용 경기도 교육청, 차정원 씨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남편이 간첩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될 수 없었던 차정원(33)씨. 현대판 연좌제의 희생자 차 씨가 남편과 이혼했다면 교사에 임용됐을까? 지금이라도 남편과 헤어진다면 임용제의 결정은 철회될 수 있는가? 경기도교육청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답변서를 통해 △차 씨가 남편이 간첩인 줄 알면서도 결별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수시로 간첩인 남편과의 면회 등을 통해 교감이 이루어질 것이며, △예국을 가르쳐야 할 교육자로서의 역할기대가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내 교사로 임용할 경우 사실을

아는 학부모들의 수업거부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 이유로 초등교사 신규 임용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이 결정은 경기도교육보안심사위원회에서 내린 것이며, 교육청은 이같은 결정이 학생들의 교육 보호 차원과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합법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차 씨는 지난 8월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된 뒤,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9월 5일자 참조>.

### 노진추 탄압중단 촉구 민운단체책임서명

「민중운동탄압 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0월 6,7일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된 성두현(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 대표) 씨 등 27명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 피해자진술권 허용 촉구 민변 등 재항고장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2개 사회·시민단체는 17일 5·18 시민학살 피해자진술권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일부 기각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항소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정수만 씨 등 5인의 피해자진술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강길조 씨 1인에 대한 신청만을 받아들였다.

이에 민변 등은 "피해자진술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단순한 증인신문과는 명백히 다름에도 재판부가 기각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이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권을 전권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하루소식 10월 15일자 참조>.

### 인권영화제의 주인이 되십시오

제1회 인권영화제는 여러분에 의한 여러분의 영화제입니다. 매 구좌마다 담긴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을 통해 영화제는 힘있게 개최될 것입니다. 개인은 1구좌 1만원 이상, 단체는 1구좌 5만원 이상입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의 후원을 기대합니다.

☞ 후원계좌:

제일 110-20-342272 국민 822-21-0276-824  
농협 033-02-119388 (예금주 서준식)

☞ 연락처: 704-7461/715-9185

##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③ 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간사 정유진 기지촌 여성인권 파수꾼 3년, 미군범죄 자료집 발간 준비

자기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신에게 "선하게 살고,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처럼 살려고 노력한다. 60세가 다 되는 나이에 수녀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엄마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지곤 한다.

그런 엄마는 딸이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단체인 '두레방'에서 일하며 날마다 집에 돌아와 기지촌여성들의 눈물나는 삶을 들려주자, "혹인 혼혈아를 입양하자"고 나설 정도였다. 자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활동가 중에서 운 좋은 편이라고 말하는 정유진(28·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간사) 씨.

매일 미군범죄 2건씩 발생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3년부터 96년 6월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2천2백 93건으로 이중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1백7건(재판권 포기 2천4백32건)이며, 실형을 산 미군은 7명에 불과하다. 적어도 하루에 2건씩은 미군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번 주로 94회를 맞는 미군기지 제1정문앞 집회는 이렇게 늘상 발생하는 미군범죄와 그 해결인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알리는 장이다. 윤금이 사건을 계기로 93년 10월 26일 발족한 '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올해로 3년을 맞았다. 정유진 씨는 창립 때부터 줄곧 한자리를 지켜 왔는데, 발족 당시 조재학 간사(현 사무국장)와 같이 시작했고, 지금도 역시 둘

일을 꾸려가고 있다. "총화 생피처럼 일한다"며 운동본부에 들어와 10kg 가량 몸무게가 줄었다.

모두 미군범죄 피해대상자 일은 고되지만 그러한 노력으로 금요시위가 정착화된 변화 외에도 미군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달라졌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특히 작년 5월 충무로 지하철에서 미군이 한국인 여성을 성희롱하는데 항의하던 시민이 집단폭행당한 사건을 생각하면 이 일을 하는 확신을 느낀다. 바로 조정국 씨 사건은 미군범죄 문제가 비단 기지촌 지역이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 일을 계기로 단일사 안으로는 최장기간인 6개월간 서울역에서 서명작업을 벌였다. 매주 금, 토요일 4시간씩 서명을 받았는데 지나가던 시민들은 줄을 서서 서명을 할 정도였고, 군인·경찰들도 서명을 하는가 하면 기차역에서 나눠주겠다며 유인물을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이 일이 미군범죄에 대해 한국민의 자존심을 살린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87년 세종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4학년 때 부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세종대 학원자주화투쟁은 1학년 입학당시부터 줄기차게 벌여졌는데 4학년때는 수배생활 속에서 1백67일 동안 하루 세 번씩 집회를 조직했고, 그중 하루 2번씩 직접 집회를 진행했다. '학원자주화투쟁에 대한 마지막 평가서를 쓸 때까지는 잡혀선 안 된다'는 오기와 긴장감 속에서 버텼다. 그런 생활

태도별 정도로 건강은 악화되었다. 그러나 그는 평가를 결국 마치고 두레방을 찾아간다. 이미 학생회 때 기지촌여성이 만든 빵을 팔러왔던 두레방 사람이 놓고 간 소책자에서 기지촌 여성 문제를 접하게 되었고, 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뒤였다.

미군 재평가사업 준비 두레방 활동을 시작한지 2개월만에 잡혀가 2개월간 성동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그 뒤 91년 5월 1일 '보석같은 체험'을 마치고 출소한다. 그 다음에 전국 재적생복적추진위원회를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신이 복고하는 것이 세종대투쟁의 마무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결혼생활 2년째로 접어드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난다. 그는 구치소생활을 마치고 나오면서 신랑도 감옥경험

을 한 사람이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졌다고. 그의 뜻대로 남편은 3번의 감옥살이 경험을 갖고 있었다. "생각이 같고 친구이면서 존경하는 사이"- 이것이 바로 정유진 씨가 그리는 부부 모습이다.

하루하루 전쟁같은 일들을 치르고 나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다. 미군주둔으로 인한 재평가사업으로 그간의 자료와 성과를 모아 '미군 51년 자료집'을 펴낼 예정이다.

올해 4월부터 4개월간 그는 비상근 간사로 일하며, 대학원 시험준비를 한 적이 있다. 비록 나뉘었지만 운동본부 살림이 안정되면 재도전을 할 생각이다. 미군범죄의 한 영역중에서 기지촌여성문제-그는 기지촌 여성을 '분단된 조국의 뒤전에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를 정립해 내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는 생각에서이다.

### 행사와 동정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발기인 총회 및 발대식  
·일시:10월18일(금) 오후 3시 ·장소:기독교회관 2층 강당
- 부정부패추방 시민행동 주간 선포식  
·일시:10월19일(토) 오후 2-4시 ·장소:서울역 광장  
·주최:참여연대(796-8364)
- 노동악법 철폐와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공공부문 노조간부 결의대회  
·일시:10월19일(토) 오후 2시 ·장소:여의도 광장  
·주최:공노대(879-0057)
- 제5차 국제연대포럼  
·일시:10월21일(월) 오후 7시 ·장소:참여연대 회의실  
·주최:동아시아 여성의 가능성/여성에 대한 폭력의 배경과 실태, 여성민간단체의 대응 ·주최:참여연대(796-8364)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청원에 대한 기자회견  
·일시:10월21일(월) 오전 10시 ·장소:여성평화의 집 회의실  
·주최: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273-9535)
-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확대를 위한 토론회  
·일시:10월30일(수) 오후 2시 ·장소:이화여대 인문관 교수연구관 111호 ·주최: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연구회

제1회 인권영화제  
일시 : 11월 2-8일  
장소 : 이화여대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온국민 동참을

### 시민연대 발족, 과거청산 촉구·기금마련 계획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상임대표 오재식, 사회교육원 원장, 시민연대)는 18일 오후 3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발기인 총회 및 발대식을 가졌다.

그동안 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힘써온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윤정옥 공동대표는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은 역사를 바로잡아 우리민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며,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다. 또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범죄로 인한 피해, 나아가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정부가 94년 하반기부터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

」을 마련하고 나선데 대한 대응마련으로 정대협에서 할머니들을 위한 모금을 생각해왔는데, 이와 때를 같이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금운동을 제안해왔으며 시민연대가 발족하게된 경과를 설명했다.

**역사 바로잡기 시작**  
오재식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가냘픈 이들 희생자들의 한이 강대국에 의해 진행되어온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고 있다. 바로 이자리는 50-60여 년전 제국주의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를 바로잡는 역사적 자리"라며 "한·일 두 민족의 후손들이 공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를 복원하고, 새 역사를 시작하는 이 일에 긍지를 가지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초 증언자인 김하

순 할머니는 녹색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와 "16, 17살에 당한 일을 50여 년간 마음 속에 써히면서 이제껏 살았다. 그러나 용기를 내 말을 하고나서도 일본이 사실을 부인할 때는 무지하게 가슴이 아팠다"며 일본정부는 속히 범죄에 대한 책임과 법적 배상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70세의 늙고 병든 몸이지만 힘이 다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시아평화를 위한 노력**  
시민연대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비인도적인 전쟁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있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공적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정부의 사과를 받아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마련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일본정부로 하여금 진상조사 및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과거청산 촉구 △한국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생활지원금 증액 촉구 △일본군 위안부들을 위한 생활기금 모금 등 세 가지를 잡고 있다. 이중 생활지원금 증액

부분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50만원으로 증액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

### 문화계 '희망' 차질 고려대, 문화제행사 불허

한총련 사태 이후 학내집회에 공권력이 투입되더니 이제는 문화행사까지 불허하고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96 노동·청년·학생문화제 준비위는 19일 오후 6시 30분 고려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국가보안법 철폐와 노동약법 개정을 위한 「'96 노동·청년·학생문화제 '희망」이 학교측의 불허로 열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문화제 주최단체인 문화제준비위 이기주(한국노동청년연대 의장) 씨는 "고려대측은 외부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허락할 수 없다고 불허이유를 밝혔지만 학내 동아리연합회 등이 행사 주관단체였던 만큼 실효성이 없다"며 "심지어 행사를 강행할 경우 학교측은 공권력 투입까지 요청해 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득이하게 이번 문화제는 19일 오후 6시30분 성균관대 금진대 광장에서 성균관대 동아리연합회 주관으로 열리게 되었다.

한총련 사태 인권피해 사죄를 달달이 공개합니다!  
하이텔 01410-> 참세상  
-> 인권캠페인

## 을지병원 해고자 단식 18일째 실시 병원측, 복직조건으로 반성문 요구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개혁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노동자가 단식농성 끝에 사경을 헤매고 있어 주원지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18일째 노원을지병원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해고노동자 오명희(29·서울을지병원 노조위원장) 씨가 18일 오전, 탈진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또한 오 위원장과 함께 단식농성을 벌이던 조성만(40) 노조 부위원장도 탈진 상태이나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료개혁투쟁 벌이다 해고 두 사람은 지난 해 의료개혁 투쟁을 벌이다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당시 노조측은 CT촬영 등 검사에 의료보험을 적용해 줄 것과 1백80일로 제한한 보험적용을 철회할 것 등의 의료개혁안을 갖고 병원측과 교섭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의료개혁은 교섭사안이

아니다"며 교섭을 거부한 뒤, 교섭투쟁에 나선 노조 간부 2명을 해고했다.

최정화(30) 노조 교육부장은 "노조의 주장은 의료개혁안을 노사가 함께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인데, 교섭을 거부하고 해고까지 한 것은 94년 임투 이후 강력해진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측, 비교섭안 갖고 쟁의 벌인 노조간부 해고 정당 반면 사측의 한진서 사무부국장은 "의료개혁문제는 정부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새삼스럽게 노사가 건의를 해야 하나"며 "비교섭사안을 가지고 쟁의행위를 벌인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노사양측은 중부노동사무소측의 중재로 두 사람의 복직문제에 대해 구두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회사측이 두 사람의 반성문 작성을 복직조건으로 제시하는 데다, 복직시기도 오명희 위원장은 3개월 뒤, 조

부위원장은 1년 뒤로 늦추겠다고 밝히자 노조측은 회사측이 합의를 번복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사무부국장은 "복직을 하더라도 노조활동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노조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를 보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밝혔다.

노원을지병원 앞 단식농성장에는 15일부터 병원노

련 서울지역본부장이 합류한 데 이어, 원자력병원 노조위원장 등 공동교섭단 4명도 17일부터 공동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전해 두 노동자 등이 방문, 을지병원 복직투쟁을 지원하고 있다. 민주노총 병원노련은 오는 23일 노원을지병원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소개 ① <도둑맞은 아이들>

-'더러운 전쟁' Stolen Children: Argentina's Dirty War (1991) Independent Image for Thames Television (50분)

1, 2부로 구성된 다큐멘터리다. 1부는 '5월 광장의 어머니들'이 벌이는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캠페인 과정을 담고 있고, 2부에서는 자신의 출생비밀을 알게 되고 본래 가족을 찾게된 아동들의 증언을 담고 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실종된 후 살해된 딸과 사위의 얼굴을 꼭 닮은 손자의 얼굴을 확인하고도 권력층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손자를 되찾을 길 없는 노부부의 눈물젖은 눈은 비디오에 잡힌 손자의 얼굴만을 응시하고 있다. "오늘이 너희들의 진짜 생일날이다"며 진짜 신분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해 5월 광장의 어머니들이 차려주는 생일상을 받은 어린이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을 때 심정이 어떨지 알 수 있느냐?"고 물으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친구들을 찾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작품 배경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기간인 76년에서 83년에 걸친 군부통치기간 중 발생한 1만여 명의 실종자 중에는 적어도 2백 명의 아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아동은 부모와 함께 실종되었으며, 임신한 상태에서 채포되어 비밀구금장소에 수감된 여성들의 자녀는 출생 자체가 '실종'이다. 이 아기들은 비밀리에 남에게 주어졌고, 일부는 비밀경찰의 가족들에게 넘겨졌다. 그들의 출생은 위장되었고, 어머니는 죽임을 당했다. 이들중 53명의 아동이 실종자 가족들의 모임인 '5월광장의 어머니들'의 추적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생후 3개월 때 부모와 함께 실종된 클라라를 비롯한 수백 명의 아동을 결코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는 아르헨티나의 발의를 통해 '신분보존에 관한 권리'(8조)가 담겨 있다. 7조에서 생명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다루고 있음에도 굳이 '신분보존'에 관한 조항을 둔 것은 신분서류가 고의적으로 꾸며지고, 많은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축보가 자의적으로 끊어진 결과를 낳은 아동의 '대량실종'이라는 면에서 볼 때 특별보호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 인권영화제의 주인이 되십시오

제1회 인권영화제는 여러분에 의한 여러분의 영화제입니다. 매 구좌마다 담긴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을 통해 영화제는 힘있게 개최될 것입니다. 개인은 1구좌 1만원 이상, 단체는 1구좌 5만원 이상입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의 후원을 기대합니다.

☞ 후원계좌:  
제일 110-20-342272 국민 822-21-0276-824  
농협 033-02-119388 (예금주 서준식)  
☞ 연락처: 704-7461/715-9185

### 제1회 인권영화제

일시 : 11월 2-8일  
장소 : 이화여대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안하무인 공권력, 고개 숙인 대학 청년 문화행사, 번번이 원천봉쇄

연세대 사태 이후 정치집회에 대한 탄압과 봉쇄를 일삼던 공권력이 문화행사마저 위협, 무산시키고 있다. 여기에 대학당국까지도 공권력의 횡포에 일익을 담당하고 나서 자유와 지성으로 불리던 이름을 무색케 하고 있다.

고려대에서 불허 통보를 받고 19일 성균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96 노동·청년·학생 문화제 [희망]과 20일 동국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진보민청 주위의 [청년문화제]가 결국 무산됐다. 이 행사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약법 개정 또는 외국인노동자와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인권 보장 등을 위한 평화적 문화행사로 기획됐으나, 학교당국이 장소사용을 불허했고 경찰측은 공권력을 투입하며 행사를 원천봉쇄했다. 행사를 불허한 고려대, 성균관대, 동국대측은 모두 "연세대 사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과 "행사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요한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고려대 학생과장은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약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행사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성균관대 학생과장은 "연세대 사태 이후 외부행사는 절대 금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용상 문제가 있으면, 문화제 행사건 뒤편 절대 불

허할 것"이라 밝혔다. 연세대사태 이후 심각해진 '공안당국 눈치보기' 경정도 이번 사태의 직접적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동국대 학생처 관계자는 "동국대 학보사건 등으로 학교가 어려운 처지다. 평상시라면 허용할 수 있는 행사

지만, 기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전화를 해서 허가할 수 없었다"며 공안당국의 압력을 시인했다. 오랜 준비 기간 끝에 예기치 못한 사태를 맞은 주최측은 즉각 대학당국의 반지성적 작태와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고 나섰

다. 진보민청은 "1억5천만 원씩 들이면서 경쟁적으로 열린음악회를 유지하는 대학이 인권을 위한 청년문화 행사를 불허하는 것은 경권 앞에 있어서 고개 숙이는 과거의 구습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대학당국의 자숙을 요청했다. [희망] 준비위원회측도 "문화제 원천봉쇄는 한총련 사태 이후의 보수기류와 공안탄압기류에 편승한 현정권의 민주주의적 권리에 대한 탄압의 최극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 다시보는 국정감사

#### 수사기관의 폭행·감금·고문등 사건 처리현황(93. 1. 1 - 96. 6. 30)

접수 (건)	처 리 (건)						수사중
	기 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기 타	
583	12	38	418	46	32	29	8

####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통계보고서(93. 1. 1 - 6.30)

유형별	구 분	수리 (명)	처 분 (명)				
			공 판		무혐의	기소유예 불입건	기소중지 내사중지
			구 속	불구속			
경 찰	직권남용	223	2	3	150	10	11
	불법체포·감금	11		1	8		
	폭행·가혹행위	184	2	3	87	15	15
	기 타	5			3	2	
	소 계	423	4	7	248	27	26
교도관	폭행·가혹행위	56			9		3
	기 타	8	1		6		
	소 계	64	1		15		3
기타 공무원		29	1		19		
합 계		516	6	7	282	27	29

92년 522건(무혐의 319, 구속 9)/93년 516건(무혐의 282, 구속 6)  
94년 415건(무혐의 241, 구속 3)/95년 443건(무혐의 218, 구속 3)

### "21세기형 통제 반대" 전자주민카드 철회운동

전자주민카드 시행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조체제가 가동된다. 19일 민교협, 과기노동조합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칭)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국민의 사적 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를 구성하고, 전자주민카드제도 전면 철회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전자주민카드 시행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한 안기부에 의한 보안시스템은 21세기형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공대위는 11월 2일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국민적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동시에 국민의 사적 권리 보호에 관한 입법운동을 펼쳐나

가겠다고 밝혔다.

### 노골화되는 경찰폭력 영광분당 신부 구타연행

경찰이 평화시위에 참가한 신부를 구타·연행하고 이를 말리는 수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교계와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영광 원자력발전소 앞에서 이 지역 사회단체들이 주관한 원전 증설 반대시위가 열렸다. 시위도중 참가한 주민들이 기공식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연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영광분당 이영선 주임신부가 안면 등을 심하게 폭행당했다. 경찰은 심지어 이를 말리는 수녀의 머리수건을 잡아채는 등 안하무인격의 폭력을 행사해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 신부는 영광경찰서 수사과로 연행됐다가 풀려나 목포 성 골롬반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 주/간/인/권/호/름

(96년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14일> (월)  
의료보험연합회 국정감사자료, 6월말 현재 2개월이상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된 가입자 95만8백39명으로 집계/경찰청 국가자료, 올해 살인동 5대 범죄 12만9천1백5건으로 작년에 비해 7.2% 증가, 검거율은 86.2%로 4.4% 감소/OECD 교육분과위, 전고조의 단결권 인정할 것 한국정부에 권고

<15일> (화)  
명동성당 신자들, 성당 입구에서 농성중이던 전해루, 한의대생들 쫓아내/연세대 한총련 시위로 기소된 학생들 공판 시작/근로복지공단, 심장돌발사·부정맥 등 3개 업무상 질병에 추가방침/재계 올 한해동안 1인당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 낸 기업의 경우 임원·종업원 임금 내년에 동결키로/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 비공개로 보고된 군사기밀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된 경위에 대해 국군기무사와 함께 수사착수/이홍구 신한국당 대표,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안기부법 개정 방안 검토 지시/인천시 서구 경서동 수도권 매립지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먼지·소음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서적으로 심한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여연, 서대문 경찰청사 앞에서 한총련 진압과정 성추행 진상규명 요구하며 시위/

<17일> (목)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광주 피해자 강길조씨 진술권 채택/통일원, 한겨레신문사가 벌여온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의 법인 설립 불허/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대공수사력 강화를 위해 1천3백여 명의 경찰 증원과 내년 예산 1천여 억원 증액 요청/민변등 12개 사회·시민단체, 5·18 시민학살피해자진술권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일부 기각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 제출/프랑스 5백만여 명의 공무원과 공공기업체 종사자들 정부의 임금동결과 인원감축 등 긴축정책에 항의해 하루 파업

<18일> (금)  
부마항쟁 17주년/김동진 신임국방장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61년대 연대장이었던 자신의 전력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사과/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아무개(23·여) 피고인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전경추행 밝혀/서울경찰청 3기동대 35중대장 오병국(34·경찰대학1기) 경감, 각 언론사에 보낸 기고문 통해 추미에 의원의 '한총련 학생에 대한 경찰의 성추행진상조사 촉구' 발언 정면 공격/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19일> (토)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가입결정/거창양민학살사건 발생 45년만에 첫 공식 합동위령제 열려/고려대 등, 국보법 철폐와 노동법 개정을 위한 '96 노동·청년·학생문화제 [희망]' 불허/원적복직 요구하며 1일-18일까지 단식농성 벌이던 서울 을지병원 해고자 오명희(노조위원장) 씨 실신

<20일> (일)  
경찰 김포·제주 국제공항 국내선 대합실에서 한총련의 연세대집회 사진과 당시 수거한 쇠파이프 등 전시/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이 주최한 가운데 동국대에서 열릴 예정인 청년문화제 불허

### 주요 공판 안내

<한총련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국보법(찬양·고무등 위반)  
□ 10월22일(화)  
· 합의21부, 311호: ◆양미화,이희석/ ※박선호/ 이태희(집시법)/ ★정경호의 2,이제원,김정규,정종천(이상 오전10시)// ★이병섭의 1,강병일의 2,박노남,송태호,김동관의 1/ 한희정(집시법)(이상 오후2시)// ◆고대규,박기수,모계영,임성중,이종철/ ★반호진의1(이상 오후4시)  
· 합의22부, 422호: 오영진,한지선,고정봉의 2(집시법)/ ★윤병식의 1,박세호,최재혁의 2,이원재의 3/ ◆이도윤◆송승의(이상 오전10시)// ★정부목,이진권,김인식의 2,권태윤,유충복,김준영의 1/ ※박문선,나정채/ 임근연,양창범, 고정봉의 2(집시법)/ ◆강상우,김경희,정명규,이진우,박경홍,김동길/김형주(건조물침입등)/ ◆조원재,정선(이상 오후2시)// ★강광훈(오후4시)  
· 합의23부, 319호: ◆이병구,김용기의 2(이상 오전10시)// ◆이광인,윤영진,강홍배/최인석,오승진(집시법)/ 조성용,이건희(건조물침입등)/★전영진, 김영호(이상 오후2시)//김재중의 5(집시법)/★이광열의 2(이상 오후4시)  
□ 10월25일(금)  
· 합의22부, 422호, 오후2시: ◆이철희  
· 합의23부, 311호: ◆설중호의 10(오전10시)//★허성민의 4,배상돈,정홍기(이상 오후2시)//★강현우의 3,김영관/◆장동기,김백수(이상 오후4시)  
-이상 서울지법 형사부

### 제1회 인권영화제

일시 : 11월 2-8일  
장소 : 이화여대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국민인권기구' 설치 연구검토중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계획없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의 '국민인권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지난 18일 답변을 통해 "97년말까지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국민인권기구' 설치와 관련한 아무런 계획이나

프로그램도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립기구로 도입 검토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인권위원회 도입을 검토중"에 있으며, 97년말까지 법무·노동부·외무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 담당부서의 한 관리는 "아직까지 부서 내에서 국민인권기구와 관련된 구체적 추진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인권문제는 민간단체가 다 알아서 하는데 굳이 정부기구까지 신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인권기구가 생긴다면 어차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역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입장 대변역할 우려  
법무부의 추진상황과는 별도로 국민인권기구는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무부의 답변안을 살펴보면 '인권위원회'의 구성에는 민간인권단체가 빠져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리 는 민간단체를 일러 배제

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민인권기구인 '인권위원회'를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대변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제기된 국민인권기구의 역할과 책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이러한 의도가 구체화한다면 국내 민간인권단체의 심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 학교가 추모비 탈취! 경찰, 공식발표 예정

경원대 추모비 탈취사건의 전모가 조만간 드러날 예정이다.

22일 오후 성남중부경찰서장은 박정기 회장 등 유가협 회원 13명을 만난 자리에서 "추모비 범행은 학교측이 한 것"이라며 "윤곽은 잡았으나 물증이 잡히는 대로 사건 개요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교측은 추모비 대신에 상징물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으나, 유가협측은 "추모비 원상복구의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 다시보는 국정감사

#### 연도별 공안관련사범 구속자 현황

연도	계	국보법	화염병	집시법	노동관계법	기타
91	1,453	320	426	162	135	411
92	836	305	105	104	117	205
93	317	122	25	36	66	68
94	903	367	14	269	89	164
95	623	246	63	129	40	145
96	394	158	38	54	73	71
합계	4,526	1,518	670	754	520	1,064

### 국민인권기구란?

#### 민간단체 참여, 독립성 보장의 핵심

국민인권기구란 사법부와 행정부의 인권관련 부서와 별도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말한다. 국민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이미 60-70년대부터 활성화됐다. 78년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민인권기구를 아직 설립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이 기구를 설립하도록 촉구하였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민인권기구의 활동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91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워크샵에서 국민인권기구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파리 원칙'이 권고안으로 채택되어 93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민인권기구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인권보호와 신장에 관련된 정부의 제반 정책에 대한 보고서, 권고안, 제안문을 만들어 정부, 의회 등의 국가기구에 제출하고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며 △국제인권규약을 가입·비준하도록 권장하고 △인권과 교육을 통해 각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여론화하여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인다.

파리원칙의 논의사항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독립성의 문제이다. 국민인권기구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에 민간인권단체, 노조,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과학자 등 관련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민간인권단체의 참여가 독립성을 보장하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국민인권기구는 현재 약 30여 개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보통 인권위원회 형태이며, ombudsman, 중재자, 민중의 옹호자라는 유사한 기구도 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인권위원회는 차별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를 주로 다룬다.

### "철거에 앞서 주거권 보장 해달라" 방배4동 철거중 ... 주민 8개월째 대항

22일 낮 방배4동. 좁은 골목마다 페타이어 터미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주민들은 머리카락을 들렀다. 바리케이드 너머 마주 서 있는 용역들과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귀에 설지 않은 구호 소리가 들린다.

방배4동 재건축지역에 철거반이 들이닥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도 아무런 예고없이 새벽 5시반 포크레인이 들이닥쳤다. 빈집 서너 채가 포크레인에 의해 쓰러졌고 주민들은 뒤늦게 철거 저지 투쟁에 나섰다. 동명상원의 서울지역 철거민들이 속속 방배4동으로 찾아온 덕에 이날 철거는 중지됐다.

방배4동 재건축지역은 일반 재개발지역과는 차이가 있다. 이곳은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이유로 가옥주들이 재건축을 신청한 곳이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됐건 다수의 세입자들은 갈 곳 없이 쫓겨나게 될 신세에 처했고 8개월째 철거반대투쟁을 진행해 오고 있다.

10여 년간 이곳에 살았던 세입자 권병규(44) 씨. 그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만 마련해 달라"고 말한다. 수년간 마을에 살아온 주민으로서 정든 터전에 계속 사는 것은 자신의 권리라는 주장이다.

곧 이사를 간다는 한 세입자는 "처음부터 이사비용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니 문제가 어렵게 풀리고 있다. 가옥주들의 욕심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아온 것이다. 나는 이사갈 집이라도 있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갈 곳 없는 사람들이다"며 안타까워 했다.

당초 5백여 세대이던 세입자 수는 한 달 전에 70여 세대로 줄더니, 이날 모인 사람들은 25세대에 불과했다. 한 세대 한 세대씩 떨어져 나가는 게 안타깝다면 서도 권 씨는 힘주어 말한다. "우리를 힘으로 누르려고만 한다면, 이제는 대항할 수 밖에 없다."

주민들과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선 용역직원들, 그 사이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준다. 비록 철거를 위해 동원된 처지이지만, 이들 마음도 결코 가벼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용역원 김(29) 씨는 "철거하러 오는 것인지 몰랐다. 일하더라도 즐거워서 하는 일이었느냐. 우리도 겹겹하지만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며 눈길을 피했다.

### 부패방지법 가두서명 참여 연대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는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 1년을 맞아 부패추방시민행동주간을 설정하고, 사무직노조연맹과 공동으로 부패방지법 서명 가두캠페인을 23일 오후 2시 명동성당에서 벌인다.

###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를!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어든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 ---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 ---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세편 소개 ②

#### <망각에 반대하며>

프랑스/ 110분  
1991년 국제 엠네스티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이 영화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사회, 문화, 예술 분야의 저명 인사들이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실권자들에게 실종되거나 감금되어 있는 양심수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빌어 세계 각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고발하고 있다. 장뤽 고다르, 코스타 가브라스, 베르트랑 타베르니에, 샬 아케르만 등의 감독에서부터 까뜨린느 드뇌브, 미셸 피콜리, 사를로트 겐스부르크, 미셸 부케 등의 배우와 수많은 가수, 시인, 문학인, 언론인 등이 참여한 이 영화는 각국의 상황을 작가 특유의 시선을 통해 극영화, 다큐멘터리 뿐만 아니라 실험적인 묘사로도 고발하면서 양심수들의 사면을 호소하고 있다. 영화가 끝나고 자막에 등장하는 모든 영화인들과 문화, 사회적 인사들, 그리고 단체들의 이름은 세계각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한 경고의 메세지이다.

#### <불굴(Tenacity)>

Chris Eyre, Cheyenne / 미국 / 드라마 / 10분  
인디언 보호 구역에서 친진난민하게 전쟁 놀이를 하던 인디언 소년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목격과 결단이라는 버거운 상황에 빠져든다. 죽어간 새의 모습앞에 잠시 멈춰섰던 두 소년은, 술에 잔뜩 취한 채 차를 타고 지나가던 일단의 백인들과 마주치게 된다. 고립되고 버려진 공간속에서 이루어진 대면은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고, 무심코 아이를 치고 도망쳐버리는 어른들의 모습은 폭력과 부패로 얼룩진 기성세대를 상징한다. 이곳저곳에 상징과 은유를 배치시킨 소품 <불굴>은, 작지만 깔끔한 '생명'에 대한 깊은 성찰이다.

#### <유령을 부르며>

(Calling the Ghosts: A Story About Rape, War and Women)  
Mandy Jacobson & Karmen Jelencic/미국/1995/다큐/60분  
다민족국가였던 유고에서 내전이 발발하자 같이 어울려 살던 기독교도 세르비아인들과 회교도들, 그리고 크로아티아인들은 하루 아침에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며 세르비아계의 잔인한 인종말살정책이 시작되었다. 이 영화는 과정에서 폭력적 참상을, 특히 여성들에게 가해진 폭력과 고통을 증언하고, 그것이 전쟁의 부산물로서 우연히 부분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세르비아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었음을 폭로하고 있다.  
1992년 4월 보스니아의 Prijedor시가 세르비아계 군인들에 의해 장악되자 40대의 변호사인 Jadranka Cigelj와 판사인 Nusreta Sivac은 인텔리이자 회교도라는 이유로 세르비아 군인들에게 Omarska Camp로 끌려갔다. 다행히 그곳을 빠져 나와 탈출한 그들은 세르비아 군대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적 살상과 폭력을 세상에 알리고자 힘을 모은다. 그들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여성연합'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힘을 모아, 헤이그에 있는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6년 6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전의 전범재판에서와는 달리 강간을 전쟁의 부산물로서 목인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할 것임을 최초로 결정하였다.

### 제1회 인권영화제

일시 : 11월 2-8일  
장소: 이화여대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한국후꼬꾸, 노조깨기 혈안 노조 방침, “때리면 맞겠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일본인 투자회사 한국후꼬꾸(사장 권순목)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현재 한국후꼬꾸에서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온갖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후꼬꾸 노조(위원장 윤동만)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조 가운데 하나로 손꼽혀 왔으며, 단체협약도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 노조로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일본후꼬꾸 사장인 가마모토 씨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노조를 깨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으며, 회사측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다.

하반기 들어와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무

시하는 것은 물론, 노조파괴를 위한 전문장패를 고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자극하고 있지만, 노조측이 맞대응을 자제함에 따라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

단체협약 일방적 무시 회사는 올 여름 임금협상의 합의사항인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노조의 반발을 불러온 데 이어, 일방적으로 팀제를 확대해 노동강도를 강화했다. 최근에는 야간작업에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일부 공정을 외주화함으로써 등 조합과의 협의 또는 합의사항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

또한 관리 직원이 노조사무실을 야간에 무단침입하

는가 하면, 9월 들어 용역장패 30여 명을 경비원으로 고용했는데, 이들이 회사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협박과 시비를 일삼아 폭력사태를 유도하고 있다. 이들 용역들은 지난해 인근 우신공업의 노조를 와해시킨 전문가들로 지목받고 있다.

폭력...징계...해고...구속 이러한 노조탄압은 징계와 해고, 구속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회사측은 9월 20일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할 징계위 절차를 무시한 채 노조위원장 등 4명을 해고한 데 이어, 지난 7일 추가로 1명을 해고하고 9명 징계, 2명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운동단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을 검찰에 고소하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지난 19일 이승환 노조전집부장과 이재형 교육부장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노조, 파업결의하고도 자제 이에 대한 노조측의 대응 방침은 “때리면 맞는 것”이라고 한다. 노조는 9월 10일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지만 회사측에 구실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 아래, 장패들의 폭력 또는 폭언에 일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4일부터 노조 간부와 핵심 조합원들이 교육을 이유로 건물 안에 감금된 채 용역들에게 통계를 받는 등 갈수록 용역들의 횡포는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료 납부를  
지로번호  
7618848

### 다시보는 국정감사

불법시위 관련 구속자 현황 (90.1.1-95.9.30)

연도	90	91	92	93	94	95
계	1,548	1,078	456	136	473	288

합계 3,979명

### 시위진입 소요비용 및 인력투입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소요된 비용	인력투입
92년	3,658,596	1,509,840
93년	3,480,280	1,475,040
94년	5,042,826	2,639,280
95.9.31	4,563,256	1,717,600

### 인권영화제의 주인이 되십시오

제1회 인권영화제는 여러분에 의한 여러분의 영화제입니다. 매 구좌마다 담긴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을 통해 영화제는 힘있게 개최될 것입니다. 개인은 1구좌 1만원 이상, 단체는 1구좌 5만원 이상입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의 후원을 기대합니다.

#### 후원계좌:

제일 110-20-342272 국민 822-21-0276-824  
농협 033-02-119388 (예금주 서준식)

연락처: 704-7461/715-9185

## 노인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 노령수당 65세이상 지급 판결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인 노인은 모두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특별재3부는 원고 이기남(67)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 지급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 최종결심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관 지침에 따라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소송은 노인들의 최저생활보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데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소송배경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급속한 사회적 분화가 이뤄지면서,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가족 부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며 “시혜적이고 단순 보호서비스 차원의 노

인 복지가 아니라 권리의 보장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 복지에 있어서 소득보장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소홀히 취급된 부분이다.

95년 생활보호대상 노인 소관결을 내렸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관 지침에 따라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시정이 불가피해졌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인복지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24일 노인복지법과 생활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개정청원할 것이라 밝혔다.

## 6월항쟁 10주년 기념 유덕상위원장 석방촉구 < '96 당당하게 > 지하철노조협의회

전국대학민주운동연합의 회·전대협동우회 등은 오는 11월 3일 오후2시 전국대학민주운동연합과 3일 오후5시 문화공연 < '96 당당하게 >를 벌인다.

이 행사를 통해 주최측은 “우리사회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그와 함께한 대학·청년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더불어 6월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6월항쟁 10주년을 맞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은 무료형태로 열리며, 대신 6월항쟁 10주년 기금을 모으는 초대권(3천원 기준)을 발매한다. 수익금은 6월항쟁 10주년 기념사업 기금 및 구속학생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통신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유덕상(한국통신노조)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는 유덕상위원장의 구속은 한국통신노조의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무산시켜 민주노총 가입과 규약개정을 막기 위한 것이며, 추후 전개되는 한국통신노조 선거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노동법 개정투쟁을 앞두고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 헌권의 적

#### 「가내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

집 안에서 일하는 가내노동자는 얼마나 될까? 아마도 가내노동자 스스로도 ‘노동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부업’을 한다고 생각해 왔는지도 모른다. 현재까지 가내노동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어 그 규모와 추이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 하청관계 업체는 매년 급증해 91년 73.6%를 차지했다. 또한 출판업에서는 교정·편집 등 많은 부분이 가내노동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89년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가내노동자는 경제활동 인구의 9.4%를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는 83차 총회에서 전세계적으로 가내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따라 국제법상 최저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을 갖고 ‘가내노동조약’과 ‘가내노동권고’를 채택하였다. 국내에서도 조약비준과 조약에서 제시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가내노동자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10월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가 펴낸 자료집 「가내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른 가내노동자의 권리」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집의 목차를 보면 △한국의 가내노동자 현실 △가내노동자들의 국제적인 운동 소개 △ILO 조약과 권고에 따른 가내노동자의 권리 △우리의 권리,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순이다. 부록으로 가내노동자조약과 권고 전문을 실었다. 가격은 3천원이며 구독신청 869-1347 <가내노동자조약과 권고문 다음호 게재>.

### ● 행사와 동정 ●

□ 6월민주항쟁 10주년 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 발기인대회

· 때:10월 31일(목) 오후7시  
· 곳: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최:6월민주항쟁 10주년사업 추진준비위원회(747-0610)

□ 학단협 제9회 연합심포지움- 한국사회의 지배구조 '재벌과 언론'

· 때:10월26일(토) 오전10시-오후6시30분  
· 곳:서강대학교 다산관 빌딩 101, 102호  
· 주요내용:재벌과 언론(이상희)· 재벌문제의 총체적 인식과 재벌체계의 개혁방향(홍덕률, 공계욱)· 90년대 언론정책의 변화와 언론구조의 변동(김서중)/재벌과 금융(김상조)· 한국의 유통산업과 재벌의 유통지배(유기준)· 재벌대기업의 여성고용정책과 여성노동자의 특성(정해선)  
· 주최:학술단체협의회(271-0491)

□ 부패추방을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한국의 선택

· 때:10월30일(수) 오후1시30분  
· 곳:한국프레스 센터  
· 주최:참여연대(796-8364)

□ 6월항쟁 10주년 사업 추진 준비위원회 발기인 모집  
6월 민주항쟁 10주년 사업취지에 공감하여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747-0610



D-8일 전  
제1회 인권영화제  
일시 : 11월 2-8일  
장소 : 이화여대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천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길가던 대학생 강제연행, 4시간 감금

### 광주북부경찰서, 한총련 수배자로 오인

지난 19일 광주에서 경찰이 길가던 대학생 수배자로 오인해 강제연행한 뒤, 4시간 동안 불법 감금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밤 9시경 전남대 앞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이 아무개(20, 전남대) 씨는 갑자기 나타난 피한 6명에 의해 영문도 모른채 끌려갔으며, 광주북부경찰서에 도착해서야 그들이 형사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한총련 수배자인 줄 알았다"며 연행 사유를 밝혔지만, 그의 신원이 확인된 뒤에도 조사를 이유로 4시간 이상 불법 감금했다. 경찰은 각종 시위사건들을 가지고 이 씨와 대조작업을 벌였고, 이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음에도 오히려 진술서를 강요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당사자인 이 씨는 군입대, 취직 등을 앞두고 불이익이 돌아올 것 등을 염려해 아무런 피해보상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씨는 "연행과정에서 팬티가 드러날 정도로 옷이 찢어지고 벗겨졌다. 인간 존엄성이 너무나 쉽게 무시되는 상황이었다"

면서 "해야할 일도 많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 더 이상 사건을 떠들고 확대시키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수배자가 나타났다는 잘못된 첩보를 믿고 최창희 씨 집에 난입, 최 씨 등을 폭행하고 경찰서까지 연행한 적이 있었다<9월18일자 참조>.

반면, 이 씨와 같이 불법연행·폭행을 당한 피해자들 가운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 94년 연세대에서 학내로 진입한 경찰들에 의해 폭행 또는 연행을 당했던 조남문 씨 등 1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올 8월 서울지법 민사16부는 국가에게 1백만 원 또는 2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후포구, 산재까지 발생 "안전장치 제거 작업 강행"

경기도 안산의 한국후포구 노동조합(위원장 윤동만)은 "23일 압입작업을 하

던 김기성 씨가 기계에 손을 눌러 수술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얼마전부터 회사가 압입기와 슷의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작업을 시켰다"며 산재발생의 책임을 물어 권순목 사장 등 4명을 고소하기로 했다.

또 후포구 노조는 23일 열린 정신대 할머니들의 일본대사관 앞 항의집회에 참석해, 강제연행의 성폭행과 노조탄압 사례를 발표하고,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회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3억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당정, 집회 강제해산 법제화 기도

### 국민 기본권 억압 우려

24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집시법에 '강제해산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연

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 비난하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실제로 경찰은 아무런 이유없이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해 왔다"며 "강제해산명령권이 법제화된다면 공권력 남용행위는 극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사제 구타사건 강력 항의 천주교 전국사제단

24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전국사제단)은 지난 19일 영광핵발전소 준·기공식에 항의하던 이영선(영광성당 광주대교구 소속) 신부에 대해 영광경찰서측이 행한 강제연행 등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사제단은 "공권력의 만행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이를 방조하는 정부의 폭력적이고 안이한 태도를 규탄"했다. 또, "내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의 사과, 영광경찰서의 관련 경찰들에 대한 문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항의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를!  
지료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료 창구에서 아래의 지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료번호: 7618848

안기부법 개악 저지와 이양호 전국방장관 비리 엄정 수사촉구 국회항의 집회  
· 때: 10월 25일(금) 오후1-3시  
· 곳: 국회 앞 장기신용은행  
·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921-4090)

## <자료-전문> ILO 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

(조약 전문 생략)  
제1조 이 조약에서  
(a) "가내노동"이라 함은 다음의 조건에서 가내노동자로 불리우는 자에 의해 수행되는 노동을 말한다.  
(i)사용자의 작업장이 아닌 자신의 주거 또는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ii)보수를 받기 위해  
(iii)사용되는 설비, 원료, 기타 투입물을 누가 제공하는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특정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산출한다.  
다만 국내법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독립된 노동자로 간주되는데 필요한 정도의 자율성 및 경제적 독립성을 갖지 않은 경우에는 한한다.

(b) 종업원의 지위를 가진 자가 단지 때때로 종업원로서의 작업을 통상의 작업장이 아닌 주거에서 수행한다고 해서 이 조약에서 의미하는 가내노동자로 볼 수는 없다.

(c) "사용자"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직접적으로 또는 중개인(중개인이 국내법상 인정되는가에 관계없이)을 통하여 자신이 영업활동에 쫓아 가내작업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이 조약은 제1조에서 말하는 가내노동을 수행하는 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이 조약을 비준하는 각 가맹국은 최상급 노동대표단체와의 협의 및 가내노동자에 관한 단체 및 가내노동자의 사용자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가내노동자의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내노동에 관한 자국의 정책을 시행하고 이 정책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1. 가내노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은 가내노동의 특성을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 기업내에서 수행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노동에 적용되는 조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가내노동자와 다른 임금소득자간의 동등처우를 증진해야 한다.  
2. 동등한 처우는 특히 다음과 관련하여 증진해야 한다.  
(a) 가내노동자들 스스로 단체를 설립하거나 선택한 단체에 가입하고 그러한 단체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  
(b)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로부터의 보호  
(c)산업 안전·보건에 있어서의 보호  
(d)보수 (e)법정사회보장도에 의한 보호 (f)직업훈련을 받을 기회 (g)고용 또는 근로가 허용되는 처저연령 (h)모성보호

제5조 가내노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은 법령, 단체협약, 중재제정, 또는 그밖에 국내관행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제6조 노동통계에 최대한 가내노동이 포함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국내법령은 가내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내노동에 적용되어야 하며, 안전·보건을 이유로 일정한 형태의 작업과 일정한 재료의 사용이 가내노동에서 금지되는 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 가내노동에서 중개인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사용자 및 중개인 각각의 책임을 국내의 관행에 좇아 법령 또는 법원의 판결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 1. 국내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감독제도가 가내노동에 적용되는 법령의 준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이들 법령의 위반에 대

하여 필요하다면 벌칙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이 조약은 다른 국제노동조약에 의해 가내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다

유리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료집 『가내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에서>  
ILO 가내노동 권고 생략

## ---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 ---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③

<숨겨진 이미지(Latent Image)>  
Pablo Perelman / 칠레 / 1987 / 극영화 / 92분  
군부의 반독재 대중시위에 관한 실제 사진과 필름으로 시작하여 실종자 가족의 사진과 필름을 모아 만든 이 영화는, 극영화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전적 다큐멘터리와도 같은 느낌을 준다. 10년전 실종된 MIR(Movimiento de la Izquierda Revolucionaria : 혁명적 좌익운동, 인민연합의 좌익 중 가장 중요한 조직)의 영웅인 동생의 생사여부를 추적하는 사진작가인 페드로를 중심으로 피노체트 집권 하의 1985년의 칠레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미래는 현재라는 거울을 통해서 과거를 비추며, 따라서 미래는 과거이고 우리는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관료의 죽음>  
Tomas Gutierrez/쿠바/1996/극/ 흑백/87분  
1966년에 제작된 이 영화는 사회주의 국가를 배경으로 관료주의의 병폐를 회고적이고도 풍자적인 기법을 동원하여 묘사하고 있다.  
이 영화는 사회주의 국가가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흔히 부딪힐 수 있는 관료주의라는 비현실적인 조직이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현실의 괴로움을 설득력있게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왜 노래하지 않는가?(俄們爲什麼不歌唱?)>  
관 사오령/대만/1995/기록/천연색/92분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으로 일본에 대항하던 중국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장개석의 국민당정부는 대만으로 패주하게 되는데 대만에서 국민당 정권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1950년대 반공을 명분으로 해서 소위 白色恐怖風暴(백색공포풍폭)이라는 정치적인 테러를 자행하게 된다. 무자비한 테러와 학살로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당했고 8천여 명이 투옥당하는 끔찍한 인권유린의 상황을 당시의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그 진상을 공개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했던 2·28 사건의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증언을 듣는 이 영화는 화려한 영화적 수사를 배제하고 담담한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 관 사오령이 만든 이 영화는 우리에게 대만의 역사적 비극을 다룬 또 하나의 영화 <비정성시>를 떠올리게 만든다. <비정성시>가 당시의 사건을 극화해서 보여준 것이라면 이 영화는 역사속에 실존하는 피해자들이 증언하는 진실인 것이다.

D-7일 전 제1회 인권영화제 일시 : 11월 2-8일 장소 : 이화여대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매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안산 후꼬꾸, 노조 고문변호사 출입금지 화장실 다녀왔다는 이유로 징계회부

안산의 한국 후꼬꾸(사장 권순목) 회사가 사태 진상을 확인하려는 고문변호사의 회사 출입을 저지하는가 하면, 노조 간부 등 16명도 징계하기로 하는 등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후꼬꾸 노동조합 고문변호사인 김철준 변호사는 24일 오후 4시 이 회사 우상철 전무와 면담을 약속하고 회사를 찾았으나, 우 전무가 자리를 피해 만나지 못했다. 더구나, 회사 측은 "법정에서 만나자"는 입장만을 정문에서 전달한 채 김 변호사가 회사 출입을 저지했다.

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 2명 석방 촉구 한편 66개 노조와 13개 노동단체가 함께 하는 「한국후꼬꾸 경기남부지역 대책위」는 오늘 오후 2시 안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일본후꼬꾸 사장 가마모토 씨를 규탄하고 구속된 이승환(노조 편집부장) 씨 등 2명의 석방을 촉구하기로 했다.

대공수사권 부활 비판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 전국연합

"법정에서 만나자"

회사는 25일 오송회 노조 부위원장 등 16명이 교육 시간에 허락없이 화장실에 다녀왔으며, 이들에 대해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31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 지난 14일부터 교육을 하겠다고 노조간부와 열성조합원 40여 명을 건물 3층에 모아 둔 채, 이들에게 전혀 작업을 시키지 않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 소속 회원 50여 명은 25일 오후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안기부법 개악저지와 이양호 전국방장관 비리엄정 수사 촉구 항의 집회'를 가졌다. 그 뒤 신한국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집회를 갖는 한편, 항의서한을 신한국당측에 전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를!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공수사권을 부활하고자하는 것은 보수표의 집결을 통한 정권 재창출과 정치공작의 부활을 위한 것이며, 개야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고 우려했다.

또한 이양우 전국방장관의 비리 사건은 철저한 비리수사를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과 엄정한 처벌,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96년 8월5일부터 23일까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49차 회의 중 발표한 정부의 <제8차 정기보고서> 주요내용
- 헌법평등조항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예시이고, 인종은 당연히 차별금지 근거로 해석됨
- 인종차별을 금하는 개별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대우), 제11조(처벌조항),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임
- 인종차별행위를 다룬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
- 인종차별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는 경찰·검찰공무원교육, 인권전담검사제도, 경찰의 인권보호관 지정, 법무부의 인권협약자료 발간·인권세미나 개최·인권기념일 행사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충상담실 설치 등임
- 인종차별행위의 처벌근거가 될 국내법 제정의무(협약 제4조) 향후 이행하겠음
- 적법하게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한 보호를 받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주로 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보장, 산재보장 등 최소한의 보호는 받고 있음
- 1991년부터 시행중인 외국인산업연수제도에는 구타금지, 작업강요금지, 최저임금보장 등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정부는 연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고용허가제' 도입도 신중 검토중임
- 한미혼혈아동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한 태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국제사회로 통합이 진행되면서 정부의 생활비 지급, 교육기회부여 등으로 그들에 대한 이해도가 개선되고 있음
- 중국인 거주자의 한국국적 취득에 차별대우는 없음
- 협약 제14조(위원회의 진정서 심의권능인정)의 선언을 위한 국내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겠음.

"방어 위해 들을 던졌을 뿐" 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치사 혐의 공판

연세대 사태 당시 김종희 일경의 사망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10명의 첫 공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합의23부(부장판사 전봉진) 심리로 열렸다.

검찰(담당검사 박청수 등)은 '학생들이 김 일경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는가'의 여부를 입증하려는 듯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어느 한 검사는 "들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며 피고인을 추궁해 방청석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이른 새벽 느닷없이 침입하는 경찰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들을 던졌을 뿐"이라며 과실 여부를 부인했다.

또한 학생들은 "우리는 건물을 점거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 밀려 대피한 것일 뿐이며, 조직적으로 방화나 투석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또 일부가 이야기하듯 이탈자를 막기 위해 정신교육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총련 공동변호인단의 조광희 변호사는 "검찰은 학생들이 투석행위가 죽음의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서도 이를 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투석행위는 경찰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저항일 따름"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1월8일 오전 10시.

교육기본법등 제·개정 26일 국회청원 교육개혁연대회의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의, 공동대표 권영길 등)는 학생과 교사에게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 제정 등 교육관계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국회 청원을 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9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연대회의는 올 정기국회에 교육부가 제출한 교육관계법 제·개정안이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청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만 5세 아동에게 1년간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보호 조항 신설(교육기본법) △ 사립학교내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초중등교육법) △ 주된 직선 또는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교육위원 선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제1회 인권영화제 상영시간표

(주상영관-이화여대 법정대 강당, 3일[일]은 학관 110호, 414호에서 상영, 4일[월]은 가정관 318호도 병용)

Table with 4 columns: 2일(토), 3일(일)-학관-, 4일(월) -가정관 318도 사용-, 5일(화). Rows include movie titles and times for days 2 through 8.

당신의 작은 정성이 우리의 영광을 키워 나갑니다. 제1회 인권영화제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계좌: 계월110-20-342272 국민822-21-0276-824 농협033-02-119388 (예금주 서준식) 연락처: 704-7461/715-9185

**D-4일 전**  
**제1회 인권영화제**  
 일시 : 11월 2-8일  
 장소 : 이화여대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검·경 인권교육 실상 공개 논의 요망

### 일선 교육 9백회에도 인권유린 줄지 않아

인권유린의 직접 가해자로서 국민의 두려움과 질타의 대상이었던 검찰, 경찰, 교도관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시대적 과제라고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해 동안 수 백 차례씩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는 정부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유린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95년 한해 동안 검·경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총 9백여 회 실시됐으며, 대상 인원은 2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민정부 첫 해인 93년에 총 5백16건이던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은 94년에 4백15건으로 줄어들더니, 95년에는 4백43건, 96년 상반기엔 2백62건을 기록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 실시된다는 인권교육이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 경원대생 명동성당 농성 돌입 학원자치·추모비 사건 처벌 요구

학원민주화 투쟁과정에서 수배된 경원대생 3명이 28일부터 무기한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했다. 송광영 추모비 탈취 사건으로 학교당국의 부도덕성이 드러난 데 이어, 수배된 학생회 간부들이 농성에 돌입함에 따라 경원대 문제는 또 다시 학원가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학원의 민주적 운영을 둘러싸고 발생한 경원대 사태는 지난해 12월 장현구(당시 27세, 전기공학과) 씨의 죽음과 올 4월 진철원(도시계획 2년) 씨의 죽음 등 잇따른 불행의 경우에서도 해결을 미뤄왔다. 특히 지난 8월 연세대 사태를 계기로 학교측은 그나마 유지해오던 협상태이블마저 걷어차고, 공권력은 학생들의 농

성을 해산시켰다. 총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 14명은 학교측의 고소·고발에 이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생활에 들어갔으며, 그중 이병민(총학생회 투쟁국장) 씨 등 4명이 구속됐다. 이날 명동성당 농성에 들어간 민태호(92학번, 제적) 씨는 "경원대 내에서 인간됨의 가치를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 이번 투쟁의 목표"라며, "현구 선배, 철원이 등 목숨을 버린 사람들의 뜻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위영석 총학생회장은 "구속을 각오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김원섭 총장 퇴진 △추모비 탈취 관련자 전원 처벌 △학원자치권 인정 △징계·구속·수배 철회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내용의 인권교육이 진행되는가 하는 점은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98년부터 사법연수원에 국제인권법 과목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현재 검찰직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법부연수원에 전문적인 인권교육용 교재 한 권도 제대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토대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이 어느 정도나 증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고 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던 국제엠네스티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 씨는 한국 방문 결과, "안기부 등 수사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과 훈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평한 바 있다.

### 다시보는 국정감사-환경노동위

노사분규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구속 및 수배자 현황 (91-96년 단위:명)

구분	계	91	92	93	94	95	96
구속자(수감중)	182(11)	34	13	17	70	30	18(11)
수배자(수배중)	31(3)	3	4	8	7	9(3)	-

- 노사분규와 관련해 노동법, 노동법+형법을 위반한 자임(93년 이전은 순수 노동관계법)
- 업무방해, 폭행 등 형법만을 위반한 자는 제외

노동쟁의의 관련한 직장폐쇄 현황 (93-96.8 단위:건)

구분	계	93	94	95	96
대상 (분규업체)	428	144	121	88	75
직장폐쇄	89 (20.8%)	20 (13.9%)	22 (18.2%)	20 (22.7%)	27 (36%)

## 철거강파 흥기에 맞아 주민 종태

### 23일 부산 송당마을 강제철거 중

지난 23일 부산 송당마을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주민 변정순(43) 씨가 철거용역이 휘두른 흥기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다.

23일 저녁 골리앗 철탐을 철거하기 위해 투입된 용역들은 주민들에게 송곳을 박아 넣은 각목을 휘둘렀으며, 이 과정에서 변 씨가 오른쪽 복숭아뼈 부위를 각목에 맞아 심한 상처를 입었다. 변 씨는 그 후 물대포에서 쏘아대는 최루액을 상처부위에 계속 맞은데다 15시간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해 상처가 파상풍으로 발전했으며, 인근 조성호 정형외과에 입원했으나 위독한 상황이라고 한다.

해운대 재개발지역인 송당마을은 지난 23일 새벽부터 30시간에 걸쳐 철거전문용역 1천여 명과 전경 백골단 8백여 명에 의해 강제철거됐다. 그 결과 23명의 전체 주민 가운데 최진학(58) 씨 등 주민 12명과 학생 4명이 구속되고, 최명(70) 씨 등 4명이 불구속 처리됐다.

전국철거민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가수용시설과 영구임대주택 등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며 철거를 자행한 김영삼 정부에 대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지 전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노 선교실무자 교육 KNCC, 11월 한달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위원장 안광수 목사)는 "외국인노동자, 우리의 이웃입니다"는 주제로 외국인노동자 선교실무자를 위한 훈련모임을 11월 매주 월요일마다 4회에 걸쳐 오후 2-6시까지 서울 복음교회에서 갖는다. 주최측은 "기독교계의 외국인노동자 선교활동에 대한 그간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이 외국인노동자 선교를 시작하려는 교회와 단체들을 위해 이번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의는 △한국 이주노동자 문제의 실태(김해성 목사) △이주노동자 선교상담 유형과 사례, 해결방안(양해우 국장) △세계화와 이주노동자 문제(남구현 한신대 교수)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과 외국인노동자운동(박석운 소장) △상담소 개설을 위한 준비 및 안내(김해성 목사) 등이다.

###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세요

제1회 인권영화제 개막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덕분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은 1구좌 1만원 이상, 단체는 1구좌 5만원 이상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원계좌: 제일 110-20-342272 국민 822-21-0276-824 농협 033-02-119388 (예금주 서준식)  
 연락처: 704-7461/715-9185

## 주/간/인/권/호/름

### (96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21일> (월)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며 학생들로부터 사퇴요구 받은 전북대 농과대 한 아무개(54) 교수 사직서 제출

<22일> (화)  
 <한겨레> 보도, 대다수 대기업들이 각 대학 및 학과를 수능성적에 따라 등급을 매겨 출신학생들의 입사에 반영하고 있는 것 밝혀져/경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안' 입법발의/대검 공안부 전국 공안부장회의, 노피중인 한총련 핵심인물별로 주입검사 지정해 조기검거에 나서기로/한국장애인개발협회, 재활정보센터 개소식 및 장애인 재활종합정보서비스인 '곰두리' 시연회 가져/경찰의 중립화·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문건이 전국 경찰관서에 잇따라 날아들어 경찰이 진상조사 착수

<23일> (수)  
 서울고법 특별재3부 이기남씨가 제기한 '노령수당 지급 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 최종 결심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김구 선생 안살림 안두희(79) 씨, 자택에서 버스 운전사인 박기서(46) 씨에 의해 피살/서울시교육청 발표, 올해 들어 8월까지 비행학생으로 퇴학등 징계받은 학생은 전체학생의 0.8%에 해당하는 8천6백 명/법무부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형사소송규칙에 신설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고려대 총학생회, 학교안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남학생에게 공개사과문과 여성단체 등에서 자원봉사 6개월의 처분내려

<24일> (목)  
 정부와 신한국당, 집회·시위 해산명령권 등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 마련해 국회 제출 계획/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백인 경찰관이 신호대기중인 흑인운전자를 총격으로 숨지게 해, 이에 분노한 인근 흑인밀집거주지역 주민 수백 명 폭동 일으켜/독일 철강 금속노동자들, 병가 때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사용자측에 항의시위

<25일> (금)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용출판사, 국보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노신(24) 씨가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받던중 "경찰이 곤봉등으로 동·머리·종아리 등을 수없이 때렸다"며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받아들여/연세대 시위 당시 김종희 상경 치사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학생들 전경치사 혐의 부인/부산경찰청, 해운대 송당마을 재개발에 반대해 화염병 시위를 벌인 혐의로 세입자 최명(70) 씨 등 주민과 대학생 24명 구속영장/한국, OECD 가입초청 협정에 정식 서명/전국연합 '안기부법 개악반대와 이양호 전 국방장관 엄벌 촉구' 집회/필리핀,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호세 라모스 오르타 씨 입국 불허

<26일> (토)  
 황석영(54)씨 석방 촉구하기 위한 문학계 열려/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교육관계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국회청원하기로

<27일> (일)  
 <산케이신문> 보도, 일본 도쿄도 경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줘야한다는 판단하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요청예정

**D-3일 전**  
**제1회 인권영화제**  
 일시 : 11월 2-8일  
 장소 : 이화여대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 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고문의 실상이 최초로 국제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다.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95년 12월 우리 정부가 제출한 '고문 관련 최초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10개 국내 인권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상임대표 김승훈 신부)가 작성한 '반박보고서'도 제출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판단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 95년 고문방지조약 가입 이면에 열리는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고문방지조약)에 따른 것이다. 고문방지조약은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

권선언 제5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84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전 세계 93개국이 가입해 있다. 한국 정부는 95년 1월 정식으로 가입했으며, 그해 2월 8일부터 조약이 정식 발효되었고,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에 따라 95년 12월 최초보고서를 작성·제출했다. 그러나, 인권협은 "정부보고서가 구체적인 고문 실상을 담고 일반 범조항만을 서술하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준비했다. 또, 제네바에 대표단을 파견해 이를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문, 제도적으로 방지 인권협이 '반박보고서'를 통해 지적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점으로 요약된다. 첫째,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고문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악법이 남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95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연행된 박충렬(당시 전국연합 사무차장) 씨는 수사과정에서 잠안제우기,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으나, 결국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석방된 바 있다. 제네바에 대한변협 대표로 참석하게 되는 차지훈 변호사는 "안보논리에 의해 기본적 인권이 유보·무시되고 있다"며 "정부는 고문을 사실상 교사·방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 법·제도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고문범죄자 처벌 중요

### 다시보는 국정감사 환경노동위

· 선진국, 경제수준 비슷한 나라와 산재(사망) 92년 현황

국가명	한국	일본	독일	미국	싱가폴	영국	프랑스
재해율(%)	1.52	0.39	5.42	3.27	0.87	0.67	5.38
사망율	3.44	0.46	0.96	0.31	1.51	0.15	0.74

· 건설사업장 산재발생자수, 사망자수(93.1-96.6)  
 (단위:명, 재해자수에 사망자수 포함됨)

구분	93	94	95	96.6
재해자수	26,129	24,271	22,542	8,806
사망자수	636	743	715	323

· 4인 이하 영세중소사업장 산재발생현황(93-96년6월)

구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93	17,080	51,651	3,166	72	6.13
94	18,558	54,995	2,998	63	5.45
95	21,959	63,630	2,191	47	3.44
96.6	23,973	69,460	905	14	1.30

### 공판안내

- 11월1일(금)- 한총련사건 공판  
 합의23부 오전10시 311호, 선고  
 · 신승용(화염병 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 강현용(특수공무집행방해등)  
 · 김제중, 조지훈, 장광수, 조민규, 최정기(집시법 위반등)  
 · 박정호외 1, 이국환외 2(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 박종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 배종훈(진조물침입등)

-이상 서울지법 형사부

## 넥타이부대, 노동법 개악 저지나서 사무노련 명동성당 결의대회

29일 낮 점심식사 시간의 명동성당 앞길에선 넥타이 부대의 시위행렬이 길가던 시민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전국사무노동조합연맹(사무노련, 위원장 김국진·허장) 소속 노동자들이 시위대 3백여 명은 "노동법 개악 저지"와 "고용조정제 폐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명동거리를 따라 외환은행 본점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들 사무직 노동자들은 최근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중)가 노동법 개정안을 내놓고, 그 피해자들에게 치료와 보상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11월 11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13일 하룻동안 한국정부가 제출한 고문보고서와 민간의 반박보고서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다. 이 밖에 국제엠네스티, 휴먼라이트워치, 에스오에스토퍼 등 국제 인권단체들의 한국보고서 등도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다쳐 강제연행을 시도하다 실패한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오전 9시경 성남중부경찰서 소속 형사 2명은 명동성당을 찾아가 농성중인 경원대생 3명에 대한 연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천막 안에 있던 민태호(24) 씨에게 수갑을 채우기도 했으나 주위에 있던 전혜투 노동자들과 천주교인권위측의 저지로 연행에 실패했다.

천주교인권위측의 중재로 학생들과 면담을 가진 경찰은 "자진출두를 요청하려 찾아 왔다"고 밝힌 뒤 "이후에는 반드시 연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제10회 인권상 후보추천 KNCC 정의와 인권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는 오는 11월15일까지 제10회 인권상 후보추천을 받는다.

추천대상은 국민의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중 1명을 선정하게 된다.

시상식은 인권기념일인 12월10일 있을 예정이다. 후보추천 접수 및 문의는 764-0203, 744-3717.

## 경원대생 연행 시도 천주교인권위 중재로 실패

명동성당 농성장에 경찰

##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불!

지로용지를 못 받으신 독자께서도 전국 어느 은행이든지 지로 창구에서 아래의 지로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18848

##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④

### <플로 콘템플라시온 이야기>

Joel Lamangan/필리핀/95/극/120분  
 플로 콘템플라시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싱가포르에서 가정부로 취업한 필리핀 여성이다. 그녀는 동료 가정부와 주인집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1995년 6월, 5년간의 복역 끝에 사형을 당했다. 그녀의 무죄를 믿는 필리핀의 많은 인권단체들이 싱가포르 정부에 그녀의 사면을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 플로 콘템플라시온의 체포와 조사과정에서 끔찍한 고문이 가해졌고 그녀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언들은 무시되는 불공정한 재판과정을 통해 싱가포르 정부는 한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사형에 처한 것이다.

이 영화는 오랜 독재와 장기적인 경제적 궁핍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동남아시아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것은 비단 필리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아시아 각국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 영화는 아시아의 모든 여성이 겪는 보편적인 억압의 보고서이다.  
 상영: 11월2일 오후 8:10-10:10 이대 법정대 강당

### <진실을 말하고 뛰어라>-Tell the Truth and Run George Seldes and the American Press

Rick Goldsmith/미국/96/기록/천연색/110분  
 조지 셀드는 104세의 나이로 타계한 미국의 양심적인 언론인으로 그의 일생은 권력과 자본으로 부터 독립되어 진실을 밝힌다는 언론의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기 위해 살아온 투쟁의 역사로 인식되고 있다. 검열과 수많은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논조를 끝까지 지켜나갔던 이 언론인은 그의 생 자체가 20세기 초반부터 오늘날 까지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릭 골드스미스의 다큐멘터리는 이 위대한 언론인의 행적과 일생을 여러 주제를 등장시켜 그에 대한 조지 셀드의 입장과 후배 언론인, 언론 운동가들의 평가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가 가지는 최대의 힘은 98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비판정신과 재치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노 언론인의 믿음과 진실이다.  
 상영: 11월3일 낮1:30-3:20 이대 학관 110호

### <평화의 가장자리에서>-On the Edge of Peace

Ilan Ziv/이스라엘·팔레스타인 공동/95/기록/천연색/103분  
 영화는 미국의 백악관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아라파트 의장이 가자지구에 도착하는 시기까지 약 7개월간 이스라엘과 가자지역에 떠도는 불안한 평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세 명의 이스라엘 사람과 세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 그들은 각각의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군상들이다. 이 영화에서는 누구도 설교조로 중동지역에 평화가 와야만 한다고 당위론을 들먹이며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담담하게 누구도 이 분쟁의 원인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두 민족 모두 이 땅에 살 수 있는 만큼의 애정과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온근히 보여주어까지 한다. 피흘려 일군 농장이나 정착촌에 대해 자랑스레 언급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잃어버린 자신의 고향을 잊지 못하고 자신의 뿌리를 갈망하고 있는 난민 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 모두에게 이 땅은 애정의 대상이다.  
 상영: 11월3일 낮 1:30-3:15 이대 학관 414호

D-2일

제1회 인권영화제

일시 : 11월 2-8일

장소: 이화여대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김수경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 12년전 군의문사, 자살 아니다

### 국민고충처리위, 허원근씨 사건 재수사 지시

84년 군복무 도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허원근(당시 23세) 씨의 사인이 12년만에 밝혀질 것인가? 청와대 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최정백)는 28일 허영춘(허원근 씨 아버지) 유가협 의문사지회에게 보낸 회신을 통해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살로 단정한 허원근의 사인에는 의문이 많다"며 "사인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국방부의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충처리위원회는 회신에서 △허원근 씨의 자살동기가 무엇이었는가 △본부중대장 등 중대본부 관계자들이 사고시간, 경위 등을 조작하려고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가 △M16소총의 발사가 의하여 좌우측 흉부사관통된 충격상태에서 또 다시 스스로 소지중인 소총으로 두부에 격발하는 것이 가능한가 등의 의문사항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 자살로 단정하는 것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밝혔다.

부산수산대 3년에 재학중 입대한 허 씨는 84년 4월 2일 휴가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허씨의 시체는 좌우측 가슴과 두부에 총을 맞은 끔찍한 모습이었으며, 당시 총성 청취 시각, 탄창 실탄 수 등을 중대장이 조작하려 했

음이 소속 헌병대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사건 종결된 바 있다.

아버지 허영춘 씨는 88년 유가협 회원들과 함께 1백 35일간 기독교 회관에서 농성을 벌였고, 5공정문회, 국회 탄원 등을 통해 수차례를 걸쳐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허영춘 씨는 지난해 2월 서초동 법원에 민원을 접수하려다 거부당하자, 곧 이어 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 이같은 답신을 얻어냈다. 허씨의 가족들은 사인의 정확한 규명없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군당국으로부터 사체 인도를 거부해왔으며, 사건 발생 12년 뒤인 지금까지 출기차계 문제를 제기해 왔다.

허영춘 씨는 "광주항쟁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데모에 나섰던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다"며 "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씨는 "앞으로 모든 의문사 사건을 고충처리위원회 탄원 형식으로 제기해 볼 생각"이라 밝혔다.

현재까지 5공 이후 정권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희생자는 38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군대 내에서 희생당한 사람만 20명인 것으로 유가

협측은 전한다.

### 공산주의자연합 결성 혐의 경찰, 직장인 등 8명 구속

경찰청은 29일 '공산주의자연합'이라는 조직을 결성·가입했다는 혐의로 김선태(32·사업) 씨를 긴급구속하고 김 씨 외에 8명을 홍제동 대공본실로 연행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강령과 규약, <차이와 연대>라는 기관지 등을 문제삼고 있으며, 「단기동맹」 사건과의 연관 부분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의해 불법연행되었다가 24시간만에 풀려난 박상철(33) 씨는 "연행될 당시 조직표가 이미 그려져 있었으며, 김선태 씨가 강령과 규약의 작성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선태 씨를 '공산주의자연합'의 총책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박상철 씨의 전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 추모비 학교측 또 부인 경원대 학생과장, 소환 불응

송광영 추모비 사건이 발생 38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30일 김원섭 경원대 총장은 학교측의 범행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또한 경찰로부터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받고 있는 최봉성 학생과장은 계속해서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총장은 박정기 유가협 회장과 가진 공식 면담 자리에서 "경찰 발표가 있을 때까지 학교측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며 오히려 유가협측에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정기 회장은 "학교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도난 신고를 하라"고 제안했고,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학생과장이 출두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외에 별다른 단변을 하지 않고 있다.

## 인권영화제 도우미 모집

제1회 인권영화제는 자원 봉사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집니다. 단 하루라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께는 영화 해설서와 뱃지를 증정합니다.  
 연락처: 제1회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 704-7461)

## <인권하루소식> 96년 10월분 총목차(735-756호)

호	월일	면	기사 제목
735	10/1	1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방양군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송광영 추모비 찾기에 온힘, 유가협 7일째 천막농성/공판안내
		2	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 씨 인터뷰, "한국의 인권상황은 충분히 심각하다"/주간인권호름
736	10/2	1	인터넷에서 벌이는 검열반대운동,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서명 작업/대학생 인권운동 출발, 인권연대 창립총회/민주노총 기자회견, '노개워 불참' 등 입장 표명
		2	국제무대에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정부, 교사단결권 보장 허위 보고/한국여성의 전화, 성교육 대안 찾기 모임/여성민우회 신문기사 모니터, '성차별의식 여전'/평등의 전화 개설 1년 상담사례집 발간/참여연대, 4기 사회복지학교
737	10/4	1	진관스님 간첩 혐의 부인-인권운동가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돼야/사상·표현의 자유, 그 참된 시작, 박노해 문화제 열려
		2	세계의 인권⑦-땅끝에 선 선주민, 땅의 일부분인 사람들
738	10/5	1	두산기계 50일째 직장폐쇄, 노동유연화 정책 관철 위한 노조와해 공작/인권운동가 또 구속,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경원 씨/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장 재선임
		2	<자료요약>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위안부문제시민연대, "국민의 힘으로 해결을"/주한미군범죄진절을 위한 운동본부, 외무부 앞 항의시위
739	10/8	1	노진추 회원 23명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대거연행, 전화통까지 빼어가/AI 한국방문 결과 논평, "경찰 인권교육 절실"/고 김말룡 의원 장례
		2	진관스님 불교대책위 안기부 항의 방문, "해외포교 차원의 상식적 행동"/12개 시민단체, 5·18항소심 재판부에 요구, "역사적 요청에 따르길"/성남 외국인노동자의집 이경원 씨 불구속/주간인권호름
740	10/9	1	간첩 혐의 간수 교수 1차 공판, "지명받고 남파된 것 아니다"/공안비상벨을 울려라, 노진추 24명 연행, 3명 수배/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청원, 박형규 목사의 5만6천5백11명
		2	<자료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741	10/10	1	전자주민카드, 프라이버시 침해·정부통제 강화 우려, 저지운동 뜬다/사무노련 중앙위 결의,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영상악법 및 검열 철폐 전자서명운동 전개/행사와 동정
		2	<자료요약> 영화법 위헌제정 결정문 초고
742	10/11	1	국회, 경찰의 여학생 성추행 국정조사해야-진상조사 거부 여당의원들 질타 한 목소리
		2	<독자투고> 해맑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길-박정석(전 전국민민연합 간사)/민주노총, 11월 총력투쟁 결의-노동악법 철폐 대중투쟁으로!
743	10/12	1	영화 속에서 배우는 '인간의 존엄성'-제1회 인권영화제 11월 2~8일 개막
		2	경찰, 만장 뺏고 영정 깨고-고 이기순 씨 용산미군기지 앞 영결식/진관스님 불구속 수사 촉구, 종교인 안기부 항의방문/참여연대, 시민입법 캠페인/인권간행물
744	10/15	1	'공평한 5·18 재판을 위해'-민변 "피의자진술권 반드시 필요"/피해자 진술인 입증 내용/"불법체류자엔 인권없다"-법무부 신변보장 약속파기
		2	경보전기 유명노조 5년간 지속-국감 폭로에도 회사 폭언등 여전/한국성폭력상담소, 제12기 나눔이 모집/주간인권호름
745	10/16	1	노벨평화상 계기로 동티모르에 관심-인권협 등, 정부에 인권외교 정책 수립촉구/성추행 항의에 폭력으로 응답-경찰, 여연 캠페인 상식밖 진압
		2	'민주노총 정리하고 수용' 기사 오보-노개워 수정안에 민주노총 불참 재확인/민변, 검열폐지 지지 성명, '영화법 위헌 당연'/차별에서 평등으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움직임/공판안내

<인권하루소식> 96년 10월분 총목차(735-756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746	10/17	1	승덕공고생 노조활동 이유로 강제 퇴사-고교실습생 직업선택권 보장 등 대책마련 시급/한총련 공관 방청기-검찰, 박수를 찬양·고무로 둔갑시키다
		2	"도대체 뭘 말할 수 있나"-교내 낙서판 게재에 국보법 적용/동국대 신문 <소나기>코너 전문 게재/근조! 명동성당-신자들, 전해투 농성장 강제철거/OECD, 한국노동법개정 감시기구 설치
747	10/18	1	국보법 구속 남편과 이혼해야 교사 임용-경기도 교육청, 차정원 씨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경찰, 추모비 사건 수사의지 있나?-사건발생 26일, 항의농성 24일째/민운탄대책위 성명, 노진추 탄압중 단추구/피해자진술권 허용 촉구, 민변 등 재항고장 제출
		2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③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간사 정유진 씨/행사와 동정
748	10/19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온 국민 동참을-시민연대 발족, 과거청산 촉구·기금마련 계획/고려대, 문화계 행사 <희망> 불허
		2	울지병원 해고자 단식 18일째 실신-병원측, 복직조건으로 반성문 요구/인권영화제 작품소개①<도둑맞은 아이들>/인권간행물
749	10/22	1	안하무인 공권력, 고개 숙인 대화-청년 문화행사 번번이 원천봉쇄/다시보는 국정감사-수사기관의 인권침해
		2	"21세기형 통제 반대", 전자주민카드 철회 운동/노골화되는 경찰폭력-경찰, 영광분당 신부 구타연행/한총련 사건 공판안내/주간인권호름
750	10/23	1	'국민인권기구' 설치 연구검토중-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계획없다"/국민인권기구란?/학교가 추모비 탈취, 경찰 공식발표 예정/다시보는 국정감사-공안관련사범 구속자 현황
		2	"철거에 앞서 주거권 보장하라" 방배4동 철거, 주민 8개월째 대항/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가두서명/인권영화제 작품소개②-<망각에 반대하며> <불굴> <유령을 부르며>
751	10/24	1	한국후교구, 노조끼기 혈안-노조방침, "때리면 맞겠다"/다시보는 국정감사-시위 관련 구속자 현황
		2	노인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노령수당 65세 이상 지급 판결/6월항쟁 10주년 기념공연 <96 당당하게>/지하철노조협의회, 유덕상 위원장 석방 촉구/한권의 책-「가내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행사와 동정
752	10/25	1	길가던 대학생 강제연행, 4시간 감금-광주북부경찰서, 한총련 수배자로 오인/한국후교구, 안전장치 제거하고 작업 강행, 산재 발생/양정, 집회강제해산 법제화 기도-국민 기본권 억압 우려/천주교 전국사제단, 사제 구타사건 강력 항의
		2	<자료 전문> ILO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인권영화제 작품소개③-<숨겨진 이미지> <어느 관료의 죽음> <우리는 왜 노래하지 않는가>
753	10/26	1	안산 후교구, 노조 고문변호사 출입금지, 회장실 다녀왔다는 이유로 징계회부/전국연합, 대공수사권 부활 비판,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다시보는 국정감사-법무부
		2	"방어 위해 돌을 던졌을 뿐", 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공판/교육개혁연대회의, 교육기본법 등 제·개정 국회청원/제1회 인권영화제 상영시간표
754	10/29	1	검·경 인권교육 실상 공개 논의 요망, 일선 교육 9백회에도 인권유린 줄지 않아/경원대생 명동성당 농성 돌입, 학원자치·추모비 사건 처벌 요구/다시보는 국정감사-환경노동위
		2	23일 부산 송당마을 강제철거 과정에서 철거장폐 휴기에 맞아 주민 중태/KNCC, 11월 한달간 의 국민노동자 선교실무자 교육/주간인권호름
755	10/30	1	국내 고문 실상, 국제사회에서 논의-11월 13일 제네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열려/다시보는 국정감사-환경노동위/한총련 사건 공판안내
		2	네티이부대, 노동법 개악 저지 나서-사무노련 명동성당 결의대회/경원대생 연행 시도, 천주교인권위 중재로 실패/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제10회 인권상 후보 추천/인권영화제 작품소개④-<플로 콘텐플라시온 이야기> <진실을 말하고 뛰어라> <평화의 가장자리에서>
756	10/31	1	12년전 군의문사, 자살 아니다-국민고충처리위, 허원근 씨 사건 재수사 지시/공산주의자연합 결성 협의, 경찰 직장인 등 8명 구속/추모비 학교측 또 부인-경원대 학생과장, 소환 불응
		2·3	인권하루소식 10월분 총목차(735-756호)

# 인권하루소식

## 96년 11월

### (제757호 - 제778호)